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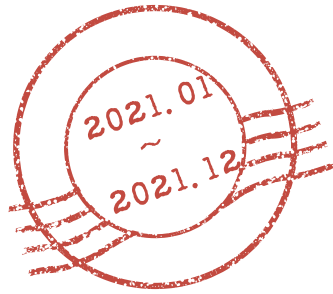
합본호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Contents

- p.04 제 8호 (2021.01~02)
국비 공모지원 사업을 통해 바라본 문화정책
- p.27 제 9호 (2021. 03 ~ 04)
문화예술과 세법
- p.50 제 10호 (2021. 05 ~ 06)
국립문화예술기관과 지역
- p.73 제 11호 (2021. 07 ~ 08)
문화자치와 문화분권
- p.96 제 12호 (2021. 09 ~ 10)
문화기관의 업무분담과 문화자치
- p.119 제 13호 (2021. 11 ~ 12)
문화공간에서 마주한 문화분권



[Editor's Letter]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한 2021년 문화정책이슈페이퍼는, "국비 공모지원 사업을 통해 바라본 문화정책", "문화예술과 세법", "국립문화예술기관과 지역", "문화자치와 문화분권", "문화기관의 업무분담과 문화자치", 그리고 "문화공간에서 마주한 문화분권"을 주제로 올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2020년에 진행된 국비 공모지원 사업을 돌아보며 국가 문화정책 전반을 되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국립 문화예술기관이 지역에서 의미하는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기관과 일상 속 문화공간에서 문화 분권이 필요한 이유에 이르기까지 '문화분권'에 대해 촘촘히 다루어보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문화정책이슈페이퍼는 아직 채워나가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분야의 예술가와 전문가의 고견을 통해, 부산을 비롯한 각 지역의 예술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부산지역 문화정책 플랫폼으로서, 문화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동향을 다루고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주생면(契酒生面)'

계모임에서 마시는 술로 생색을 낸다는 뜻으로, 껌돈을 거둬 술을 사면서 마치 자기가 사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을 빗댄 것이다. 여러 사람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생색냄을 이르는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문화 정책 구현이라는 생색을 내며 지역 공모사업에 문체부는 낮은 매칭비율로 지자체에는 높은 매칭비율을 요구한다. 문체부 지역문화 공모사업의 '계주생면' 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이념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유한 사업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지자체 매칭비율을 높여 공모 선정에 사활을 건 경쟁에 뛰어들다. 지역 간 경쟁을 역이용한 문체부는 공모사업에 지역의 높은 매칭비율을 전제로 사업 실행을 요구한다. 50(정부) : 50(지자체) 매칭비율은 기본이다. 문화재청의 시설 지원 경우는 30:70 비율로 지자체의 매칭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도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지자체 내 사정과 재원 갈등 요소가 존재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역 간 문화사업의 '빈익빈 부익부', '승자독식' 등 불필요한 지역 간 경쟁만 부추긴다는 현장의 지적과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체부 입장에서는 '공평성'과 '형평성'이라는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모가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강변할지 모르겠다. 지자체 역시 공모를 통한 국비 사업 유지라는 성과 자체는 환영한다. 다만, 지역문화정책의 전반적인 문체부 기조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명확하다. 사실 공모사업의 문제점은 지역 문화정책 자체가 국가가 생산하여 지역으로 공급하는 하향식이 되는데 큰 문제가 있다. 지자체는 주문자(문체부)가 원하는 제품(문화사업)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OEM(주문자제조 방식) 방식이 된 것이다.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문화 정책 전달방식이다. 지역 공모사업이 지역마다 문화 자원, 인프라, 거버넌스, 예산 및 정책이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한 접근보다는 문체부의 정책 효율성과 매칭비율 중심의 사업추진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즉, 예산 지원 방식이 생태계 조성보다는 단기 성과위주의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내 다양하고 자율적인 정책과 사업이 요원해 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기조에서 지역을 강조하고 있고 문체부도 지역문화국을 만드는 등 정책의 변화가 눈에 띈다. 예산 확보 및 제도 정비도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추는 듯하다. 아쉬운 점은 공모 사업을 통한 지역 분배를 문체부는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국가주의적인 방식 역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문체부내 지역문화국이 설치되었지만 사업의 방식은 여전히 각 국별로 산하기관을 만들어 각자 사업을 지역에 내리는 통로로 사용하거나 지역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 하고 있다. 산하기관과 지역에는 자율성이 약해지며, 기관 간,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지역 문화현장에서는 그동안 '지역 간 줄 세우기 경쟁에서 협력과 공진(供進)의 지역문화 만들기'를 위해 끊임없이 정책 제안을 해왔다. 그 핵심은 지역 공모방식이 아닌 별도의 지역 포괄적 보조, 지역문화기금을 조성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들이었다. 지역문화 정책의 근간인 지역문화 분권은 지역문화 예산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 사업 운영이 전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며, 격차 사회에 대한 빨간불이 켜졌다. 문화는 사회와 지역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가 지역 간 재정 격차와 경쟁으로 인해 양극화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문화기본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위반 하는 것이다. 문체부의 지역문화정책 기조는 경쟁에서 공생과 협력의 지역문화 공진(供進)방안으로 변해야 한다. 국가의 지역 문화재정 확충과 지역의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가 지역

문화 진흥의 핵심 전제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국가 문화 정책 사업을 지자체 위탁 시 예산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보조 형식으로 교부 내지는 지역문화재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상의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조항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해야 한다'의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문체부의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는 지역문화재단 대상의 직접 공모사업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거나, 역으로 지역문화 공모사업의 지자체 대비 중앙정부 매칭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국가의 다른 정책은 몰라도 최소한 지역 문화 정책과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의 '계주생면'을 보고 싶다.

01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
이를 네 가지로 정의하면 이렇다.

첫 번째, 공공미술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요구에 공공적 가치를 지닌 미술로 부응하는 방법이다. 이는 공공공간에 미적 가치가 있는 오브제를 들여다 놓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술을 매개로 어떻게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동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예술가들의 고민이 공공의 주체인 시민에 의해 승화되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포박한다.

두 번째, 공공미술은 지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명확한 태도 아래 공동체에 주목하고 특정한 문제와 사안,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경험을 다룬다.(그곳(장소)에서 행해지는 예술은 당연히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할뿐더러,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무엇이 될 때 가장 이상적인 공공미술로 평가된다.) 따라서 공공미술은 심미적 안위가 아닌, 미술을 언어로 한 메시지이자 또 다른 방식의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세 번째, 공공미술은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와 현상에 대한 예술가의 개입과 예술적 실천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주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통과 참여, 교감은 필수적이다. 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경계를 벗어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작가와 시민이 함께 ‘사회적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발전하면 우리가 공공미술에서 흔히 말하는 ‘공공성의 실현’이 된다.

네 번째, 공공성의 실현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문화적 근거 아래 구성원 전체의 기억과 쟁점, 삶의 맥락을 수용해 새로운 모더니티(Modernity)를 창출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그러기 위해선 공론의 과정이 요구되고, 이는 수잔 레이시(Suzanne Lacy)가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에서 언급한 미술의 사회적 성찰과 공공의 실제적 참여, 미술을 통한 탈근대적 공론과 결이 같다.

02

한국에서의 공공미술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관 주도형이 많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0.7% 이하를 반드시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민간 건축주들도 예외는 아니다. 싫든 좋은 미술품을 설치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에 억지로 예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이 기이한 제도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당시 권장사항으로 출발해, 1995년 의무화됐다. 작가들의 생존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고 해결,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과 도시환경 개선을 구실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이 제도로 인해 지역마다 도시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조형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홍물의 주범이다.(결국 논란 끝에 이전하게 된 세종청사 ‘저승사자’ 조형물 <신명나는 우리가락>을 생각하면 쉽다.) 작가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시효를 다한, 공공미술의 의미를 왜곡하는 ‘악법’으로 꼽힌다.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국민세금이 남용되는 공공미술은 지자체에서도 흔하다. ‘지역 상징 조형물’도 그 중 하나이다.

지역 상징 조형물은 건축물미술작품제도와는 상관없다. 반드시 설치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상징 조형물 건립에 혈안인 데에는 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성과주의와 근거 없는 경제진흥 낙관론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프라 구축 없이 조형물만 세우면 관광·홍보·경제 활성화가 절로 될 거라 믿는다는 것이다. 눈에 띄니 뭔가 그럴싸하게도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관심의 대상으로 남는다. 2016년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운 경북 군위군의 ‘대추화장실’이나 강원도 고성군의 15억 원짜리 ‘항아리 조형물 겸 건축물’, 밥도 못 짓는 괴산군의 ‘대형 무쇠 솥’(약 5억 원), 서울 삼성동의 ‘싸이 말춤 조형물’(4억 원), 성의 상품화라는 논란에 휩싸인 강원 인제군 소양강 둔치의 황금 ‘마릴린 먼로 동상’(5500만 원) 등이 주요 사례이다.

이 밖에도 인천의 ‘새우 타워’(10억 원), 전북 고창군의 ‘주꾸미 미끄럼틀’(약 5억 원) 등도 예외는 아니다. 모두 내 돈이라면 저랬을까 싶은, 공공미술을 빙자해 혈세를 낭비하는 ‘악명’ 자자한 것들이다.

최근 '악명'을 떨치고 있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중에는 정부 사업도 있다.

바로 문체부와 전국 228개 지자체가 함께 진행 중인 '우리 동네 미술'이다. 세금만 무려 약 1000억 원이 사용됐다. 사업 종료는 올해 2월이다.(2월 현재 종료 예정이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5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문체부가 지난해 7월(문체부는 5월부터 준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건 내부적인 단계일 뿐 공표는 그 이후이다.)부터 '예술 뉴딜'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우리 동네 미술'은 공공미술에 대한 몰이해와 행정중심의 성과에만 치중한 '정부 공식 졸속 프로젝트'이다. 공공미술에 있어 문제시 되는 부분만을 골라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탓이다.

실제 '우리 동네 미술'은 공공미술이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전시되는 미술과 무엇이 어떻게 왜 달라야만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간, 사람 간에 놓인 경계를 허물고 단절을 연결로, 불평등을 평등으로 갈등을 화합으로 만드는 힘을 지닌 것이 공공미술이지만, '우리 동네 미술'이 드러낸 현실은 그 반대다. 지역 예술인 및 지자체 간 갈등과 불화, 반목이 드물지 않다. 내용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온 사방에 페인트로 칠하거나 조각하기 짝이 없는 조형물을 얹으며 공간조성이란 미명 아래 행해지는 예술가들의 인테리어 업자 흥내가 전부이다.

특히 '우리 동네 미술'엔 앞서 언급한 공공미술의 네 가지 정의, 즉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율적·주체적으로 참여 및 발언할 수 있도록 미적 매개가 되어야 할 공공미술의 본령은 들어있지 않다. 대신 국비 집행 기간이나 따지는 행정 중심의 정부와 각 시군 및 구청에서 해야 할 '환경미화' 혹은 '시설물 개선'을 공공미술로 여긴 채 호수와 공원, 해변에 수준 낮은 동식물형상을 세워 놓기 바쁜 예술인이 놓여 있다. 이들은 공공미술이 뭔지도 모른 채 지금도 관광인프라 조성을 명분으로 포토 존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1) '우리 동네 미술'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른바 '예술 뉴딜'이다. 총예산은 국비와 지자체 매칭 포함 약 1000억 원이다. 시군별 약 4억 원이 할당됐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로 계획되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5월로 연기됐다.

코로나19로 힘든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동네 미술'은 지나치게 서두른 감이 있다.

일례로 본래 10억 원대였던 예산은 지난해 6월 추경으로 700억 원대로 대폭 증액 편성되었고, 두어 달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의 과정도 속전속결²⁾이었다. 그러다 보니 공공의 요구에 공공적 가치를 지닌 미술로 부응하는 방법은 애초 존재할 수가 없었다. 참여 희망 예술인들은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 정서를 반영한 공공성과 장소성,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에 관한 연구조차 불가능했다. 공공의 장에서 미술을 매개로 대중과 현대미술, 시대적 사안에 대해 논하는 건 그야말로 언감생심.

부족한 시간은 터무니없는 기획안(제안서)을 양산했다. 비교적 빠르고 손쉬운 동상을 비롯한 조약하고 장식적인 조형물을 세우거나 벽화를 그리며, 단순한 대중적 유희에 초점을 맞춘 '유원지형' 프로그램이 그렇다. 물론 일부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있다. 하지만 주민을 주체로 한 참여형 기획이라기 보단 예술인들에 의한 계도성 작업으로 변질된 것들이 훨씬 많다. 대부분 공공미술의 핵심인 '주민에 의한 이슈 발굴 및 새로운 모더니티 생성'은 기대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³⁾

이런 상황은 인프라 열악한 시군 단위에 이르면 더욱 안 좋다. 이에 일부에선 심의 위원을 겸한 자문위원을 공모하는 등, 수준 제고를 위한 나름의 방법을 고민했다. 문체부도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자문을 구했다. 그러나 실효성은 약했다. 정작 공공미술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쟁구조의 지자체 응모방식을 꺼려했고, 누가 공공미술 전문가인지 구분 못하는 지자체에선 공공미술과 무관한 지역 인사나 외부인들을 선착순으로 앉혔다. 개중엔 공공미술 관련 이력 없는 지역 작가나 인터넷 정보업체의 대표도 있다.

문체부의 전문가 자문도 형식에 그쳤다. 지자체 사업들을 시도별 구분하여 열람케 했지만 자문의견이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불명확했다. 더구나 이미 대부분 자문 시기를 놓쳐 의견 자체가 의미 없는 경우도 흔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사업종료시한을 앞두고 있다.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며 근사한 예술가 일자리를 꿈꿨던 '우리 동네 미술'은 질서 없이 우왕좌왕하다 논란만 남긴 채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

2) 일례로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작가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1-2주 남짓 한 시간에 기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공모와 접수 기간을 합쳐도 1주일도 채 되지 않는 지자체도 많았다. 주관 기관 또한 기획안 작성부터 교부 신청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 내 끝내야 했다. 전체 사업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이지만, 정산기간을 제외한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3개월 남짓에 머문다.

3) 작가들은 사업자체를 그저 일회성 공공근로용으로 여겼고, 공공의 주체인 시민들은 배제됐다. 프로젝트를 떠맡은 지자체 주관 기관들은 갑작스러운 하달식 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했다. 6개월 내 사업을 마무리해야만 하기에 어지간하면 그냥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명연자살하기도 했다.

미술을 통한 사회적 이슈에의 개입과 탈근대적 공론화, 새로운 모더니티의 창출은 '건축물미술작품제도' 및 혈안이 되어 추진하는 지자체의 '상징조형물', 문체부의 '우리 동네 미술'에서 드러난 결과인 조형물 홍수에 비하면 무척이나 까다롭다.

사람마다 미적 가치 기준이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작가주의 관점과 공공성의 절충 역시 완만해야 하므로 일정한 성과로까지 이리진다는 건 생각보다 지난한 일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인해 동시대 공공미술의 가치는 더욱 빛날 수 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술적 철학과 감수성을 발견토록 하는 문화적 창 혹은 무대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데다 상상력의 확장 및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상상력과 사고의 지평 확장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생성한다. 보다 기쁜 미래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만든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공공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루하다. 기껏해야 '건축 속의 미술'과 '공공공간 속의 미술'로 이해한다. 여기저기 조각 작품을 세우거나 수용자들이 조각 작품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 또는 붓을 쥐고선 시민들이 예술가와 같이 벽화를 그리면 그것이 곧 공공미술이요 지역 문화공동체의 예술적 실현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작업을 공공 공간으로 옮기는 것을 공공미술로 오해하는 작가들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공공미술은 보편적 미적 질서나 전체로서의 공중이 아닌 살아있는 수많은 다른 공중과 그들의 다른 감수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공공미술과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고 개입하여 유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공공미술의 방향이다. 적어도 '우리 동네 미술'처럼 개념 없이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사업은 공공 미술이 아니다. 지향점과 방향, 성과 면에서 아무 상관없다.

어쨌든 곧 결과물 공개를 목전에 둔 '우리 동네 미술'. 단언컨대 코로나19로 인해 시급했던 상황을 애써 고려하더라도 머릿수 채우기에 급급한 근시안적이고 급조된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시민과 예술인들에게 별 도움도 주지 못한 채 지역 미술인들 간의 갈등과 반목, '조형물 천국'과 같이 긍정적인 것보단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강한 역대 최고의 예술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러니하게도 역대 최고의 기념비적 졸속 프로젝트로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

4) 건축 속의 미술과 공공 공간 속의 미술은 좋게 말해 '건축물 및 공간에 미술을 효과적으로 대입하는 방법'이지만, 거칠게 표현하면 건축물과 공공 공간을 위한 미술의 도구화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건축물과 특정 공간을 '장식'한다는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ISSUE 2

이슈2

딜레마를 넘어 -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돌아보며

송 교 성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지식공유실장

문화예술인들에게 공공기관의 공모를 통한 지원사업(이하 공모사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림자 같다. 연말이 되어 사업결과를 정리하고, 정산업무를 하다보면 '다시는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겠다.'라며 한숨을 쉬지만, 신년이 되고 활동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모사업을 찾아보게 된다. 관련 지원 제도나 기반이 열악하고 민간의 후원이나 유통구조 등 전반적인 생태계가 취약하다보니 적은 지원금의 공모사업도 무시하기 힘들다.

그동안 공모사업이 예술의 창작과 매개, 향유를 지원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때때로 독이 되는 약으로 작용해왔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다. 대체로 심사나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지역·장르·분야·세대 등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공모사업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상상력이 제한받거나, 혹은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정작 본연의 활동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온다. 그렇다고 한정된 공적 재원을 별도의 기준 없이 분배하거나, 행정 체계 없이 집행도 어렵다. 공모사업의 딜레마다.

민간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나 문화재단과 같은 공공기관도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민간의 공모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지자체 대상의 공모사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지역불균형 속에서 국비 공모사업 유치에 의해 지자체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되거나, 이른바 '따고 보자'는 식의 접근으로 인하여 공모사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거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도 지역 곳곳에서 드러난다.

최근 지자체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통해 국비 공모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지정된 도시들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단계이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 계획된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펼쳐내지 못하는 등 문화도시 사업의 내용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2018년부터 시작된 공모 추진계획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그 윤곽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있기 때문에 심사의 형식이나 과정 등 공모방식 자체는 짚어볼 수 있다.

IS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비전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한 정책목표를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사회 혁신 제고”¹⁾로 설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30개의 문화도시를 목표로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지방비 포함 최대 200억)의 예산이 지원된다.

문화도시는 2년에 걸쳐 심사가 진행된다. 우선 지자체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현장실사와 발표 등을 거쳐 예비문화도시를 선정한다.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1년간의 예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 등을 통해 수정 보완된 최종적인 계획안을 발표함으로써 최종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1)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2018년 첫 문화도시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2곳의 문화도시(1~2차)와 10곳의 예비문화도시(3차)가 지정되었다. 경쟁률을 살펴보면 1차 문화도시는 총 19개 지자체가 신청, 7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2차 문화도시는 총 25개 지자체가 신청, 5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3차의 경우 41곳이 신청하였고, 현재 10곳이 예비도시로 선정된 상황이다. 경쟁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떨어진 지자체의 재공모를 감안한다면 마지막 4차 문화도시의 경쟁률은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 국제신문은 부산진·수영·북·금정구 등 부산 내에서도 신청하는 지자체가 많을 것으로 보도하였다.

문화도시는 많은 장점과 강점을 지닌 공모사업이다.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관점의 변화를 이끌면서 지역 현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화도시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의 강화, 문화적 공동체의 활성화, 문화적 도시재생 등 문화를 통한 도시 발전에 중점을 둔다. 각 지자체는 자연스럽게 지역의 고유한 특성, 시민의 참여와 민관 거버넌스의 형성, 도시 전반에 걸친 문화적 활력의 재고 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기존의 국비 공모사업이 가지는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 예컨대 대규모 국비사업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하향식의 관 주도형 계획수립이 아닌 민간 주도가 강조된다. 담당 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의 문화적 주체, 유관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상향식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도시재생, 교육, 복지 등 문화와 관계되는 유관부서와의 칸막이를 허물고, 도시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적인 민관 협치가 중요한 것이다.

한편으로 대부분의 국비 공모사업에서 나타나는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역의 사정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사업방향과 방식, 내용이 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때이다. 그런데 문화도시의 경우 2년에 걸친 다양한 방식의 심사과정과 민간 전문가들에 의한 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게끔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 이외에도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 점도 문화도시 공모방식의 강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과 강점들이 때때로 딜레마처럼 공모과정 속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보기 드물게 상당히 큰 예산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는 매력이크다보니 지역 간에 과도하게 경쟁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을 여러 곳에 나눠주기보다는 집중해서 실효성 있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서울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예산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문화도시는 지역이 피하기 어려운 필연적인 선택지다.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환경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문화도시 선정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공모사업 자체가 2022년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함을 넘어 과열되는 양상이다.

2년에 걸친 오랜 심사기간과 컨설팅, 예비사업 또한 장점이면서 동시에 지역 현장에 상당한 부담이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다 보니 오히려 현장의 특성이 제한된다는 의견도 더러 나타난다.

한 편, 계획수립이나 추진기구의 설치, 예비도시사업을 통해 지역에 내재된 문화적 가치를 끌어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기도 하지만, 수 천 만원에서 몇 억에 이르는 사업비용을 온전히 지자체가 감당해야 해서, 선정에 대한 부담감은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도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받는 압박감이 높다. 연말 심사 시기에 이르면 SNS에 담당자들의 넋두리와 긴장감이 여기저기서 전해진다. 탈락한 지역에 ‘과정 자체가 문화도시입니다.’라고 위로 하기에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출혈이 상당하다.

한편, 기초지자체가 신청단위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타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 사업이 전개될 때는 기초 단위의 행정구역이 큰 의미를 가지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융복합과 네트워크가 강조되면서 문화예술 사업의 범위도 광역화 되고, 예술가의 교류나 주요 장소 활용 등 인접한 지역 간의 협력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의 기획과 조정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 문화도시 공모과정 속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제한적이거나 예산 매칭 정도의 보조적 지원에 불과하다. 거시적으로 보면 지역 분권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이미 공모단계가 막바지에 이른 현 시점에서 변화는 사실상 어렵지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계속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 개선방안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예컨대 광역자치단체가 조정 역할과 일정 정도의 예산을 보조하면서 2~3개의 기초 지자체가 연계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예비문화도시를 광역단위에서 선정하면서 경쟁 구도를 다소 완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향도 모색할 수 있다. 나아가 중앙정부는 포괄적으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광역자치단체로 문화도시 지정 권한과 예산을 이관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까지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의 진일 보한 방식을 보여주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향후 공모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평가를 통해 국비 공모사업의 좋은 모델 정립을 기대해본다.

SUE

지난해 9월 부산문화재단은 ‘아트 체인지 업’(Art Change UP) 사업 참여 예술가를 공모했다. 이 사업은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3차 추경 예산에서 확보한 1천569억원 가운데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에 149억원을 배정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추진한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하나였다.

· ‘첫 단추’가 문제다

일단 여기서 잠시 멈춰보자.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 19’ 사태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영역은 공연예술 분야다. 그런데 어째서 3차 추경 예산에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비율이 저렇게 낮을까. 그런 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미술 분야에는 어째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3차 추경 예산의 절반이 넘는 거액을 투입했을까.

사업 시기도 문제다. 공연예술인들에게 이 사업은 ‘긴급 재난 지원금’ 성격을 띤다. 그렇다면 정책 결정과 예산 확보가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됐어야 한다. 지난해 2월부터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공공 공연장이 폐쇄되고, 민간 공연장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정부는 공연장 폐쇄를 강행하고 그 대안으로 온라인 예술활동을 독려하면서도, 실질적인 활동 지원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지 않겠다.

게다가 일정도 문제다. 사업 출발이 늦은 데 비해, 사업 실행 일정은 촉박했다. 부산문화재단의 경우 9월 16일에 공모를 마감했는데, 사업 결과물은 중앙정부의 행정



일정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만 했다. 공모 심사 결과가 9월 말에서 10월 중순(<콘텐츠> 유형의 추가 공모 결과는 11월 10일 경)에 발표됐으므로 실제 지원자들의 작업 기간은 석 달 이하였다. 작업 기간을 1년으로, 또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제공하는 것이 ‘상식’ 수준에서 바람직했을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은 첫 단추부터 삐걱거렸다. 부족한 예산 책정, 늦은 지원 결정, 촉박한 사업 일정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규모와 사업 일정이 이렇듯 미리 다 정해진 상황에서 지역 문화재단의 ‘자율성’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겠나.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역정부에 필요한 문화 관련 예산을 ‘통’으로 지원하고, 이에 맞춰 지역 문화재단들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총평은 긍정적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문화재단은 총 7억 4200만 원으로 ‘아트 체인지 업’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내용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콘텐츠형에 2억 5000만 원, 예술 작품형 2억 원, 온라인 커뮤니티형 1억 2000만 원, 웹 다큐·웹 드라마 제작형 1억 2000만 원, 자율 제안형 5200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심사를 거쳐 총 168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영상 결과물을 놓고 ‘총평’을 말하자면 대체로 긍정적이다. 솔직히 결과물이 모두 좋았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지원 팀(개인)에 따라 영상 퀄리티의 편차가 컸다. 한 단체가 무리하게 여러 가지 유형에 복수 지원한 나머지 결과물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기존의 내용을 중복(자기인용)하며 시간만 채운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메이킹 영상’이란 이유로 너무나 거칠게, 성의 없이 제작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원 사업의 취지가 ‘긴급 재난 지원’ 성격이 강하고, 앞으로 온라인화를 준비하는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본다. 대다수 결과물에서 의미 있는 시도와 성과를 보여줬다

고 판단된다. 다만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먼저, 클래식 분야다. 어떤 면에서는 청년문화 분야보다 클래식 분야가 한층 더 영상 매체에 알맞게, 성실하게 작업했다는 인상을 준다.

오페라 관련 콘텐츠도 좋았다. 또 부산음악협회는 앞서 코로나 사태를 맞아 클래식 악기 연주자들이 1인 영상 연주를 선사하는 ‘데카메론 프로젝트’를 이미 자발적으로 실행한 바 있는데, 이번 문화재단 지원으로 만든 영상제작 교육 강좌는 클래식 대중화를 위한 영상화 작업의 기초로서 가치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적 가능성의 관점에서 참신한 시도를 보여준 사례로는 <예술은공유다> 팀이 있다. 실시간 스트리밍 연극 ‘SELF PORTRAIT’, 또 광안리 바다를 무대로 실경 연극 ‘모비딕’을 선보인 <예술은공유다> 팀은 단순히 공연 촬영 영상물이 아닌,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한다. 부산 문화계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예술활동은 단지 기존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이란 사실을 확인하게 해준다.



·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 10월 부산문화재단이 주최한 ‘문화정책 열린 포럼’에서 온라인 문화 활성화에 관해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영상 관련 기관 협업 체계 구축’, ‘문화예술 영상 콘텐츠 공유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예술인 대상 영상제작·유통 교육 시스템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영상 관련 기관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해서는 지난 호 이슈페이퍼의 좌담회가 보여준 것처럼 생산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 주제에 관해서는 나머지 두 가지 정책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먼저 필자는 지원 선정 사업의 결과물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목요연하게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통합 플랫폼이 구축돼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문화재단 지원을 받은 사업 결과물을 누구나 한 눈에 볼 수 있을 때, 사업 지원자들은 서로를 평가하고 자극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더구나 시민들의 평가도 기다린다).

통합 플랫폼은 이처럼 문화재단 관점에서는 아카이빙 차원에서 의미가 크고, 예술인 관점에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시민 관점에서는 지역 예술 콘텐츠를 가깝게 만날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결과물의 질적 편차를 놓고 보면 ‘예술인 대상 영상 제작·유통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시스템(가령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등)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한편 부산음악협회가 시도하는 것처럼 예술 장르별로 특화된 영상제작·유통 교육 시스템을 구성,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예술 대중화와 예술 진흥을 함께 기대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새로운 에듀-테크 산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정부의 공연장 폐쇄 명령에 따라 촉발된 ‘궁여지책’으로 출발한 면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은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더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 점에서 정부와 부산시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 육성해주시기를 바란다.

현 단계는 지원·육성 단계다. 말하자면 아직은 실험과 도전을 거듭하며 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단계이지, 완성도 높은 완제품을 수확할 단계는 아니다. 영국예술위원회는 2012년부터 ‘디지털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술인과 영상기술 인력의 협업을 지원 육성했고, 이제 그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의 IT 환경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 부산 지역은 다른 도시에 비해 영상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장점을 살리면, 차별화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아트 체인지 업’ 사업이 시급한 성격의 지원 사업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업에 ‘자부담금’ 제도를 적용했다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이제 효율성이 낮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자부담 제도는 폐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이어지던 2020년 9월 중순 부산 중구 40계단 테마거리에서는 모처럼 거리공연이 열렸다. 부산 원도심 문화회복프로젝트 ‘오픈 더 도어, 오픈 더 아트’라는 이름으로 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지역의 여러 문화예술 단체들이 연대하여 주관한 ‘2020년 신나는 예술여행’의 일환이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가 열리기까지의 우여곡절이야 이루 헤아리기 힘들정도였지만, 이전까지는 주변 직장인들의 평일 점심시간에 맞춰 수시로 열리던 다양한 버스킹 들이 모두 중단된 후 실로 오랜만이었고, 비록 ‘사회적 거리’를 두고 열린 공연이었지만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해마지 않았다. 어느 뮤지션의 잔잔한 노래가 다음곡으로 이어지기 전 자신을 나직이 소개하며, ‘사실 오늘이 올해의 첫 공연이며 너무나 무대가 그리웠노라’ 전했다. 가을로 접어들어 9월에야 처음으로 무대에 서게 된 공연자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갑자기 덮친 위기상황은 모두를 혼란에 빠트렸다. 공연장과 전시장은 폐쇄되고 축제와 강연, 아트페어, 비엔날레까지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다. 눈부신 기술의 발전이 무색하게도 물리적인 이동은 오히려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이라는 낯선 단어들에 자신의 생각과 몸을 억지되라도 구겨넣어서 맞추어갈 수 있음을 증명해야 얼마간의 보조금이라도 받고, 그마저도 사업비 반납을 권유받는 일이 예사로 행해졌다. 사회적 안전망에 예술가들이 얼마나 배제되어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나 버렸다.

매서운 추위속 광화문 광장에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중심으로 예술가들의 ‘블랙리스트 국가 책임이행 촉구 릴레이 1인 시위’가 석달째 이어지고 있다. 적폐청산 임무를 안고 출범한 현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인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와 문화행정체계 혁신이라는 약속은 허공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 기관의 수장인 신임 문체부장관의 취임사에도 책임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현재의 문화예술정책들과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할 당시의 문화예술정책과 과연 그 뿌리가 달라졌다 할 수 있는가. 블랙리스트사건 당시 문체부는 문화예술민간단체 보조금TF를 통해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스크리닝하고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보조금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문화예술 분야에만 한정된 방식이었을까? 교육, 노동, 언론 등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음에도 문화예술로 축소하고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블랙리스트사건의 피해예술가들을 위한 피해 보상은 커녕 일부에서는 현 정권의 화이트리스트로 몰아가고 있는 민기 힘든 현실이다.

표현의 자유와 예술노동권, 성평등 환경조성 등 세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술인복지법에서 정의한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실제 예술인활동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의 성격과 기간을 증명해내어야만 한다. 그러나 커뮤니티 아트(Community-based arts), 소셜아트(Social Art) 등으로 명명되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 효과에 집중하는 예술활동유형의 변화들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뿐만 아니라 예술이 실현되고 발표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화예술관련노동자, 기획자, 스태프 등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장르구분을 통한 예술활동증명 방식은 예술노동권, 생존권과 부합되며 또 다른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위기는 각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준다. 인간, 사회, 환경과 그 관계에 대한 질문, 사회위기와 변화에 대응하는 예술가의 자세와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질문 등등,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축에 어떻게 몸을 실어 균형을 다시 잡아낼 것인가의 질문들이 번져간다. 철석같이 믿어온 견고한 제도와 방법론들이 곳곳에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정체된 사회가 던지지 못하는 질문들을 언제나 예술은 던져왔고, 물질이나 결과 중심으로 향해가는 사회를 과정과 가치의 방향으로 돌리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아마도 집단면역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위축된 일상을 보내게 될 것 같다. 아니 그 이후에도 이전으로는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집, 가족, 지역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일상의 소중함이 간절히 다가오게 되었다고들 한다. 이는 위기이전 이미 여러 가지 예술적 실천을 통해 발견된 가치들에 이제야 귀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발전’이라는 신화를 떠받들고 사는 사회 곳곳에서 소통을 통한 연대를 실천해온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 아니 생존권이라도 우선 보장되어지길 간절히 바래본다.



다섯 이상은 안된다고 해서 조심스레 만든 자리였다. 넷이 앉아 쌓인 이야기 타래를 풀어나는 것도 잠시, 그마저 밤9시가 되자 누구랄 것 없이 하던 말을 멈추고 주섬주섬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치 마법이 풀릴까봐 서두르는 신데렐라처럼 부랴부랴 자리를 파하고 나오니 거리에는 택시를 잡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로 붐볐다. ‘아, 다시 통금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묘한 기분이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고 있다. 일상의 시간들이 쌓이면서 잠시 겪고 지나갈 상황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삶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멈추고 기다리던 공연이 취소되고 어울릴 축제가 사라지고 동네의 문화예술 강좌가 문을 닫았을 때, 일상 속에서 누리던 즐거움이 사라진 자리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소외와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활동이 ‘멈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으로서 전환을 통해 더 촘촘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새해도 되고 했으니 몇 가지 바람을 품어 보자면, 시민들의 삶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이면 좋겠다. 지역의 예술가를 활용하고, 지역의 자원을 엮어내는 방식, 지역의 예술인들이 지역의 문화를 활용해 지역민을 엮고, 큰 공간을 찾아 멀리 가지 않아도 동네마다 작은 문화공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지역을 풍성하게 하는 일상의 만남이면 좋겠다. 소규모가 모이는 예술 활동, 개인과 개인이 직접 마주하는 경험이야말로 문화의 토대를 다지는 전환이 될 것이다. 이 전환에서도

하나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를 확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동호회와 커뮤니티예술,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네트워크를 넓게 많이 지원하면 좋겠다.

얼마 전 그림책 작가 10명이 준비한 ‘일상의 예술, 그림책 전 Picturebook: play and link’을 온라인 전시로 즐겼다. 늘 새로운 연결을 모색해 온 작가들이 영상, 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한 전시회였는데 온라인 이어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다양한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풍부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모두에게 공평할까?

재난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말처럼 재난 상황에서 소외와 단절의 경험도 다르게 다가간다. ‘모든 시민은 문화 창조의 주체로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문화권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동체를 지탱하는 문화 가치는 사람과 생명의 존중, 상생과 환대의 정신, 타자에 대한 배려와 선의, 공정성과 관용, 공공선의 추구, 자연과의 상생이다. 재난의 상황을 겪으면서 더 소외되고 더 배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새로운 접근도 잊지 않아야겠다.

제 아무리 코로나라도 봄이 오는 것을 어찌지는 못한다. 바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도 온기를 돌게 할 문화예술의 힘을 기대한다.

들어가기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 연구’는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지난해 진행한 총 3건의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전개과정 정리, 부산지역 주요 예술창작공간의 운영 현황 분석,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미래적 전망모색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술창작공간은 명확한 정의 없이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물리적인 공간과 프로그램 개념인 레지던시의 개념조차도 모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창작공간을 ‘기간의 정함을 두고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창작 및 교류, 교육 등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기로 하고, 사회적 효과 측면에서 예술을 통해 개인, 예술가의 상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기능에 주목하기로 한다.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9개 곳



선행된 ‘2015년 부산광역시 예술창작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창작공간은 총 60개소이나, 본 연구에서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문화재단의 레지던시 사업에 참여하는 공간 9개소(또따또가, 감만창의문화촌, 홍티아트센터, 반딧불이 창작공간, ARTinNature, 오픈스페이스 배, 춤공간 Shin, 재미난 복수, 예술지구P)를 중심으로 분석기준(공간 기초현황조사, 공간별 프로그램 분류, 공간별 상세 조사 내용)에 따른 현황파악을 진행하였다.

이곳들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기반은 하지만 공공(부산문화재단)과 민간(단체)이라는 운영주체의 다름과 다양한 환경과 시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 등 비슷한 듯 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구분되는 몇 가지로 지역 중심의 운영이거나 혹은 반대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방법, 최대 3년에서 최소 2주라는 다양한 장·중·단기 입주기간, 한 가지 특화된 장르이거나 아님 여러 장르가 함께 협업하는 곳까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편차가 다양하였고 공간별 각자의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설문조사로 본 사회적 효과



입주자가, 공간운영자,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당연하면서도 흥미로운 부분은 예술가가 예술창작공간에 입주한 주요이유는 경제적인 이유(28.9%)와 창작여건에 대한 이유(21.1%)가 가장 크고 기능으로는 예술가들에게 물리적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는 점(76%)이다. 예술가들과 창작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강조해서 재확인 시켜준 결과로 보인다. 또한 예술창작공간의 기대 효과 역시 예술가 활동영역의 확장(3.25점/4점기준)이 가장 높았으며, 운영 측면에서는 효율성·전문성·안정성·지속가능성은 문화재단 등 공공문화기관, 자율성은 입주예술가 및 운영위에서 자율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공공예술창작공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1순위가 입주예술가 창작 준비금 제공(29.1%), 민간예술창작공간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27.3%)으로 대부분 예산지원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과제



본 연구를 통해 정책적 개선방향으로는 ① 각 공간별 특화된 목적을 명확하게 수립(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지역민 매개인력, 지역리서치 및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 개발, 창작활동 외 창업에 필요한 공유 프로그램 등) ② 운영의 전문성(전문 매개인력의 필요성, 시설 전문 관리 인력 및 전문 테크니션)과 자율성 확보(입주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기회 확보) ③ 지원 행정체계 개선(입주기간의 다양화 및 창작 활동 지원중심, 과정중심의 평가, 공간과 프로그램 지원의 이원화, 앵커시설 및 지원 센터 운영, 플랫폼 구축) ④ 새로운 형태의 예술창작공간 개발 및 운영(특정 세대 및 계층타겟, Lab형 창작공간, 특정시설 활용한 주제 특화형 레지던시)이 도출되었다.

나가기



이번 조사가 부산지역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예술창작공간의 녹록치 않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유지해온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또따또가 입주예술가는 자발적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가 집적효과를 발생하며 능동적으로 자립의 힘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물론 경제시장의 논리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에도 함께 노출된다.), 오픈스페이스 배는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나 비물리적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각자의 한계점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 노력해 왔다. 이 외의 공간들도 각각 고유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특색으로 차별화를 가지려 노력 중이다. 사회적 효과성이 단순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수나 시민 참여도가 아닌 각 공간별 네트워크, 지역 문화거점으로서의 역할 등 입체적 판단이 필요 하다면 이들 공간마다 가지는 다양한 기회의 제공은 지역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기여하고 있지 않을까. 향후 조례에 기반하여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다양성을 헤치기 않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계속해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URL 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재단자료) <http://e-archive.bscf.or.kr>

1~2월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복권기금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01.25.)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문화·여행·체육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분야 4개 공공기관, 윤리·인권 공동선언식 개최(01.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7일, 문화분야 공공기관 세 곳과 손잡고 윤리·인권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2021 콘텐츠 투자 비대면 컨퍼런스」 개최(01.07.)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1월 12일 경남지역 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1회 '2021 콘텐츠 투자 비대면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광주문화재단

'광주의 기억과 역사' 책으로 만나다(01.04.)

광주의 문화자원을 새롭게 기억하고 소개하는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대구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싱크탱크로서의 새로운 시동(01.12.)

대구문화재단(대표 이승익)은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계와 예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치고자 행정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에 앞장!!(01.20.)

대전문화재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안내 및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뉴택트 TF팀 신설, <B-바빠롤라> 프로젝트 본격 추진(02.08.)

부산문화재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난 2월 1일 문화재단 중 전국 최초로 온라인 사업을 전담할 뉴택트 TF팀을 신설하여 [B-바빠롤라]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 문화판의 알쓸신잡을 알려드립니다(02.16.)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는 [부산광역시 문화지표 조사] 등 2020년 수행한 연구보고서 2종을 발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본격 지원(01.07.)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2차 문화도시로 ▲ 인천 부평구, ▲ 강원 춘천시, ▲ 강원 강릉시, ▲ 전북 완주군, ▲ 경남 김해시 총 5곳을 지정하고 2021년 새해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한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선도한다(02.01.)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 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번호 편집회의에서는 부산지역 어느 폐조선소의 문화 공간 전환 실패담으로 시작해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제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통 키워드로 '세법'을 꼽았고, 문화예술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칼럼>과 <이슈 1,2,3>에서는 회계사, 민간기업 문화전문가, 학예연구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법 이야기들로 구성하였고, <예술+(더하기)>에서는 '고용'과 연결 지어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아보려 하였습니다. 마지막장에서는 외부에서 바라본 부산문화재단 연구보고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덧붙여 발간일 즈음하여 부산은 이미 벚꽃엔딩한 봄날이지만 계절의 변화로 잠시나마 화사한 기운을 모두가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Contents

- p.29 **칼럼**
[문화예술과 세법]
김소영(한미법인회계 회계사)
- p.32 **이슈1**
[폐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 영도 거청 조선소 사례를 중심으로]
홍순연(삼진이음 이사)
- p.36 **이슈2**
[면세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된 사업자가 아니다]
배일성(서원회계법인 회계사)
- p.40 **이슈3**
[미술의 미래가치를 위한 두 가지 주문]
정중호(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 p.43 **예술+고용**
[부산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 현장
: 근로계약서에 담기지 않는 욕망과 아쉬움]
우동준(생각하는 바다 매니저)
- p.45 **정책보고서 갈무리**
[2020 부산광역시 문화지표를 손에 들고]
이수진(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조교수)
- p.48 **3~4월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세법은 어렵다. 힘들게 공부하고 연구하여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들춰보면 개정되어 있다. 게다가 불친절하다. 분명히 한글을 읽고 있는데, 문장이 끝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필자는 회계와 세무를 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데, 일반 납세의무자, 그리고 예술인에게는 오죽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세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진화(?)되어 왔다. 이미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사업자로서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꼭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같은 지출증명 서류나 원천세 신고·납부 등을 챙기지 못하면 불인정, 반납조치라는 쓰라린 불이익을 안게 된다. 또한 최근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크게 변동됨에 따라,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리던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못할 경우 기부금 모금활동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세법에는 문화예술활동 및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통상 문화 예술 관련 세제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서비스를 향유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더 많은 문화예술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문화예술 산업의 진흥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비 촉진 세제이다.

공급자 지원 세제의 경우 조특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공제·감면제도는 문화예술분야 관련 업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예술분야 세제로

칭하기에는 다소 민망하다. 그나마 조금 더 문화예술 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제라면,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지방문화원 등 일부 문화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특례, 공공박물관 등에 유증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이 있다.

그러나 취득세·재산세 면제 규정의 경우 납부할 취득세·재산세가 있어야 면제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없는 문화예술단체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특례 또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수익사업은 영위하고 있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문화예술단체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이다. 게다가 당해 특례는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일부 국립단체에게만 적용된다.

한편, 문화예술서비스 소비 촉진 세제로는 문화비 소득 공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기업의 미술품구입비 손금산입, 예술창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이 있다. 각 세제가 소비 촉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필자 또한 매우 관심이 큰 부분이기도 하나, 사실 각 세제의 소비 촉진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지만, 공개 대상 국세통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현행 세제상 문화예술서비스 공급자 및 소비자를 위한 세제지원제도가 몇 가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공급자인 문화예술단체들이 직접적인 세제지원 효과를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고, 문화예술서비스에 대한 소비 촉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세제도입 전후로

공급자인 문화예술단체들의 매출액 실제로 증가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보니, 간접적인 효과를 숫자로나마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세법은 창작활동을 방해할 뿐, 도움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불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하지만 필자 시각에서 보건대, 세법이 잘못 만들어진 탓은 아니다. 굳이 원인을 따져본다면, 우선 문화예술서비스 공급자 상당수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만큼의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다보니, 감면받을 세액도 없는 경우가 많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딘가 씁쓸하게 느껴지는 건, 필자 뿐만은 아닐 것이다.

문화예술서비스 소비 촉진 제도도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 효과가 언제, 어떤 장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경우에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교한 세제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 제·개정이 만만한 일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매년 다양한 공제·감면제도 등을 담은 조세지출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지만, 모든 제도가 입법화되지는 않는다. 현장의 예술인들이 요구하는 세제개선안들이 실제 법령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기서는 필자가 그간 문화예술분야 세제개선방안 연구 등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문화예술 현장에 필요한, 그리고 그 효과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예술인 스스로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해보려 한다.

첫째, 현행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에 대한 이해 없이 제·개정의 칼을 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가가치세 면세인데, 특히 요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지,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공급자인 문화예술단체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문화예술단체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되더라도 이는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지, 공급자를 위해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급자인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달라’는 취지의 조세지출건의서를 제출한들 통과될 리가 없다. 조세지원 목적과 대상자가 애초에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이다.

둘째, 세제지원 목적이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간혹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강력한 세제지원제도를 요구하면서도, 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술은 가난하니까, 영세하니까, 순수예술은 모객이 어려우니까 세제지원 제도가 필요한 것일까? 하지만 얼마나 영세한지, 얼마나 모객이 어려운지에 대한 근거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근거로 세법을 제·개정할 수는 없다. 한편, 문화예술의 비영리성을 이유로 세제지원제도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비영리분야에는 문화예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 의료, 교육, 종교 등 다른 비영리분야에 우선하여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해야만 하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공감대를 발판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 되는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분야와 관련된 다양하고 충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보통 조세지출건의서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제안하는데, 여기에는 조세지출 목적, 정책효과, 연도별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문화예술분야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황 분석, 향후 추이 예측,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조세지출건의서에 담게 된다. 여기에 활용되는 통계자료의 구체성, 적시성이 높을수록 정확한 예측과 진단이 가능하다.

문화예술분야 통계자료 중에서는 공연예술조사, 예술인 실태조사, 공연예술통합산망(KOPIS),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등이 주로 활용된다. 다만, 조사항목의 한계로 인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다양한 가정과 전제를 덧붙여서 어떠한 수치를 뽑아 내기는 하지만, 아쉬울 때가 많다. 물론 이러한 통계조차 없었다면 문화예술분야 세제개선 작업이 더 큰 난관에 부딪혔을 것이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현장의 요구사항을 보다 빠르고,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면 조사항목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수집·공개하여야 한다.

넷째,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

세법도 결국 법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만 뒷받침된다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공제·감면제도가 단시간 내 입법화 된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제·개정안은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는 세제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황 조사, 통계자료 축적, 선행연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들의 끊임없는 공부 필요하다.

이는 문화예술의 특성 상 법조문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예술창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 규정에서 예술창작품은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장르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이외의 장르, 예를 들어 다원예술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또, 행위예술은 연극일까, 무용일까? 혹은 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창작 연극을 관객 앞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하여 영상물로 제작하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이 뿐만이 아니다. ‘창작’의 범위도 정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사진작품은 작가가 원한다면 무제한 인쇄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창작품으로 인정할 것인가? 50에디션까지? 100에디션까지?

현행 법령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결국 예술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국세청 혹은 기획재정부에서 알아서 개선해주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또한 세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서두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은 예술인 그리고 예술인이 속한 단체에게 크고 작은 금전적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미우나 고우나 이 불친절한 녀석을 이해하려 애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행 법령의 ‘이해’단계에서 더 나아가, ‘현명한’ 제·개정을 통해 예술인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도시는 우리가 만든 무수히 많은 규칙과 규범들이 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만들 것들이 바로 규칙들이다. 이러한 도시 속에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약속들이 도시는 성장하고 때로는 통제되기도 한다. 특히 땅과 건축물용(用) 문제는 아주 민감하다. 얼마 전 뉴스에서 많이 보았듯이 부동산 공시지가와 시세 그리고 개발의 논리로 형질을 과감하게 바꾸었더니 특혜와 이권 등이 개입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을 것이다. 특히 토지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용도가 결정되고 코스트 즉 경제적 논리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모습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 건축물에는 다양한 용도를 결정하는 땅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아무리 멋있게, 아니면 유용하게 사용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땅에 성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상상력이 물거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근 들어 영도 거청조선소가 이슈가 된 기사를 보았다. 조선 산업의 쇠퇴에 따라 폐공간이 되었지만 문화인들에게는 장을 펼치기에 가장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조선소의 기능을 해왔고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었지만 현재는 임대계약을 통한 운영권이 너머 간 상태이다. 더욱이 문화적 관점에서 아쉬움은 부산국제사진제, 영화영상부산 로케이션 장소로 주목을 받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예술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과 딱딱하지만 냉정하게 정해진 용도의 건축물과 공업지역이라는 땅의 성질이 충돌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사실 이러한 건축물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축, 도시적 검토를 수반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럼 그간에는 가능했던 이유는 지속성이 아닌 이벤트로서 공간을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거청조선소 영도지구현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거청조선소의 땅의 성질을 한번 확인해 보자. 거청조선소가 있는 영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전용공업지역이다. 그리고 중요시설보호지구(항만), 전용공업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에따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부 근린생활시설(카페), 공장, 창고, 자원순환시설, 기숙사, 문화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시설장 및 박람회장으로 한정되어 지을 수 있는 땅인 것이다. 즉, 거청조선소가 있는 땅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식 이든 간에 임시적인 방법으로 문화적 활용만 가능한 운명의 땅이기도 하다. 그럼 혹자들은 땅의 성질을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도 말을 한다. 종상향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주변 전체를 바꾸는 일이니 도시계획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한 제반적 준비도 문화적이라는 측면이 아닌 일반적인 측면으로 필요성을 어필해야만 가능하다. 완전하게 공업지역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은 도시계획적 처방이니 더욱 어려운 일이다. 정말 몇 단계를 뛰어넘어 문화시설용도의 땅으로 바꾸는 일은 개인이 이익 보다는 공공성과 당위성을 무엇보다 요구되는 작업이다. 그건 바로 땅값과 특혜와 밀접하게 관계됨에 따라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거청조선소만 바꾸면 안 돼? 가능한 하다. 이러한 방법을 흔히 지구단위계획적 처방이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도로를 내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거점시설이 필요한 경우로서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도 공공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이 또한 사적인 공간을 공공재로 바꾸는 일이기에 주변보다는 건축주와 공공의 의지가 반영 되어야 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를 깊숙하게 고민해야한다. 정말 공공재로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¹⁾

1) 최근 (2020.11) 영도구 청학동 공업지역 내 (한국타이어부지) 공업 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새로운 형식의 복합기능도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대된다.

그럼에도 암울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화두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벽을 인식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활용측면으로 안타까움 보다는 좀 더 냉정한 논의를 하기위한 시작으로 생각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공간, 문화재생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좀 더 깊숙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지금부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해와 동의하는 접근방법을 찾는 것은 어떨까? 이해와 동의는 일부 문화적 활용 목적보다는 말하는 것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파생력을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것을 분석하고 파악 그리고 제안하는 판단적 지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거점이 공유의 목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미 주변에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아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의 동의와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어떻게 만들어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는 참으로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지만 어려운 작업도 아니다.

큰 틀에서 각 역할을 준비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표면적인 거버넌스의 활동이 아닌 포지션별 그룹으로 나누어 움직이는 방향은 어떨까? 예를 들면 문화적콘텐츠, 공유자산법률, 클라우드펀딩, 행정지원 거버넌스 등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장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면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해결 솔루션그룹을 만드는 것을 이제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지금의 아쉬움이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다시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10년 전만하더라도 부산시에서 근대기 역사문화자원에 대한인식이 없었다. 당시에는 근대기 역사문화자산을 보존과 활용방법의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일제의 잔재로 보던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자원들이 지역에 랜드마크가 되고 학교 박물관, 카페 그리고 인터스트리얼 공간 브랜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시에 남선창고는 시대적 인식이 다름에 따라 철거되었지만 지금은 살아남은 자산들은 이제 경제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대이다. 이제는 역사인식의 문제보다는 역사자산이고 활용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건축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지금이 바로 이러한 지역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용도를 더해 토지의 이용을 유연화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싶다.

10년은생각보다길지않다.북항재개발이10년이 지나도록아직도땅만메우고있지않는가? 앞으로 도시는 쇠퇴할 것이고 무수히 많은 폐 시설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지금은 딱딱한 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지만 사실 도시에 무수히 많은 규칙과 규범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 힘을 발현하는 주체가 시민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불편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거버넌스 활동들이 디테일 해 진다면 분명 정책과 의지는 움직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가 지금 준비할 때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세금은 우리의 삶에서 떨 수 없는 주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세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아간다. 알고자 해도 쉽지 않다. 알수록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건 세법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의 토대가 되는 세금을 다루는 법률임과 동시에 그 범위가 삶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니 세법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방대한 내용을 모두 섭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세법을 모른다는 것이 세금 부과에 있어서 어떠한 면죄부도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경제활동에 관련되는 최소한의 세법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적어도 모르는 것을 넘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막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세법 규정 중 흔히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 주제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면세사업자

이름에서 주는 어감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확한 명칭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문화예술가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세금이 뭔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면세사업자에 면제되는 세금은 없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가 매출을 일으킬 때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걷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즉, 사업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쌀가게가 있다. 쌀가게는 대표적인 면세사업자이다. 우리는 아무도 쌀가게 사장님이 본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다. 그렇다면 뭐가 면세란 말인가? 우리가 쌀가게에서 쌀을 살 때 우리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뿐만 아니라 별도로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추가 지불해야 한다. 단지 가격표는 일반적으로 그 10%가 추가된 금액을 포함해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 뿐이다. 편의점에서 캔커피 1,000원이라고 가격표가 붙은 상품은 실제로는 상품가격 909원, 부가가치세 91원, 소비자가 지불할 금액 합계 1,000원이라는 내용을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예를 들어 쌀 한봉지 909원인 상품은 소비자에게도 909원만 청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구매하게 된다. 이 경우 캔커피 한개를 1,000원에 판매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쌀 한봉지를 909원에 판매한 쌀집 사장님은 둘 다 본인의 수입은 909원으로 동일하고 이윤이 같을 경우 각자 납부할 소득세도 동일하게 된다.

이와 같이 면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데 본인 스스로가 무슨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해서 세금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큰 낭패가 올 수 있다.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문화예술가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 발급이다. 문화예술 공연 등의 대가를 지불하는 기업에서 지불 증빙으로 꼭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심코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계산서는 막대한 조세수입 재원인 부가가치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증빙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오류는 가혹할 정도로 규제가 강하다.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했다는 영수증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가격에 포함해서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세금”이 제외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일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얕친 데 덮친 격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발생한 수입금이 세법상 면세공급이 아닌 과세공급으로 판매된다면 일은 더 커지게 된다. 소위 겸영사업자와 관련된 문제이다.

경영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 부르고, 면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부른다. 한편 두 가지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자를 “경영사업자”라 부르는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다. 실제로 문화예술가 또는 문화예술 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상당수의 문화예술 사업자는 실제로는 경영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 활동으로 창작예술 또는 영리목적이 아닌 아마추어 공연을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영리목적으로 공연활동 등을 반복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실제 문화예술 관련 매출 중 면세로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 그런데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범위와 불일치하는 것이고 관련 매출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각종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니 문화예술가 또는 단체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면세로 적용되는 활동은

매우 한정적이고, 과세로 적용되는 활동이 더 클 수 있으니 본인의 활동 성격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과세로 적용되는 활동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을 통해 경영사업자로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간혹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우리는 국가에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주었으니 우리가 하는 공연활동이 면세인 것 아닌가, 나라에서 면세로 등록해주고서는 어떤 것은 과세매출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또는 경영사업자)의 등록은 국가에서 관련된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사업자 스스로 사업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에 가깝다. 즉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든 것은 사업자 스스로 면세대상이 되는 사업만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이고 국가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까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스로 과세사업자로 변경 등록을 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시 쌀가게로 가보면 쌀가게 사장님이 캔커피도 함께 팔고 싶으면 일반과세자(경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의무를 다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편의점 캔커피는 과세로 판매되고 쌀집 캔커피는 면세로 판매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가장 큰 차이는 수익사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이다.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이를 현실적으로 말하면 고유번호증은 단체는 수익은 없고 비용만 발생하는 단체 또는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또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대폭 간소화한 예외적인 형태이다. 가장 큰 특징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동시에 발급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주로 일반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전제로 마련된 제도이다 보니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에서 상당한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문화예술가 또는 단체가 기업을 대상으로 공연료를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간혹 간이과세자로 등록 해주고서는 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님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반적인 매출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수 있고 어떠한 제한도 없다.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받는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점은 감안해서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할 문제인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표적인 고유번호증 단체인데 관리사무소의 자금흐름은 수입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각 입주자에게 거둬들인 돈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수입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고유번호증 단체는 수익활동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의 발급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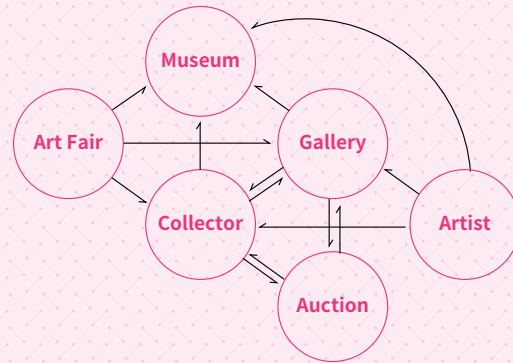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고유번호증 또한 어떤 특정한 지위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해당 단체가 영위하고자 하는 활동 범위를 표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실적으로는 고유번호증 문화예술단체가 제3자로부터 공연비를 지급받고 이를 단원들에게 출연료를 지불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세법상으로는 불안정한 처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고유번호증 단체의 활동이 계속 반복적인 영리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제재가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특정단체의 활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과세당국의 관점에서 수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규모에 이르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상적인
순환 작용으로

생태계의
균형 있는 성장

미술계의 생태는 작가가 작품을 생산함으로써 성립된다. 작품의 유통과 순환 구조는 일방적이거나 상호작용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갤러리, 미술관, 기획자와 같은 직접적인 관계 그리고 그것들과 연결되는 옥션, 아트페어, 컬렉터 등 간접적인 관계구조에서 각각의 역할과 방식은 정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포함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아트마켓의 논리에 입각한 유통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유형의 시너지도 있으나 작가 또는 작품의 가치에 대한 무형의 시너지나 미학적 평가에 기준을 두자면 모든 구조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무형이든 유형이든 상호작용은 미술 생태구조에서 신체의 혈전과 같고, 정상적인 흐름을 통해 균형적인 성장과 상생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따라서 동시대 미술의 가치 척도는 아트마켓 중심으로 편중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 원리의 방식에서 아트마켓도 순환되고 구조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도 자명하다. 그러나 지나친 마켓 중심의 기형적인 생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년 전 서울의 한 국립미술관에서 아트페어와 같은 기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림 1] 미술품의 유통구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비평이 약해지고, 작가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작가론이 생략되는 대신 기술적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우선시되고, 시대적 담론의 장이 축소되고, 미술사의 조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미학적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기형적 성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뿐만 아니다. 이론적 비평 대신 수치를 통해 새로운 레코딩에 촉각을 세우고 가격이 가치의 중심인 양 부추기는 아트마켓 현장, 누가 많은 베팅으로 작품을 차지하는 최후의 승자가 되느냐에 대한 경쟁 방식의 유통에서 옥션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옥션

이라는 성격의 특수성상 당연한 현상이다. 경쟁을 통해 어느 쪽이 획득하느냐에 대한 이분법적인 방식은 초기 인류사회의 단순하고 원시적이라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 논리 위에서 당연시된 현대사회의 문화이다. 문제가 되는 미술품이 경쟁적 방식으로 수치화되는 사이에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가격에 편중되거나 아트마켓 전반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현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편중은 생산자와 소비자 이외의 제3자의 관점에서 충분한 오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미술품에 대한 세법 적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 공평의 원칙에 근거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명목과 과세 논리를 앞세워 2013년부터 '양도차익과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과세 적용이 수면 위로 오르던 2008년 당시 한국의 미술시장은 유례없이 연간 6,000억을 넘나들던 일시적인 호황기였고,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 수십억대의 비자금과 관련된 최대 이슈였다. 그러나 다시 2010년부터 현재까지 4,000억대를 초중반을 맴돌고 있다. 이는 세계 미술시장의 0.5%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규모의 현실이다. 최근에는 미술품 '물납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고이건희 회장이 컬렉션 한 작품 1만 3천여 점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13조에 이르는 상속세 일부를 작품으로 대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미술계 안팎의 시선은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 양도차익 과세이건 물납제이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형평성에 맞추어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미술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다.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얼마 되지 않는 세수확보보다는

고가의 미술품에 대해 구입, 판매, 상속, 증여 등에 대한 흐름 즉, 과세 정보체계를 만들어 감시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물납제의 경우, 고 이건희 컬렉션의 경우에는 예술작품을 통해 탈세, 세습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반대 여론의 이유이다. 피카소미술관이 대물변제로 만들어지고 사치 컬렉션(Saatchi Collection)이 런던시에 천문학적 가치의 전 컬렉션을 기부하고자 하는 서구의 문화와 비교하면 너무 씹쓸한 현실이다. 더구나 형평성이 예술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부재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판단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식의 세법은 과연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 독이 되어야 하는가.

동시대의 국내외 작품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작가라고 거론되는 작가의 작품 한 점도 구입할 수 없는 예산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이하 한국의 공립미술관은 무엇으로 수장고를 채워 나가야 하는가. 작품 구입 예산은 해외 미술관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의 환경은 기부 문화에서 전혀 다른 수준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미술관으로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정화된 법이 있기에 가능하다. 작품 기부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열악한 한국의 현실에서 고 이건희 컬렉션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다는 기대가 수포가 되는 오류가 없기를. 제재를 위한 독선적인 세법이 아닌 조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기부에 대한 새로운 문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술계의 바람, 미래의 자원이다

문화기반 시설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로 작용한다.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문화회관 등 8개 분야의 문화기반시설은 전국에 3,017건이다. 이는 2013년의 2,182건에 비해 약 28% 성장한 수치이며 미술관의 경우 267개(국공립 73, 사립 179, 대학 15)로 2013년 171개에 비해 약 90건 정도가 늘어났다. 국민의 문화 활동에 대한 활동과 참여는 나날이 고조되고 미술 분야에 관한 관심도 다르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국민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문화 활동 분야는 영화 75.8%, 대중음악 21.1%에 이어 미술 전시 15.3%로 영화나 대중음악의 비중이 미술보다 압도적이다. BTS가 빌보드차트의 반열에 올라가는 등 K팝의 영향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과 골든 글로브상에서 인정받고 이어 '미나리'도 주목받는 등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중의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하는 미술 분야이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추이를 보면 타 장르는 감소세지만 미술 분야는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유일한 장르로 그 가능성을 본다. 그리고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전시를 관람하고자 하는 의향 역시 영화와 대중음악 그리고 뮤지컬 참여에 비해 낮은 편이나 추이가 상향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이에서 미술계의 밝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와 관심에 대해 나이별 조사에서 20~30대의 연령층이 가장 높다는 점은 향후 문화예술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고무적인 결과다. 국내 미술 시장에서 2009년 약 300만 건의 작품 거래가 2019년에는 약 3천8백만 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중저가의 작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젊은 컬렉터가 그 수요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결과다. 최근 다른 조사에서 거래금액 기준의 고객은 경제권을

쥐고 있는 60~70대가 많지만, 거래 작품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대 전후의 젊은 층이 많다는 결과도 고무적이다. 이러한 중저가의 작품을 구매하는 고객층, 온라인으로 국내외의 작품을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 미술관 전시를 찾는 관람객 중 비중이 높은 연령층 역시 젊은 층이다. 이들의 관심사가 되는 작품의 대상도 다양해졌다. 장식성이 강한 팝 성향의 작품이나 하이퍼리얼리즘 성향의 작품에서 60년대의 단색화나 실험미술, 미디어작품 등 관심 영역이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새로운 세대들의 新바람에는 몇 가지 이유가 감지된다. COVID19로 인해 세계의 미술관, 갤러리, 옥션, 작가 등 VR을 이용한 새로운 노출 전략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향유방식에 다양화되고 있다. 심지어 온라인상의 미술품거래를 위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투자회사가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플랫폼에서는 작품을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10만 원 또는 100만 원 등 투자할 수 있는 액수를 다양화시켜 놓고 고객이 가능한 액수를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통하고 작품을 소유하지 않고 이미지만으로 투자하는 등 단기적인 투자 결과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유에 대한 개념도 변화되고 있다. 구입한 작품을 장기간 소유한다는 개념보다 언제든지 교환 또는 판매한다는 단기적이며 소유보다 향유방식의 개념이 강하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소유물에 대한 노출과 거래가 개별적으로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 미술품 소유에 대한 개념과 문화가 변화되고 있다. SNS를 넘어 메타버스(Metaverse)시대가 도래하고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차세대가 주도해 나갈 것이다. 급변하는 현실에서 미술문화도 다르지 않다는 것과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착되리라는 관측을 해 본다. 오프라인에 의존했던 기성세대는 新바람의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예술+ ? 예술+고용

부산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 현장 : 근로계약서에 담기지 않는 욕망과 아쉬움

우 동 준
생각하는 바다
매니저



‘고용’은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교환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관계 형성을 위해 구직자는 그동안 경험해 온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기업은 원하는 직군과 구직 희망자와의 연관성을 판단한다. 사전적 의미로만 해석하자면 그간 진행해 온 사업 내용과 미션으로 서로의 욕구를 판단하는 고용이란 자칫 단순한 과정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나는 몇 차례의 면접을 진행하며 최종 선정된 사람과 고용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고용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계약서에 적힌 ‘노동’과 ‘보수’라는 단어 안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욕망’과 ‘아쉬움’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생각하는 바다’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그 어떤 시기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일을 진행했다. 신체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것이 백신의 원리라고 했던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긴장감은 오히려 조직을 성장시키는 모멘텀이 되었고, 우리는 고심 끝에 늘어난 사업 규모에 맞춰 새로운 인원의 고용을 준비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내부의 기준을 다잡는 일이었다. 내부 구성원의 노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급체계는 어떠한지 할지 우리의 노동환경을 우선 판단해보았고, 서로에게 어떤 성장을 원하고 그 꿈의 방향이 오늘의 조직에서 실현 가능한지 역시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았다. 타인을 평가하기 위한 채용과정은 면접자를 공정히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의 고용 형태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2주 남짓한 모집 공고 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면 면접에서 나는 고용희망자에게 노동시간과 임금, 당장 수행할 과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안내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지, 프로젝트의 대상은 누구를 선호하고, 어떤 장르의 그룹과 협업하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나는 이런 질문이 딱딱한 책상을 사이에 두고 가득 긴장한 채 말하는 서로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추상적인 질문이 오가는 면접 자리에서 앞으로 수행하게 될 업무와 구체적인 사업영역을 안내한다면, 근무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번의 면접을 진행하며 마주한 질문은 그렇지 않았다. 면접장을 찾은 분들은 노동조건과 관련한 정보만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통해 무엇을 획득해야 하는지 물었고, 기업이 앞서 실행해왔던 프로젝트 지향에 대한 공감과 다음 계획을 문의했다. 그들과 주고받은 대화에서 읽을 수 있던 니즈는 안정적인 지역 내 직장에서 누리는 일 경험의 기쁨과 의미 있는 성장, 그리고 함께 하는 구성원들과의 호흡과 따뜻한 분위기에 대한 갈망이었다.

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정보는 숫자로 안내된



임금을 넘어 노동을 통해 어떤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조직의 성장 가능성이었다. 달리 말하면 어떤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가 고용의 제 1조건으로 제시되는 임금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였던 셈이다.

면접은 부산에서 어떤 일 경험을 남길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는 성장 방향이 무엇인지 작은 피드백 회의처럼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도려해지는 경험이었다. 적절한 인원을 발굴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미세하게 영점을 조정하듯 본격적인 업무 시작에 앞서 각자가 정립한 노동의 의미와 철학을 조정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오롯이 누군가를 고용하기 위한 한 차례의 과정이 끝나고 나자, 나는 나와 주변의 고용을 되돌아보며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고용엔 충분한 의미와 성장이 담기고 있는 것인지 자문했다. 함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했던 이들, 시민 사회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들을 만나며 그들의 노동 환경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누구는 현장에 대해 피로함을 호소했고, 누구는 더 많은 가능성을 품은 타지역으로의 이주 계획을 전달했다. 낯선 영역에 진입한 새로운 사람의 뒤로 나름의 논리와 경험을 갖춘 이들의 이탈을 동시에 마주한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영역으로 떠나려는 이들의 공통된 니즈는 소진되지 않고 회복하며 일할 수 있는 체계에 있었다. 고용은 새로운 자리를 창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의 고용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틀을 고민하는 것도 포함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안엔 곧 ‘퇴사를 선택했던 사람’도 포함되기에 고용을 창출하는 것만큼이나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도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몰입과 헌신에 대한 측정을 회피해왔던 것은 아닌지, 창작과 예술이라는 측정되지 않는 비전을 이유로 누군가의 노동과 정당한 보상마저 책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이들이 참을성과 진득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기 때문에 떠나려는 것은 아닌지 겸허히 자문해보아야 한다.

그동안 앞으로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 현장에 걸맞은 아카데미를 진행했지만, 떠나가는 이들을 붙잡기 위한 트랙은 깊게 고민하지 않았다. 혹은 충분한 일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새로운 인력만 양성하는 아카데미 교육은 교육생이 자신의 힘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만을 바라는 ‘판타지’와 같으며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나 역시 지역 고용 현장의 문제는 풍부한 교육 기회의 부족보다는, 개인의 성장을 우선하고 완전한 헌신을 기대하지 않는 ‘적절한 일자리’ 부족에 있다고 느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일자리란 체계적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개인의 다음 스텝을 위한 적절한 도전과 심의 기회가 함께 제공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근로계약서에 담기지 않는 욕망과 아쉬움이란 상반된 욕구를 마주하며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고용은 언제나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나는 고용이 새로운 사람과 연결되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다른 이와 다음 만남을 희망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건 무엇이 가장 본질적 의미의 해결방법에 가까운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2020 부산광역시 문화지표를 손에 들고

많은 이가 지역의 문화생산능력치를 지역의 경쟁력이자 시민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발의된 이후로 지역은 말 그대로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구체화 전략에 골몰해 왔다. 문화현장 혹은 문화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생태계의 비전을 설정하여 지역문화를 진흥할 조건을 찾아내는 작업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정세가 이미 형성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를 어느 지역도 피해갈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관건은 오랜 동안 묵혀 왔던 이 숙제를 먼저 누가 얼마나 적절하게 잘 펼쳐내는가이다.

가만히 서 있는 과녁도 제자리 서서 맞추기 힘든데 이동하는 과녁을 움직이는 궁수가 맞추는 일은 거의 기예에 가깝다. 문화가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이들에 따라 만들어지면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터에서 살아가면서 벌여온 자기 활동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한다면 문화연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 현실을 덜 왜곡되고 적절하게 담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많은 이가 골머리를 앓는다. <2020 부산광역시 문화지표> 연구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팔을 걷어 부친 연구팀에서는 먼저 “지역문화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지역 내 구, 군 단위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보고서의 두께만큼이나 녹록하지 않았을, 연구의 결과물을 들었다. 연구자만큼은 아니지만 이 연구를 어떻게, 어떤 태도로 읽어야 하나 고민에 빠진다.

× 부산의 변화하는 문화현황을 지표조사의 그릇에 담다

연구팀은 부산 문화환경 전반의 순환 구조를 분석하려는 의지로 부산문화현황을 조사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2013년 부산연구원이 진행했던 부산문화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에 맞게 좀 더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영역을 구분하고자 했다. 2013년 작업에서는 연구영역을 인문사회환경, 문화자원(역사/해양/생활문화), 문화시설, 문화산업, 문화자원(재정/행정), 문화활동으로 구분했다. 2013년 작업의 경우 문화활동영역을 조사할 때 주로 문화·예술인들 기준으로 그들의 활동을 정리했다면, 2020년의 작업에서는 이 영역을 생활문화활동,

1) 2020 부산광역시 문화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지표연구가 진행된 곳은 다음과 같다. 지역문화실태연구(2017), 인천(2008/2012), 부산(2010/2013), 제주(2012/2017)대구(2014), 서울(2015/2017), 광주지역(2016).
2) <2020부산광역시 문화지표>는 부산광역시 전체를 구군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3) 문화자원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문화현황을 분류하는 작업이 무척이나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문화예술 교육, 문화복지활동으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⁴⁾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설정하였다. 2020년 연구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특정한 이들의 특별한 활동이자 결과물로만 이해하던 방식을 벗어나 지역민과 문화인력, 행정시스템이 함께 호흡하는 지역문화 생산이라는 큰 흐름에 주목했다. 부산시민의 “여가시간을 확대”하고, “문화활동 패턴 변화”를 파악하며 “예술인 창작 및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 영역을 인문사회환경, 문화기반, 문화인력, 문화시장, 문화활동, 문화행정, 해양문화 7개 영역과 20개 중분류, 41개 소분류지표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주요 조사내용 표1 참조).

표 <2020 부산문화지표> 영역, 지표목적, 주요 조사내용 (지표조사보고서 인포그래픽 내용 정리)

고려항목	지표목적	조사내용(#의미고리)
인문사회 환경	생활, 행정, 교육, 경제환경파악	연령별 인구비율(#황혼의 도시 부산) 다문화구성비율(#함께 자라는 문화다양성 도시) 연령별 1인가구 현황(#홀로 살아도 외롭지 않게) 다행복학교(#은마음이 만드는 배움의 현장)
문화기반	문화재 및 문화기반시설의 물리적 규모와 인력, 예산, 프로그램 등 실제적인 활용 및 성과 규모 파악	부산미래유산(#오늘의 기억이 내일의 유산으로) 공연장 분포현황(#공연을 보려면 원도심으로), 공공도서관 및 도 작은 서관(#도서관이 살아있다) 서점 및 공방수(#세권에서 문화를 누려요)
문화인력	전문문화예술인 및 매개인력현황, 교육기관현황파악	전문예술법인, 단체 수(#예술로 사회를 아름답게) 문화예술분야 대학 재학생 수(#예술가의 꿈 키우기)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현황(#이웃집 예술가)
문화시장	문화예술관련산업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파악 문화예술작품의 생산 규모 및 유통경로 파악	문화예술산업체 성별 종사자 현황(#모두에게 기회) 사회적 경제조직(#새로운 예술생태계를 만듭니다) 문화예술작품 유통량비교(#골고루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구군별 개최 축제 수(#축제의 도시 부산)
문화활동	시민문화예술교육 및 생활 문화활동 현황조사	평생학습관 생활문화프로그램(#마을에서 생활문화배우기) 통합문화이용권 장르별이용률(#문화누리카드로 문화를 누리다)
문화행정	문화정책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조직, 인력, 법체계와 예산 규모 파악	문화 및 관광 예산액 세부항목 비중(#문화예술 살림살이 엮보기) 전체조례대비, 문화예술관련조례비율(#문화예술가꾸는 법)
해양문화	부산의 해양문화 도시적 특화 전략 파악	지역별 바다해설사 현황(#바다의 알쓸신잡을 알려드립니다) 구군별 자매도시현황(#세계와 연결된 부산)

4) 2016년 부터 2030년 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인터넷 위키백과 사전 중에서).

영역마다 지표설정방향, 지표현황을 정리하고 소분류마다 지표정의, 자료출처, 조사결과를 정리하였다. 대부분 기존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다보니 연구에 한계가 많았을 것이다. 기록자료가 없는 영역도 많았기에 연구팀이 직접 데이터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제한된 연구기간, 연구원 부족 등으로 제대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영역,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항목에는 조사의 한계를 덧붙여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다. 문화시장의 영역에서는 연구팀이 발품을 많이 들었다. 아트페어나 갤러리 수, 부산지역출판현황, 문화작품 유통량을 자체 조사하였지만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향후 전수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음을 밝힌다. 조사의 한계를 기입한 곳은 문화기반 영역의 공방, 문화인력 영역의 장애문화예술인 수, 문화시장 영역 문화예술작품 유통 건수, 문화활동 영역의 생활문화 프로그램/생활문화동아리 회원 수 항목이다. 예를 들어 생활문화동아리의 경우, 정량집계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정성조사가 필요하고 장애문화예술인의 경우, 전국 및 지역차원에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의 및 실태 파악이 미진한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고 향후 장애 예술인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 및 창작 여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첨언하였다.

× 지역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갈무리 과정의 중요성

또한 총체적으로 연구팀에서는 “문화지표 특성상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서 자료 취득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중앙 단위의 다양한 조사 체계가 있으나, 구군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구군 단위 문화현황에 대한 한계가 많았”고, “또한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문화다양성, 사회적 가치 등을 드러내는 지표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자료 부족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향후 체계적인 문화지표조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가 시행되어 시계열적으로 자료누적과 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영역에서 밝힌다.

제언에서 밝힌 부분은 연구팀의 한계가 아니라 부산지역문화연구나 문화생산시스템의 현실적 한계다. 2020 부산문화지표 보고서에는 부산문화현황이나 실태를 담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의 문화생산 조건과 문제점까지 딱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이는 정리되지 않은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연구의 미덕이다). 지역이 해결해야 할 숙제를 먼저 잘 펼쳤다. 관건을 터트린 것이다. 이 관건을 누가 이어 받을 것인가. 앞으로 우리 모두의 문제다.⁵⁾

5) <2020 부산문화지표 보고서>를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시기를 권장한다. 부산 지역의 문화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마치 막막한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장불의 희미한 그림자에 비추인 세상을 만나는 기분이 들 것이다. 어둠에 익숙한 눈이기에 처음에는 시릴 수 있다. 그럼에도 여러 번 들여다보시길. 눈에 익숙해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점차로 들어올 것이다. 그때를 꼭 만나서 눈도 뜨고 입도 터 보자.

3~4월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예술인컨설팅 매칭사업<아이컨택> 진행 중 (03.18.)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예술인 컨설팅 매칭사업(아이컨택)'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상시 운영한다.

문화예술교육 총서 1,2권 발간 (03.23.)

부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의 담론과 가치, 현장 사례 등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총서 1,2권을 발간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제1차 열린 포럼 개최(03.29.)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는 제1차 열린 포럼 "문화 안전망으로서의 부산지역 문화공간"을 4월 2일(금) 오후 2시 한성1918 청자홀에서 개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분야 양성평등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 논의 (03.12.)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2일(금)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양성평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20년 국민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27.3%, 지속 참여 의향 81% (03.30.)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2020 문화예술교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문화정보원

데이터로 보는 코로나19, 문화여가생활의 변화를 가져 오다 (03.04.)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은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가 바꾼 국민의 문화여가 생활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코로나19 전후 문화여가 트렌드 변화'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60~90년대, 공연예술 심의 대본 원문 최초 공개 (03.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카이브기록원은 오는 3월 11일부터 지금껏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문교부(1961~1966), 한국예술문화유리위원회(1966~1976), 한국공연윤리위원회(1976~1986), 공연윤리위원회(1986~1997) 등에서 심의한 1960~90년대 공연예술 심의대본과 심의서류 5,900여 편을 공개한다.

예술위원회, 21년도 주요 사업과 정책방향 발표 (03.26.)

지난 3.10(수) 문체부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21년 주요 사업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개방 운영 (03.12.)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경남콘텐츠코리아랩 내 온라인 화상회의실을 구축하고 3월 22일부터 도내 창작자 및 창업자에게 무상으로 개방한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 시동(04.05.)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 이하 진흥원)은 지난 3월 31일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부산, 울산문화재단 대표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 메가시티 문화예술분야 광역대응체계 구축'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창립 10주년> 지역문화자산 아카이빙... 콘텐츠화 모색 (03.23.)

광주문화재단은 창립 10주년이 되는 올해 그동안 축적된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문화 융·복합 콘텐츠 제작 위한 업무협약 (03.30.)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9일 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문화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교육적 효과 제고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전남대학교 문화전문 대학원, 조선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등 지역 주요 콘텐츠 분야 대학원, 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문화재단

온라인 투표 <8살 시민청 12대 사업> 결과 공개... 최고의 사업은 '시민기획단'(03.08.)

서울문화재단 시민청의 대표 사업 중 서울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고의 프로그램은 '시민기획단'이 차지했다.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특화 예술교육공간 '서울예술교육센터'개관 (03.26.)

서울문화재단이 10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매체) 활용 융합예술교육 공간인 '서울예술교육센터'를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인근에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아 장애예술가랩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03.18.)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은 3월 18일,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와 예술공간 이아 장애예술가랩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충북문화재단

청주 '대성비디오',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04.01.)

충북도와 충북문화재단이 콘텐츠누림터 유지강화 사업으로 청주시 대성로 122번길에 '대성비디오' (사진), '가람신작'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한다.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부산시 도시 계획 전환 (03.15.)

부산시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BDI 정책포커스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부산시 도시계획 전환'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산관광공사

설레는 봄을 그려봄(BOF)! 드로잉 이벤트로 시동 건 2021 BOF

더욱 안전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아시아 최대 한류 축제 2021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Busan One Asia Festival, 이하 2021 BOF)이, 드로잉 이벤트와 함께 기지개를 켜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금정문화재단

금정문화재단·영화의전당, 부산 문화발전 맞손 (03.28.)

(재)금정문화재단은 지난 26일 금정구청에서 (재)영화의전당과 '문화예술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0호
2021 | 05~06

국립문화예술기관과
지역

Contents

칼럼	문화권(文化圈)의 문화권(文化權)
이슈1	영화진흥위원회와 지역영화 정책
이슈2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13년, 그리고 그 후
이슈3	우리 시대 문화예술에 대한 예우
예술+공유	함께하는 방법들- 예술로 공감하기
정책보고서 톺아보기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과 문화안전망으로서의 부산지역 문화공간 포럼 이후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최근 대기업 회장의 세기적 기부로 인해 해당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이슈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연일 뜨겁게 뉴스를 가열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국립문화예술기관이 지역에서 의미하는 가치와 역할은 무엇인가...에서 이번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칼럼’을 통해 최근이슈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고민하였고 ‘이슈 1, 2, 3’에서는 부산지역의 기관들을 사례별로 짚어보았습니다. ‘예술 더하기’ 코너에서는 ‘공유’를 키워드로 최근 복구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정책보고서 톺아보기’에서는 재단발간 보고서와 담론의 장 이후 외부 현장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책적 제언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0호
2021 | 05~06

Contents

p.52	칼럼 [문화권(文化圈)의 문화권(文化權)] 조정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p.54	이슈1 [영화진흥위원회와 지역영화 정책] 김이석(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p.59	이슈2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13년, 그리고 그 후] 최찬열(춤문화연구소장)
p.63	이슈3 [우리 시대 문화예술에 대한 예우] 신양희(아마도예술공간 큐레이터)
p.66	예술+공유 [함께하는 방법들- 예술로 공감하기] 김미희(문화기획올아트22 대표)
p.68	정책보고서 톺아보기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과 문화안전망으로서의 부산지역 문화공간 포럼 이후] 정면(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운영지원센터장)
p.70	5~6월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COLUMN

칼럼

문화권(文化圈)의 문화권(文化權)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문화민주주의 본질은 모두를 위한 문화(Kunst für alle), 즉 인간은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인 ‘문화권(文化權)’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민주주의는 최근 지역문화 협력과 공생에 기반한 ‘문화권(文化圈)’에 대한 이슈로 논의가 확장된다. 핵심은 문화권역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문화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크게 보면 “문화권(文化圈)의 문화권(文化權)”이 바로 문화분권이다. 지역문화의 문화권(文化圈)에는 선악미추가 없어 ‘격차(格差)’라는 표현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문화권(文化權)으로 이야기를 돌리면 문화기반시설 인프라의 ‘격차(隔差)’가 엄연히 존재하며,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매년 문체부에서 발표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¹⁾이 공개되면 지역 언론은 ‘문화기반시설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기사를 연일 쏟아낸다. 데이터가 뒷받침을 하듯 부산의 경우,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기반시설의 숫자만 봐도 제2의 도시 치고는 초라하다. 이웃 경남과 울산 역시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인력, 이용현황, 소장자료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다. 현재 세 지자체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완성되어도 수도권에 비해 문화기반 시설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동남권 시민들의 문화권(文化權)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문화기반시설 부족은 결국 지역민의 질 높은 문화

예술 작품 향유를 침해 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국립문화기관을 설립·운영 중이나,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립공연장, 미술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문화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오페라, 발레, 합창, 연극, 무용 등 국립공연예술단체 역시 서울에 집중되어 수도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립이 아니라 서울시립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매번 등장하는 지역 문화계의 문화공약 단골메뉴가 있다.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균형 배치다. 부산의 경우 10여 년 전 부산 국립아트센터 건립, 최근 몇 년 동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부산 분교 유치에 적극적이다. 경남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주무부서인 문체부는 진작 심각하게 검토조차 하지 않거나 정책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컨대, 부산 국립 아트센터 건립 요구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2011년 [부산 국립극장 기본계획 수립]과 [국립 공연장 시설 재배치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기초연구로만 남아 용역에 제안된 내용이 정책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부산 국립아트센터는 당시 취지와 다르게 국립의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채 ‘국제아트센터’로 명칭 변경되었다. 지역문화계를 위한 공약(公約)이 그야말로 공약(空約)으로 끝나버린 경우다. 동남권의 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 따른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재배치에 대한 정부·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수도권 집중은 해외 사례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프랑스는 각 지역과 장르 특성을 고려해 국립공연장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원체계를 정립한 국립공연장 라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²⁾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만드는 국립 문화시설 정책은 영국과 독일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는 지역에 각종 왕립, 국립, 주립 문화시설을 골고루 배치하여 문화시설의 지원 방식과 예산 결정에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두 지자체가 협력하여 한 지자체는 시설을 두고, 옆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 하는 사례도 있다. 런던에 본거지를 둔 영국의 왕립 문화예술단체는 지역의 공연장들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순회공연·전시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문화예술기관의 균형 배치와 관련한 위와 같은 해외의 정책은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최근, 이견희 미술관 건립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국립 문화시설 유치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동남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문화 권리 확보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간 경쟁에서 동남권의 문화인프라 확충이라는 문화권역 정책 어젠더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다. 부산, 경남, 울산은 국립 문화 시설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 하는 것 보다 동남권의 문화권(文化權) 확보에 대한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先공동유치 後입지선정’이라는 전략적 연대를 맺어야 한다. 이외에도 부·울·경은 양질의 국립 문화예술단체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서도 공동 협력해야 하며, 영국의 사례와 같이 국립 문화예술단체와 장르별 프로그램을 주기적

으로 지속 가능하게 제공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국립 문화예술기관과 맺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은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이며, 그 중심에는 문화기반시설의 인프라 격차(隔差) 해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체부의 정책 입안자는 이점을 꼭 명심하며 부디 법대로 법을 집행 해주길 바란다. 부·울·경도 지역 균형발전에 걸맞게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동남권 이전 및 균형 배치를 문화정책적 차원의 검토를 넘어 이제는 국가정책 의제로 격상해서 공동대응 해야 할 것이다.



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은 전국 17개 시도의 문화시설 현황을 총정리한 것으로,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지역문화진흥법」상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중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있다.

2) 프랑스의 지방 분권화 정책에 근거하여 전국에 우수 문화 예술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립 공연장은 문화부가 직접 관리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8개의 ‘국립극장’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국립 라벨 및 네트워크 소속 국립공연장’이 400여개 이상 존재한다.



2005년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3개 기관의 부산 이전이 결정되었다. 부산영화계의 반응은 뜨거웠다. 공공기관의 이전을 계기로 부산영화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무성했다. 그로부터 16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과연 공공기관의 이전 이후 부산영화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공공기관 이전과 부산영화산업

영화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부산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다. 1996년에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와 1999년 설립된 부산영상위원회의 성과가 타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돋보였기 때문이었다. 한때 전주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도시는 예상대로 부산이었다.

부산 이전이 확정된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것은 영화진흥위원회였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영화산업이 급성장을 이어가면서 국내영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상이 한껏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부산은 영화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¹⁾ 따라서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 이전은 부산영화계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전반에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부산영화계의 기대는 매우 컸다. “몇몇 메이저급 영화사 외에는 많은 영화사들이 부산으로 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영상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됐다” 등 장밋빛 전망이 담긴 언론 보도나 부산을 수도권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영상클러스터’로 발전시키자는 학계의 주장 등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이전을 계기로 부산영화계가 한 차원 높게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부산영화의 상황은 기대와는 많이 다른 것이 사실이다.

아래 <표. 1>를 살펴보면, 영화·영상분야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된 2005년 이후 부산영화산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산업 종사자 수는 977명(2005)에서 1,749명(2018)으로 증가했지만 전국 대비 비중은 5.7%에 머물렀다. 영화산업 매출액과 극장 수익의 경우는 오히려 전국 비중이 줄어들었다. 부산에 소재한 영화사업체수도 2018년 기준으로 54개에 그치고 있다.²⁾ 수도권 기업이 대거 부산으로 이전해올 것이라는 예상이 여지없이 빗나간 것이다. 부산업체들 중 상당수가 영세하다는 점도 문제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부산 소재 영화사가 제작한 장편극영화 개봉작 16편 중 <판도라>(2016)와 <퇴마: 무녀굴>(2015)를 제외한 14편은 전국 관객 1만 명을 넘기지 못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복수의 작품을 제작한 부산 소재 영화사는 ‘브릿지 프로덕션’(3편), ‘야간비행’(2편) 두 곳에 불과했다.³⁾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부산은 여전히 수도권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부산 영화산업 실태

고려항목	종사자수(명)	매출액(억원)	사업체(개)	극장매출(억원)
	전국비중	전국비중	전국비중	전국비중
2005	977	2,125	통계없음	814
	5.7%	7.1%		9.0%
2018	1,749	2,340	54	1,328
	5.7%	4.0%	3.9%	6.9%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영화진흥위원회 산업통계

1) 부산의 영화산업 마스터 플랜은 ‘영화촬영하기 좋은 도시’(육성기, 2004년)에서 ‘영화만들기 좋은 도시’(정착기, 2005~2008년)를 거쳐 ‘영상산업 정착 및 확대 재생산, 영상제작의 중심지’(발전기, 2009~2012)로 도약하는 것이었다.
2) 2005년에는 사업체 수 통계자료가 없음. 2013년 기준 업체수는 47개임.
3) 윤하, 『부산지역 영화산업의 특화 전략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9, 49-50쪽.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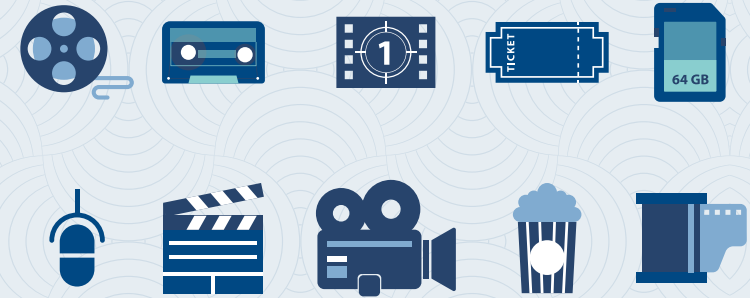


지역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지역영화 진흥 정책이 처음 수립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2003년에 발표된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에 '지방자치단체 영상진흥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한국영화의 해결 과제로 지정되었다. 2006년에 발표된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 5개년 계획'에도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지역영상산업 균형발전'이 꼽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면서 공공기관 이전작업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영화계의 경우, 때 아닌 이념 갈등이 공공기관 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보수진영에 속한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부산 이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이다. 특히 '부산이전 반대 범영화인 투쟁위원회'를 결성한 일부 원로영화인들은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부산 이전이 노사모 세력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각 지역 영상위원회가 노사모의 분거지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영화인들이 공공기관장으로 잇달아 임명된 것도 부산영화계로서는 악재였다.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애초의 목표는 이미 희미해진지 오래였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드디어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을 했지만 사옥조차 마련하지 못한 탓에 한동안 더부살이를 해야만 했다. 2021년에야 신사옥이 완공되면서 행정조직의 이전은 완료되었지만, 부산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종합촬영소 이전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영화진흥위원회의 이전이 지연되는 사이에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영화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부산의 경쟁력은 예전보다 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영화에 대한 부산시의 관심도 점점 시들해져갔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하드웨어에 치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부산시는 영화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에 쏟았던 관심은 타 분야로 옮겨가게 된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앞서 언급한 산업수치를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지역영화정책의 현주소



하지만 이처럼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역영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2019년 이전까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들 중 지역영화와 관련된 것은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이 사실상 전부였다. 지역영화진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시적인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은 2019년 '제 1기 지역영화문화소위원회'가 발족하면서부터다. 현재 영화진흥위원회는 13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지역창작인프라 균형 구축'을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영화진흥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영화 사업을 아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영화진흥위원회 지역영화 관련 사업

사업명	2019	2020	2021	비고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및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31.5억원	50.5억원	19억원	전국 공모
지역영화문화 네트워크 허브 지원	3억원	6.5억원	6억원	전국 공모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4억원	4억원	4억원	전국 공모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지원	2억원	2억원	2억원	서울 공모

총 4개의 사업 중,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지원사업의 경우는 서울의 미디어센터 위탁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외한 3개 사업을 지역영화 관련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예산 규모로는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및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사업이 가장 크다. 특히 2020년에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51억 원이 이 사업에 투입되었다. 2020년 개관한 부산의 사운드스테이션이 바로 이 예산 덕분에 완공될 수 있었다. 영화 제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일회성 사업이라는 점, 지원대상이 연간 2~3곳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뚜렷한 사업이다. 당장 2021년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지역영화문화 네트워크허브 지원사업은 사업명이 말해주듯 지역 영화단체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장기적으로는 광역단체별로 1개 컨소시엄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매년 공모를 거쳐 선발하지만 사실상 연속 사업에 가깝게 운영된다는 점도 차별점이다. 하지만 지역영화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다년제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장기적인 사업 기획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내실있고 차별화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영화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영화정책과 관련하여 늘 벤치마킹 대상으로 언급되는 프랑스의 경우 오래 전부터 지역영화발전기구(ADRC)를 중심으로 지역영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ADRC에 상영업자, 배급업자, 제작업자, 감독,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영화와 관계된 사람들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역별로 차별화된 사업은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영화 향유권이 보장되고 프랑스 영화의 다양성이 확보되며, 이는 다시 프랑스 영화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나가는데 기여하게 된다.

코로나 19 사태, OTT라는 경쟁자의 등장 등으로 인해 한국영화계에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있다. 한국영화의 성장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들려오고, 스크린 독과점 등으로 인해 한국영화의 다양성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산영화계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힘을 모아 한국영화계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선한 도전을 기획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금은 거의 잊혀져버린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의미를 상기하고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

1951년, 피난 시절 부산에서 처음 개원해, 전쟁 후 서울로 옮겨 간 국립국악원은 전통춤과 국악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국립예술기관이다. 국립부산국악원은 부울경 지역의 전통 공연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 10월 28일 개원한 국립국악원 소속 국립예술기관이다. 국립부산국악원은 국립국악원과 국립민속국악원(전라북도 남원), 그리고 국립남도국악원(전라남도 진도)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다소 성격이 다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부산 지역의 특성과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말이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공연 ‘자갈치 아리랑’(2011-2013년), 6.25 전쟁을 피해서 부산에 온 국악인들의 삶과 생활을 다룬 ‘대청여관’(2016년), 구포 당산나무 설화를 무대화한 ‘구포당숲-안아줄 수 있다면’(2020년)과 같은 공연들이 이에 해당한다. 기실, 국립국악원이 정재와 정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면, 국립민속국악원은 창극과 판소리를, 그리고 국립남도국악원은 국과 같은 전통 연행을 활용한 공연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립부산국악원은, 전라도는 소리의 고장이요, 부산은 춤의 고장이라는 말에 걸맞게, 전통춤 공연을 주축으로 해서 전통 기악과 성악 공연을 아우르고 있다. 그런데 국립부산국악원의 활동 영역은 부산시립예술단과도 어느 정도 겹친다고 볼 수 있다. 부산시립무용단이 한국창작춤과 전통춤, 그리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기에. 그래서인지, 국립부산국악원은 민속춤과 민속음악을 중심에 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춤극 형식의 야류 ‘문디아 문디아’(2014년), ‘굿이로구나’ ‘연희야 굿이야’(2018년) ‘통영춤의 본질과 미학’(2013년), ‘영남춤축제’(2017-2019년), ‘영남춤진경화’ 등이 부산국립국악원의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준 공연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의 전통춤과 국악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시작된 ‘왕비의 잔치’ 시리즈는 많은 관객을 동원했음에도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공연이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레파토리 공연으로 삼을 만한 예술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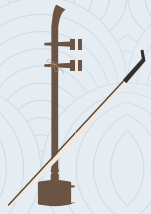
그리고, 그 후.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 국립부산국악원은 지역민을 위한 공연도 지속적으로 펼쳤는데, ‘정원의 풍류’(2014-2018년), ‘연지마을 연희마당’(2014-2017년) 등과 청소년과 수험생을 위한 공연, 어린이를 위한 음악극 ‘알콩달콩 우렁친구’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연은 국악원 인근의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민들이 삶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데 일조했다. 이는 국립부산국악원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개원 후 13년 동안 국립부산국악원은 기획공연과 상설공연,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과 대외 협력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과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자 노력했고, 부울경 지역의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해외 공연을 통해 지역의 전통음악과 전통춤이 가진 멋과 흥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한몫했다. 특히, 디아스포라 전통 예술인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준 점은 높이 살만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지 않은 점이 크게 아쉽지만, 국립부산국악원은 그동안 지역예술가와 단체가 교류하고 디아스포라 예술가와 단체가 교류하고, 지역주민이 교류하는 전통예술 플랫폼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여진다.

지난 13년 동안 국립부산국악원이 이룬 성과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많아 보인다. 우선 지역 예술단체와 협력 공연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국립부산국악원이 부산시립무용단, 부산무용협회와 함께 9년 동안 송년 공연으로 진행한 ‘춤으로 갈무리하다’(2010-2018년)는 이러한 시도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들 단체보다, 소통이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데는 따로 있는 듯하다. 동래야류보존회, 수영야류보존회, 고성오광대보존회, 통영오광대보존회 등 민속춤과 민속음악을 기반으로 한 단체들이다. 특히, 좌수영어방놀이와 남해안별신굿, 그리고 통영승전무와 동해안별신굿 등 바다와 어촌생활의 삶과 일상을 담은 전통 연행을 계승하는 단체와의 협력 공연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이를테면 이들 단체와

해양성을 주제로 한 연대 사업을 펼쳐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이들 단체와 국립해양박물관도 포함한 상시적 연대 시스템을 구축해 해양예술 벨트를 조성하고 해양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까지 나아가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또한 지역의 전통음악과 전통춤을 현대적 감각을 갖춘 포스트 전통예술로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과의 협업 작업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 또한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듯하다. ‘뿌리춤전’ ‘젊은안무가전’, ‘영남춤축제’의 창작 출판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일회성, 단발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디아스포라 예술가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그러하데, 단순한 교류 지원을 넘어 정기적인 공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훨씬 좋을 것이다. 이참에, 팬데믹이 끝날 때 즈음,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전통 예술인들은 한자리에 모으는 디아스포라 전통예술 축전을 개최하면 어떨까. 이는 전통예술의 미래 가치를 확장하고 새로운 전통예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이기에 말이다. 학술 및 발간사업은 전통예술의 전승과 보급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기에 국립부산국악원이 펼치고 있는 지역의 전통음악 음반화 작업과 지역의 원로 예술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아카이빙하는 작업 등도 눈여겨 볼만한 활동이다. 하지만 이 또한 울산과 경남 지역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아울러 임시정부 시절 지역의 전통예술에 대한 연구와 아카이빙 작업, 디지털화 사업도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숨은 민속춤과 전승 민요 혹은 구전 민요 등의 채집과 보존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보존과 아카이빙, 이를 활용한 창조적 계승 방안과 기획을 세심하게 마련해 포스트 전통예술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국립부산국악원은 옛 미군 부대의 땅을 개조해 조성한 부산시민공원 바로 옆에 있다. 장소가 가진 의미가 남다르다는 말이다. 장소성을 살리는 사업과 공연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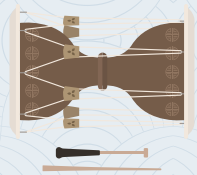
국립부산국악원은 올해 연수센터를 착공했다. 하루에 4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 1층~지상 5층의 꽤 큰 규모의 공간이라고 한다. 국악원 측에 의하면, 센터에는 대형 강습실 2개와 중형 강습실 2개, 그리고 작은 강습실 4개와 휴게실,



각종 연수 관련 공간 등이 들어서고, 아울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 등을 마련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2년에 완공 예정인 연수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과 연수, 교육 프로그램 등이 펼쳐질 것이다. 이는 국악과 전통춤의 대중화와 친밀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운영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심하게 짤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활용되면 좋겠다. 즉,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단체, 예술가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시민 스스로 문화적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의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 지역예술가를 배려하고 시민을 중심에 두는 운영계획이 수립되길 요망한다.



국립국악원은 중앙에 있고 국립부산국악원은 지역에 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느껴지는 거리감만큼 지역민과 국립부산국악원은 떨어져 있는 듯하다. 그러니 중앙과 지역의 관계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해 보인다. 우선 팔길이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은 중앙과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과 지역성을 재발견하라는 요구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립국악원은 지역 분권화의 과정을 밟아 가는 게 좋을 듯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지역을 잘 아는 원장을 영입하는 일이라. 국립부산국악원은 부산에 있지만, 부산광역시와 가깝지 않고, 문광부에 더 가깝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지역에 쉬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인 듯하다. 지역 예술계의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떨어 없애기 위해서라도, 원장과 일부 간부직은 실질적인 개방형 직위로 바꾸어, 지역을 잘 아는 지역 사람을 뽑아 그 자리에 앉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니면, 지역의 예술인력을 국악원 안에서 양성해 이들 자리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학예연구원 등이 지역 국악원의 원장을 비롯한 중요 보직을 차례대로 맡았다가 다시 원래의 일자리로 복귀하는 식으로 순환하는, 최근까지의 관행이 지속되는 한, 어쩌면, 국립부산국악원은 부산 예술계의 외로운 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선조들이 유물과 유적을 대하는 방법과 다른 의미의 문화 유산을 인식 하게 되었다. 그 안착은 우리 문화와 삶의 양식을 파괴하며 이루어졌다. 일본의 제국주의 만행은 식민지 조선인들을 향했을 뿐 아니라 관아(官衙)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 체계를 붕괴 시키고 삶의 장소와 질서를 자의적으로 교란 시켰다. 이에 결탁한 조선의 귀족들도 자신의 백성과 문화를 버렸다. 이 시기를 거치며 많은 유물과 유적이 훼손 되고 약탈 당했으며 그것을 복원하고 제자리로 돌리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관심은 자신에 대한 맹신일 뿐이었고 그에 따라 많은 과오를 남겼다. 결국 문화유산을 인식하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이해하는 일은 외부인들에 의해서도, 한 지도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해방 이후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에도 시간은 필요했다. 가령 박정희 시대가 호명한 민족과 역사는 군부독재를 정당 화하기 위한 국민 계도의 강제적인 수단이었다. 박정희의 전통과 유물, 유적에 대한 비뚤어진

한국 사회에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장을 열어준 분이 있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1993)의 등장인물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의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화예술만이 최고라고 여기던 풍토를 반성하게 했다. 그는 우리 문화 유산이 왜 아름다운가를 인문(人文) 환경에 따라 밝히고, 그에 얽힌 역사적 이야기와 그것을 만들고 지켜낸 사람들의 애정에도 큰 관심을 두었다. 그의 책은 문화유산에 대한 민도(民度)를 반영하면서도 민도가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문화유산에 대한 당대적 향유를 넘어 그것들이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후세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성장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이제는 유물들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유물이 온전하게 자신의 과거를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준다. 유물과 유적의 관리나 복구에서도 자기 시대가 할 수 없는 일은 후대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생각의 품도 넓어졌다. 결국 유물과 유적을 보전(保全)하여 선조들과 생활과 정신을 마주하는 일은 역사를 단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 것으로, 보편적 역사로서 후대와 공유하려는 노력이다.

현대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생각은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과는 사뭇 다르다. 더는 과거와 같은 공력을 들이지 않기에 훌륭한 정신과 만들새를 발견하기 어렵다. 불자들의 시주가 사찰의 가람배치를 흐트리고, 신도들의 헌금이 교회 건물을 거대하게 키우기만 할 뿐 종교적 진리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어렵다. 속세는 더하다. 자본의 횡포 아래 부동산 개발이나 관광, 유흥을 만족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문화예술이 자리 잡아갈 뿐이다. 발전된



기술을 가졌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움을 쏟을 대상을 알지 못하기에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명품(名品)이 없다. 우리 시대가 만드는 문화예술에는 올바른 사상(思想)과 정신의 충만함 대신 돈이 아로새겨져 있다.

최근 이견희 컬렉션 기증을 둘러싼 관심은 이를 보여주는 예이다. ‘이견희 컬렉션’의 규모와 그 작품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미술품 관련 수사에서 특검은 미술품과 관련한 삼성 측과 갤러리 관련자의 진술이 자주 반복되고 상호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었음에도 전부 수용하였으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미술품 구입 자금을 “이 회장 개인 재산”으로 규정 하였음”¹⁾을 통해 미술품 거래의 부정적 단면을 볼 수 있다. 어떻게 한 개인이 그렇게 많은 유물과 작품을 소장할 수 있었을까. 자본가의 개인 재산은 노동자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노동을 갈취한 것일 뿐이다. 더군다나 수집가로서 노력이나 희생을 찬탄할 필요도 그의 심미안이나 예술에 대한 안목을 치켜세울 필요도 없다. 그가 기증한 유물과 작품을 제대로 대우하면 되고 기증자라면 그의 이름이 남으면 될 일이다.

이견희 컬렉션 특별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고 이후 여러 지역이 앞다투어 이견희 미술관 건립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것에도 문제가 있다. 삼성가는 유물과 작품의 성격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근대 미술가는 작가의 연고에 따라 지역 미술관에 작품을

1) 김영희, 「삼성 특검을 돌아보다」, 경제개혁리포트, 2008

기증했다. 그 유물과 작품은 맥락에 맞게 분류되고 연구되어 일반에 공개하면 되고, 소장에 문제가 있다면 박물관과 미술관의 여건에 따라 수장고를 더 확보하면 된다. 한국과 서구의 근현대 작품들로 이견희 미술관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에 과연 그 작품들에 대한 이해나 사랑이 먼저 있었을까. 오히려 작품가격에 환호한 것이거나 이견희(삼성)로 표현된 브랜드를 앞세운 관광 효과 때문이 아니었을까. 국가문화예술기관이 수도에 집중된 현상을 비판하는 것이 옳고 이런 기관들이 지역에 더 많이 잘 정착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에 대한 근거로 이견희 미술관을 앞세울 이유는 없다.

국가와 지역이 다르지 않다는 것 역시 우리가 과거 유물과 유적을 대할 때에도 뚜렷하게 인식된다. 우리는 지금도 ‘불국토(佛國土)’를 만들어낸 신라인들의 정신을 만나기 위해서 경주에 가고, ‘백제의 미소’의 현신(現身)인 마애삼존불을 보기 위해 서산으로 간다. 몇십 년에 걸친 익산 미륵사지 발굴조사는 미륵사지 서탑을 해체·보수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출토된 유물들은 국립익산 박물관을 낳았다. 유물의 근거가 되는 특정한

장소는 그 지역을 품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이야기도 함께 품고 있다.

넓은 대지에 주춧돌만 남은 황룡사터는 지금은 폐사지로 남아 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찰 경내만 총 3만 평 되는 황룡사를 처음 짓기 시작한 것은 진평왕 14년(553)으로 17년 만에 담장을 쌓아 완성했는데, 장륙존상을 만든 것은 22년 후인 574년, 금당은 32년 후인 584년, 9층 목탑을 준공한 것은 92년 후인 645년이다. 그러니까 완공까지 걸린 기간이 장장 1세기를 육박하는 것이었다. 698년 벼락을 맞아 720년에 수리를 하고 754년에 에밀레종보다 세 배나 더 큰 종을 만들었을 때가 가람배치의 마지막 완공이라 본다면 그것은 200년이 걸린 셈이다.”²⁾ 이러한 역사의 교훈은 우리 시대를 되돌아보게 한다.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문화와 예술에도 이러한 접근법이 여전히 유효하다. 훌륭한 문화와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전승하기 위한 안목이 중요하다.

2) 유흥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 140쪽, 1993



예술+ ?

예술+공유

함께 하는 방법들 - 예술로 공감하기

김미희
문화기획 올아트22
대표



“새로운 작품은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지난겨울 끝자락 새봄이 오는 즈음에 복구에 있는 우리 동네 미술 작가들과 함께한 전시회의 소개 글 마지막 문장이다. 그렇다, 새로운 작품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호불호를 떠나 우리를 긴장시키며 작은 설렘과 동시에 떨림을 준다. 예술이 그런 것 아닐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

예술가, 특히 시각미술 장르의 특성상 개인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 예술가들은 모여서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것들에는 무척 당황해 한다. 혼자 하는 작업에 익숙한 시각장르 예술가들에게 필수적인 능력치 또한 얼마나 혼자 잘 감당하며 견뎌내느냐 하는 것이다. 외로운 고독과 현실적인 난관들을 홀로 헤쳐 나가는 일들이 이 예술가들에게는 힘들지만 익숙하다. 고통마저 감미로운 그 창작의 세계, 이렇게 예술을 스스로 즐기며 홀로 공유한다. 고흐와 고갱과의 불화는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고 외로이 작업하며 고난한 삶을 이어가다 쓸쓸히 홀로 생을 마감한 고흐가 마치 예술가의 전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 예술가들도 인간인자라 사람이 그림과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상대가 있었으면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 그들에게 평범한 대화는 쉽게 피곤해 하고 그 대화는 일방적이거나 불통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쏟아내는 다변가인 예술가이거나 아무리 물어도 대답 없는

목석처럼 앉아 있는 과묵한 예술가일 경우가 다반사이다, 자연스러운 경우들이다. 이런 예술가들에게 대화의 기술을 알려 줄 필요는 없다. 그들은 작품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강력한 매체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이미 월등한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무기인 작품이 있다. 그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오고가는 대화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시간의 축적들이자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된다. 지난 ‘공감의 시작, 아트 감동진’ 전시는 북구 공공미술을 위해 모인 35인의 작가들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아기를 재워두고 밤잠을 설치며 창작해낸 이야기들을 그려 냈고, 이제 막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아무 보호 장치 없는 사회로 던져진 어느 젊은 작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진 공간의 모서리들을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한 장치로 표현하여 이야기했고, 30년 넘게 홀로 창작 작업이라는 것을 계속해 온 중년의 작가는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선보이는 작품을 완성했다. 화업 60년을 이어오신 작가는 거의 매일 전시장을 찾아 다른 작가의 작품과 대화를 나누었다. 작품은 언제나 청춘이며 새로운 작품은 예술가들도 설레게 한다. 예술가들은 서로를 공감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예술가들이 예술을 공유하는 방법, 예술가들은 이렇게 작품을 통해 서로 공감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다.

“미술작품이 왜 그렇게 비싼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미술 실기 강의를 진행하면 종종 듣게 되는 우리 동네 주민의 이야기다.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술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가 잘 아는 흔한 방법 중의 하나인 미술실기 프로그램은 이렇게 주민과의 공감을 만들어 낸다. 전시회에 갔을 때 그리기 쉬워 보이는 작품을 보며 느끼는 막연한 감상, ‘이 정도는 나도 그럴 수 있겠는데..’ 라는 일반적인 상상은 막상 하얀 캔버스 앞에 서면 망망대해 무인도에서 바라보는 무한한 하늘처럼 넓은 화면에 막연하기만 하다.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열심히 내 일상을 예술의 세계로 이끌어 본다. 조금 익숙해 졌다. 하얀 캔버스에 과감히 검은 선을 그려보는 것, 붓 잡는 것, 물감을 섞어 새로운 색을 만들어 보는 것, 재료의 특성과 회화의 기술 등도 실력이 늘어 간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듯 보인다. 결국 인생을 걸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즐기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림이 비싼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소회를 종종 하게 되는 우리 동네 주민은 예술가인 강사 선생님의 그림을 다시 보고 예술을 공감한다. 다른 모든 예술 장르가 이렇게 주민과 공감될 수 있다. 예술을 공유하는 방법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우리 동네 주민은 외고집으로 소통불가이며 혼자서 작업하는 이기적인 예술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작업과정을 살짝 경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다면 창작의 고통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영역에서 예술가의 작업결과물을 공유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전시회, 음악회, 공연 발표회 등을 통하여 관람대상으로써 우리 동네 주민들이 대다수 이겠지만 이제는 1인 1예술 시대로 예술의 향유방법이 좀 더 적극적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며 우리 동네 주민들의 예술향유의 갈망과 요청들이 진심으로 절절하다는 것을 느꼈던 지난 겨울 북구에서 진행했던 우리 동네미술 주민 실기프로그램 ‘아트클래스-아트감동진’이 있었다. 우리 동네 작가들과 우리 동네 주민들은 예술로 공감하며 더 오래, 더 많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원한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술을 공유하며 서로 깊게 공감하였기에 그 아름다운 공감을 계속 나누기를 바란다.

예술은 생활 속에서 공유하고 공감되어야 한다. 예술을 생활문화 속에서 향유하기 위해서 모든 예술 활동들이 우리 곁에 어디나 있으며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직접 만지고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으면 더 할 나위 없겠다. 1인1예술의



생활문화시대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반드시 함께 열어야 하는 아니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는 필연의 문화사회이다. 이러한 생활문화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의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1인1예술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결정권자의 의지와 여기에 강력히 동의하는 실무진들이 필요하고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의 열정과 열망이 모여져야 한다. 예술가에게는 창작에 필요한 현실적인 제반환경과 제도적인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고 주민들에게는 열려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턱 높아 보이는 위압적인 공간이 아닌 우리 동네 사랑방 같은 그런 작업실, 연습실, 전시장, 공연장 등등이 규모는 작아도 많이 만들어 지면 좋겠다. 행정과 지역주민, 예술가의 공감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과한 설명과 안내들이 필요하다. 서로의 영역이 무척 다름을 먼저 인정하고 자신의 각 영역의 특성과 바램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을 자세히 아주 섬세하게 서로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 공감이라는 결론을 다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다. 예술,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동네 여기에서 하면 된다.

오늘날 예술이 어렵고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예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술에서 실패는 없다. 모든 열린 상상과 기발한 창의성으로부터 사회는 발전해 왔고 두려움 없이 실천하는 예술가들의 의지는 인간과 자연, 사회를 풍부하게 했다. 예술을 하는 이유는 대단하고 거창한 것만은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지, 인간과 자연, 사회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예술가와 예술가의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 예술가와 주민과의 공감, 자연 앞에 겸손한 예술가와 대자연과의 공감을 통해 지역에서 일상과 함께 누리는 예술, 누구에게나 열린 예술로 공감하기는 예술을 공유하는 함께하는 방법일 것이다.

지난 4월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연구와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를 발표하고 문화안전망으로서의 부산지역 문화 공간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 토론한 내용과 창작공간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도 지적한대로 한정된 조사대상과 다양한 정의와 형식,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온 예술창작공간을 한 번의 연구로 완벽하게 분석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전개과정과 현황을 정리한 최초의 데이터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연구의 첫 걸음이라는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향후 진행될 예술창작공간의 다양한 연구들도, 이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예술창작공간 정책들을 기대하게 된다.

부산은 지난 20여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장소에서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그 형식과 방법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도시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부산의 예술창작공간은 민간에서 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민간과 공공에서 예술창작공간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것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오늘날 예술창작공간은 예술가들의 창작 기반과 환경을 제공하여 예술계의 새로운 창작활력을 주입하는 본질적인 기능과, 지역만의 예술 체험 및 작품제작 실습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권 확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외부 효과를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연구 중) 위에서 언급한대로 예술창작공간에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능과 역할들이 주어지는 상황이 그 공간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시민들의 문화안전망과 예술가들의 창작안전망 둘 다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연구 내용에 나와 있듯이, 부산지역의 창작공간들은 여러 가지 목표와 미션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공간들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각각의 공간들이 도시 전체의 시각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개선 방향 도출에서도 나와 있듯이, 목표와 전략과제의 재구조화는 창작공간들의 미션을 더욱 구체화시킬 것이다. 또한 도시가 필요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효과와 운영전략은 각 공간별로 목표와 역할에 맞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따또가는 관용, 배려,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톨레랑스’ (Tolerance)에서 ‘또’를 가져오고 ‘따’로 활동하지만 ‘또’ 같이 활동한다는 의미와 거리나 지역을 나타내는 한자 ‘가’(街)를 합성하여 우리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부산의 행정 중심지였던 중구 일대 주요 행정기관의 이전과 도시 확장으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채 공동화 현상으로 생활공간이 변모되었고, 빈 점포 및 사무실 등 유휴공간이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역사적인 공간인 40계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인들을 모아 사무 공간들을 창작공간으로 변모시켜 지역 예술가들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지역문화의 재발견과 도시재생의 목적을 가지고, 시각예술, 문학예술, 공연예술, 커뮤니티 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따또가 소개 리플릿 중에서)

2010년도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또따또가의 목표는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지역네트워크와 협업을 하여, 문화적 도시재생을 이루고,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이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그 결과로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예술가들에게 3년간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3기 진행하는 것이 첫 계획이었다. 3기를 종료하고 그 동안 자립한 예술가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협동조합이 현재 4기의 운영주체로 선정되어 또따또가를 운영하고 있다.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계획은 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1차 목표는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 목표와 운영전략을 현재화하고 현실화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내년엔 5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도시 전체의 시각에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인 평가와 환류, 프로젝트의 현실화 그리고 목표의 재설정 등의 과정이 같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보는 부산의 문화예술 공간정책을 만들어가는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서로를 존중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운영자와 공공운영자,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이 서로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획에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공간의 설계와 운영은 단지 희망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된다.

5~6월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부산문화재단

바야흐로, 문화다양성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5.10)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수)은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구포역 광장 일대에서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우리들의 광장』을 개최하였다.

“청년들의 가능성을 실험하세요” (6.3)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수)은 청년 UNIVERSTIY 사업을 6월부터 본격 시작하며 사업에 참여할 부산 지역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대전환의 시대, 미래 문화정책의 역할과 방향 모색 (5.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 이하 문광연)과 함께 최근의 사회·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의 정책 수요를 예측하고, 미래 문화의 역할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8일 (금) 오후 3시 30분에 국립현대미술관(서울) 대강당에서 미래문화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예술과 기업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5.2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5월 28일(금)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메세나 협회(이하 메세나협회) 김희근 회장과 만나 기업의 문화 예술 후원 활성화, 예술과 기업의 협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문화정보원

한글과컴퓨터 - 한국문화정보원 개방형 문서(HWPX) 전환으로 공공문화데이터 개방 가속화 (5.27)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 이하 한컴)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이 공공문화데이터 개방을 위해 협력한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에 발맞춰, 문정원은 한컴과의 민관협력을 통해서 개방형 문서 형식인 HWPX 전환에 적극 동참하여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전걸음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코로나19로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액도 줄었다 (5.27)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이 지난해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액을 조사 분석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액은 약 2조 3천억원으로 2019년 2조 6천억원에 비해 약 13%가 감소, 코로나19로 지난해 국민 문화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 문화다양성 주간 온라인 캠페인 개최 (5.21)
올해 7회째를 맞은 ‘2021년 문화다양성 주간’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인종과 문화, 지역, 젠더, 장애, 세대차이 등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특별강연과 문화다양성 큐레이션, 대국민 캠페인을 준비하고, 지역문화재단 25곳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5.31)
예술의 영역이 온라인 환경으로 확장되면서 저작권 공정이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규, 이하 한저위)가 문화예술분야 공정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 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개최 (5.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 이하 교육진흥원)은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맞아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를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5.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이하 예술로 사업) 참여 예술인 600명에게 7억 2천만 원의 활동비를 선지급하고, 지역 예술인 참여를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원문화재단

강원도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위해 머리 맞댄다 (5.27)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강원도민일보(사장 김중석), 강원지역문화재단협의회는 5월 28일 국립춘천박물관 대강당에서 ‘2021 강원문화포럼’을 개최하였다. 강원도내 시·군별 문화도시 사업을 강원도 전체의 문화 역량으로 키우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21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행동 경남’ 프로젝트 선정! (5.3)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 이하 진흥원)은 5월 3일 ‘2021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행동 경남’의 최종 프로젝트 7개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주제로 한 이번 프로젝트 공모에는 총 32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아이디어 공유 포럼-프로젝트 컨설팅-최종 선정 워크숍’을 거쳐 선정된 7개 프로젝트에 총 8천만 원을 지원한다.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광주대 문화예술 도시 역량강화 공동사업 추진 (5.26)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대학교가 문화예술 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공동추진한다.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2020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발표 (5.24)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유연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가 문화예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2020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2021년 세종시문화재단 문화주간 행사 개최 (5.20)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은 오는 20일부터 「2021년 세종시문화재단 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인천문화재단

인천 지역문화재단 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6.1)
(재)인천문화재단,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재)인천광역시서구문화재단, (재)연수문화재단은 ‘인천 지역문화재단 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6월 1일 (화) 오후 3시 30분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체결하였다.

신미양요 발발 150년 기념 <19세기 국제 정세와 신미양요> 학술회의 개최 (6.8)
인천문화재단은 신미양요 발발 150년을 맞이하여 6월 12일(토) 13:00~18:00 <19세기 국제 정세와 신미양요>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문화자치와	
문화분권	

Contents

칼럼	지방분권, 왜? 무엇을? 어떻게?
이슈 1	문화분권
이슈 2	문화자치 문화분권의 경로 찾기
이슈 3	문화분권시대, 문화재단 구성원의 자치역량은?
예술+협력	문화예술 현장에서 기대하는 동남권 문화협력
정책보고서 돌아보기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부산연구원

부산시 공공주도 노후주거지 재생 실행방안 연구 (6.9)
부산지역 노후주택 및 공, 폐가 증가에 따른 도심 주거 환경 악화에 대응해 공공주도 노후 불량주거지 재생 실행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원도심 중, 동구를 공공주도 노후주거지 시범지로 재생을 추진하고 부산형 순환주거·도시재생 정책으로 발전 시켜 가자는 것이다.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 바다를 건강하게 즐기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5.3)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정희준, 이하 공사)는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약 두 달간 다대포, 광안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송정,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봄 시즌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금정문화재단

금정구 '법정 문화도시' 향한 열띤 논의 펼쳐 (5.6)
(재)금정문화재단(이사장 정미영)은 5월 3일 금정예술 공연지원센터에서 '제1회 금정문화포럼'을 열고 금정구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금정문화재단, 지역예술인 DB 구축한다
(재)금정문화재단(이사장 정미영)은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 현황을 검색할 수 있는 웹 사이트 '아티스트인 부산'을 운영한다고 6월 3일 밝혔다.

부산진문화재단

부산진구 문화도시 포럼 개최 (5.26)
부산진구 시민들이 생각하는 문화도시를 발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문화도시 포럼을 지난 5월 26일 개최하였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사업 본격 추진, 도내 8개 기관 손잡고 앞장서 (5.4)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이하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몽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기상), 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상덕),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소장 신옥주),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대표 송원),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지식공동체 지지배배(대표 김은혜) 등 8개 기관 및 단체는 지난달 29일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장애인문화예술의 발전과 진흥(6.3)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배은주)가 지난 6월 2일 예술공간 이아에서 장애인문화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장애인 예술 매개자 양성" (5.9)
충북문화재단이 장애인 예술 매개자 양성 과정인 '질문의 주인을 찾습니다'를 시작한다. 올해 '충북무지개 다리사업'의 일환인 이 과정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여건을 개선함이 목적이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이번 11호에서는 일반시민, 문화기관 및 문화재단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말하는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의 이슈들을 엮어 보고, 올해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첫 연구결과물을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Contents

- p.75 **칼럼**
[지방분권, 왜? 무엇을? 어떻게?]
박재울(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p.77 **이슈1**
[문화분권]
이청산(한국민예총 이사장)
- p.82 **이슈2**
[문화자치 문화분권의 경로 찾기]
김영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화전문위원)
- p.85 **이슈3**
[문화분권시대, 문화재단 구성원의 자치역량은?]
조선희(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위원)
- p.88 **예술+협력**
[문화예술 현장에서 기대하는 동남권 문화협력]
장원재(사회적협동조합 김해문화네트워크 이사장)
- p.90 **정책보고서 돌아보기**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
이지훈(필로아트랩 대표)
- p.93 **7~8월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COLUMN

칼럼

지방분권, 왜? 무엇을? 어떻게?

박재울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최근 정부는 이견회 전 삼성 회장 소유의 기증 미술작품들을 소장할 미술관 건립 장소로 서울을 선택, 발표하였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문화체육부장관이 ‘국민 접근성’을 주요 고려 요소로 삼았으며, 당연하다는 듯 서울 건립을 공표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촉발된 4차 코로나 대유행 사태는 11.8%의 국토 면적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 과밀이 곧 위기임을 응변하고 있지 않은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에 이르는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이 가운데 97곳, 92%가 비수도권이고 부산 초저도 위험지수 0.5에 가까운 0.69다.¹⁾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되는 악순환이 아닌가. 지속되는 ‘공정’ 논란도 특권적 사교육을 통한 부와 신분의 세습이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견회 미술관’의 서울 건립은 불난데 기름 붓는 격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다. 또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40개 지역이 유치 의사를 표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결정, 통보만 있었다. 적나라한 중앙집권의 모습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라는 한 지역 집중의 일원적 국민 접근성이 아니라 여러 지역 분산의 다원적 접근성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일극적 발전에서 다극적 공간 발전을 위해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에서 지방분권과 권역별 분산, 분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제반 분야의 총체적인 분권, 분산, 분업의 3분 전략, 실행이 절박한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이는 우리만이 아니라 80년대를 거쳐 동서냉전이 와해되는 90년대를 지나면서 본격화된 ‘세계화, 지방화’(글로벌라이제이션)라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핵심은 사람과 업무와 재정이다. 부산은 세계 5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가진 해양도시다. 그래서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나아가는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부시장도 없다. 법령상 부산은 두 명의 부시장 밖에 둘 수 없다. 인구 800만 이상만 3명을 둘 수 있어 서울과 경기도만 해당된다. 부산시 실, 국 단위 등 주요 조직을 새로 늘리려면 일일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람과 업무를 자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에 걸맞은 제도, 규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조례가 그것이다. 그런데 조례는 지방자치법 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얽매어 있다. 이른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만들고 고치는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안에서만 지역의 모든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치입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에는 법제처에서 파견한 직원이 조례 제, 개정 과정에 중앙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실상 감독에 해당하는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자연히 고유한 자치업무의 비중도 중앙정부 업무에 비해 적다. 중앙정부 사무와 지방사무가 대략 6:4 정도인데, 공동사무, 기관위임사무 등으로 되어 있고 지방사무는 집행 중심으로 되어 있다. 스스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자율적인 체계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재정 역시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수입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6.4:23.6(2019년 결산 기준)이다. 지출은 지방정부가 60, 중앙정부가 40의 비율이다. 더 많이 쓰는 지방정부가 수입은 적으니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게 되고 일종의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사람과 업무와 재정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중앙집권 구조에서 지역민의 의사와 요구가 다원적으로 반영되기 보다는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1) 한국고용정보원, 「전국 지역소멸 위험지역 현황」, 2020.5.

수도권 중심으로 주요 정책이 이루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이건희 미술관'도 그 중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중앙 집권 체계를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 시키지 않으면 수도권 삶의 질도 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사교육비 증가, 환경, 교통 등 생활여건은 악화일로로 걸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농어촌, 모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곧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바로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 그 상황이다.

이런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참여권 등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조례 제정범위를 최소한 "법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정도라도 보장해야 한다. 지속적인 지방소비세 확대와 일정한 자주세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지역 간 세수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재정조정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당장 일일이 사업항목과 범위를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국비에 맞추어 지방비를 배정해야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을 지역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해양부시장, 문화부시장 등 지역 조건에 맞게 행정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투표, 주민발안 등 주민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속히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가운영 체계 자체를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운영의 기본 틀인 헌법을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게 고쳐야 한다. 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 넘는 세월의 역동적인 사회적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 그 중 핵심이 바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내용이다. 우리 헌법은 부칙을 제외하고 총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117조, 118조, 단 두 개 조항뿐이다. 91년 지방의회 부활, 95년 지방정부(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통한 지방자치 시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 주민자치권, 국민참여권 등의 신설, 40조의 국회만의 입법권 독점, 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대한 법률 독점권 개선 등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이 모두 공약하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운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아 자동 폐기되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내용에 정치권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결과였다. 권력구조 개편은 민감한 사안이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미 예상된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중앙집권과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와 위기를 두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정파간 쟁점이 적은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우선, 먼저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과거 헌법 개정은 집권자들의 권력유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 되어온 데 대한 거부감, 그리고 헌법은 법률과는 달리 아주 뜸하게 손보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인식이 남아있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제 독재적 권력이 대한민국에 발붙일 곳은 없다는 것은 자명하고, 사회변화와 시대전환의 역동성이 이제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도 좀 더 유연하게 접근, 현실과 다가오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시 개정이 되면 좋겠지만, 이미 검증되었듯이 그 과정이 지난하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개헌부터 1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내년 3월에는 20대 대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이어진다. 다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지방분권개헌, 관련 법령 제,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 지방분권형으로 국가 운영 체계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여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같은 다원적이고 다극적인 지역 공간 창출로 주민의 삶, 국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더 성숙한 공동체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이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단체만이 아니라 각 계 시민 사회의 강력한 연대와 집결이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ISSUE 1

이슈1

문화분권

이청산
한국민예총
이사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국가기증 이견희 소장품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4월 고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족이 문화재와 미술품 총 23,181점(국립중앙박물관 21,693점, 국립현대미술관 1,488점)을 기증한 이후, 문체부는 별도 전담팀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견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총 10차례 논의를 거쳐 기증품 활용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고 단계별 활용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위원회가 정한 기본 원칙은 ①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기증의 취지 존중과 기증의 가치 확산 ② 문화적용·복합성에 기초한 창의성 구현 ③ 전문 인력 및 국내외 박물관과의 협력 확장성 ④ 문화적·산업적 가치 창출을 통한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이다. 그리고 결국 서울의 용산과 송현동 두 공간에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소장품관(약칭 : 이견희 기증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두 가지 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일명 이견희 컬렉션의 유치를 위하여 많은 지방정부가 과열경쟁을 했다. 위원회가 정한 첫 번째 원칙인 국민의 문화향유기회의 확대도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시 되었다고 여긴다. 한국은 도시전체를 새로이 만든, 빌바오 효과를 얘기한 스페인처럼 넓고 광활한 국가가 아니며, 전국이 3시간이면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가진 국가이다. 역으로 수도권에 많은 국민이 산다고 문화를 수도권에 집중하여 수치적으로는 그럴지 모르나 문화향유기회가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향유는 균형발전을 동반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작은 나라를 더 작게 만들고 있는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한국의 현실에 기반한 주장이다. '한국식 빌바오 효과'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했다. (빌바오 효과란 문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을 뜻한다. 쇠퇴해가던 스페인의 지공업도시 빌바오가 1997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시설인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경제적 부흥을 가져온 데서 비롯된 용어이다.) 문화향유의 균형발전이 바로 '한국식 빌바오 효과'일 것이다. 이 문제는 총 10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식 빌바오 효과'를 염두에 둔다면 한국 어느 곳에 '이견희 기증관'을 두어도 우리 국민들 모두는 충분히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누릴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역시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핑계로 들린다. 결국 보다 담대한 논의를 통하여 문화분권과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타파하는 결과가 나와야 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명칭의 문제이다. 왜 새로이 설립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이건희 기증관'으로 한정하는지 의문이다. 마치 국내 최대 기업에게 찬사를 보내기 위함 같다. 이건희 회장 유족의 큰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좋은 계기가 되어 많은 이들의 국가기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란다면, '이건희 기증관'이라 명명할 것이 아니라 신축 국립현대미술관의 내용에 담겨야 할 문제다. 이후 이어질 국가기증의 수용을 염두에 두어도 그렇다. 또한 재벌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판을 감안할 때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본다.

이것은 정부가 문화정책부재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네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개헌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헌법 제117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등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취임초의 공언대로 개헌이 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2013년 말 국회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매우 의미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의 골자이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성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지역문화 자치와 지역문화 분권이다. 국가가 자유경쟁시장에 끊임 없이 개입하고 간섭한다면 지역 간 불균형현상 해소는 영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이 '지방 분권'이다. 지역주민이 도시의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가 실행되는 도시가 미래도시의 모델이다.

다시 말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의 의미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의 보완과 문화 분권, 지역문화의 자율성 강조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체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이라는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은 과연 가능한 일이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핵심적 가치이자 지향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이라는 개념 중 지역문화진흥법 등을 통해서 지역에 핵심적인 가치와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자치로의 이행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과 자율성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분권은 여러 가지 난제를 가지고 있다. 문화분권의 최우선 목표는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민간기구와의 협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 관주도의 문화정책은 한계가 있다. 또한 문화분권의 경우, 현재처럼 중앙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권한과 문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및 집행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단계적으로 이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문화분권은 말 그대로 헛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역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때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은 매우 요원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이양이 된다 하더라도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문화분권은 문화자치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핵심적인 가치이자 지향점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이다.

문체부의 위상과 역할 재구성, 산하 기관들의 통합도 필수이다. 문체부는 국가 문화행정의 컨트롤 타워이자 플랫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고, 직접 사업은 산하 기관과 지역으로 이관해야 한다. 문체부와 광역문화재단간 새로운 관계 설정도 요구된다. 수직적인 사업 전달 방식이 아닌 다원적이고 자율적인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집행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한 문화 분권', '지역의 자율과 책임' 등의 기본원칙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공모방식을 지양하고 협력의 관점에서 지역이양 사업을 대폭확대, 광역 단위의 정책 수립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지역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 분야 국정과제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선정하고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올바른 지역문화의 정착은 지방분권의 큰 틀 속에서 '문화분권'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국민 개인이 주체적으로 지역 공동체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국민이 문화 예술 향유의 대상에서 문화 예술 창조의 주체로 거듭나는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 지역이 스스로 지역 문화 예술이 주체가 될 때만이 지속적인 지역 문화와 예술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지방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 인구감소, 고령화,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자치단체들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 등 지방자치와 분권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재차 확인했다.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며 책임지는 문화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이다. 이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핵심 가치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지역과 세대는 물론 계층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약화시키며 주민 참여와 의지에 의한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라고 규정하며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다양한 문화진흥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국가원리에 입각한 현대국가는 문화의 자율성 존중과 문화의 개방성, 다양성, 존중이라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 예술의 진흥과 지역문화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문화적 중앙과 문화적 지방의 해소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의 균점과 지역 문화의 자율성 확립이 중요하다. 전자는 지역 간에 있어서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평균적 수준의 문화를 지역에서 균점하며 국내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고 후자는 각 지역에서 독자성을 가진 문화를 창조하며 국내에 있어서의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곧 지역문화의 진흥이자 문화 분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의 문화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그 이전에는 국가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문화예술활동의 진작 문화 복지의 증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전보다 지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의 문화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확보도 점진적으로 진전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원, 문화생산, 문화소비 등이 중앙에 집중되어 중앙과 지방의 문화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문화의 중앙 집중을 분산시키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분권화의 노력이 문화 분권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와 예술의 분리와 더불어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전문성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방지하여 지역문화재단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역문화재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산하기관, 사업 대행기관이 아니다. 시대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시민이 재물을 모아 자율적 독립적으로 예술을 지원하도록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문화재단 또한 '예술가는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행정가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처럼 문화재단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행정이라는 이름의 관행의 굴레 갇혀 가능성도 불가능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술의 가능성마저 행정의 편의성으로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지점이 있다.

자신의 창의성으로 작품을 만드는 건 오롯이 예술인의 몫이지만, 예술인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건 사회의 몫이 아닐까. 그 몫을 문체부와 문화 재단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을 이야기 하려면 먼저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문화를 해석하고 정책화하는 방향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한 협의의 문화예술영역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근래 문화정책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문화기본법에서 정의한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개념화가 전제 되었을 때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이 자기 위상과 역할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자치, 포용, 혁신의 3대 핵심축을 중심으로 지역내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 했다.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중 하나로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문화의 개념과 역할의 확장은 도시전략으로서의 문화를 전제 하기도 한다. 그만큼 문화에 대한 접근과 방법론, 역할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라 할만하다.

그렇다면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다양한 문화정책과 사업의 대전환의 시기가 오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동안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에도 변화가 시작 되고 있음을 많은 지역에서 사례로 보여 주고 있다. 예술중심이거나 전통문화 중심 또는 기득권을 형성해온 지역 내 정치적 영역 까지를 넘어서 시민주체들이 등장 하고 있다.

이는 세대나 영역을 넘어서는 시민주체성과 역할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면서 가능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문화생태계의 역할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문화자치력을 강화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 기대와 해답의 단서가 되고 있다.

지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해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시민주체들이 자신의 생각과 욕구들을 전개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민 누구나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전제로 가능해 진다.

그렇게 다양한 시민주체들이 등장 하고 있다. 다만 우려할 지점은 무작위의 몇 사람들이 등장해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구현 하려는 구조를 시민문화생태계로 등치시킬 수는 없다.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화 단계와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방법론들이 등장해야 한다.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문화적 삶”이란 것이 이제는 선진국으로 공인된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삶의 질이나 문화예술을 이야기하기에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제대로 말 한번 꺼내기 힘들었던 시절을 다음 세대에 유전처럼 물려 줄 수는 없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계급유전의 시대.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은 이제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개천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야 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바다에서 용오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을 보듯이 개천이 아니라 바다와 같은 깊고 넓은 기회의 장이 만들어 져야 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와 각성으로부터 새로운 생태계가 정치적 입장과 자기 삶의 철학을 갖고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지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문화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각성과 의지와 욕구를 만들어 가는 문화적 방법론들이 그간의 다양한 사례들이 그 증거가 되어 줄 것이다.

그것은 문화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해석과 설계가 지역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꾸려지고 만들어 질 때 가능한 일이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방법들이 제시될 때 그것은 현실이 될 것이다.

홍보도 하고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만들었다고 자기역할을 다했다는 행정과 공공의 치부는 이제 다른 접근법들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에 있을 때만 운영되는 문화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방식의 전환, 참여와 경험이 만들어 가는 욕구와 삶의 변화를 해석하고 응원하는 과정. 일터와 삶터를 문화적인 공간이나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그 과정에 관계를 통한 확장과 역할 재설계등 욕구와 여유를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을 사는 모든 이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행정과 공공의 각성이 현장의 참여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주민은 대상에서 참여자로 참여자에서 주체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문화 자치의 경로이고 우리가 꿈꾸는 문화적 삶이 실현되는 도시에 대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다.

문화자치와 더불어 문화분권의 경로는 이런 자치영역의 성장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정책지향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 협력과 연대의 행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분권을 위해 재정이양은 진행되고 있으나 정책이 같이 공유되는 수준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들이 모두 긍정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이나 방향성, 로드맵 등은 수정

과 보완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것을 지역 현실에 맞게 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획일화와 균질화를 넘어 지역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존중 되어야 한다. 정책목적이라는 것을 넘어 개념과 방법론들이 무시 될 때 사업의 가치나 효과를 기대하기 점점 힘들어 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런 과정은 사업예산만 남고 정책 목적과 지향이 무너지면서 문화영역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책과 예산이 이양 될 때 사업의 정책목적이나 흐름, 체계 등이 같이 공유되고, 실천의지들이 만들어 져야 한다. 정책 목적이 충분히 공유되고 지역의 현실에 맞게 재구조화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산과 사업명만 넘어 가는 것은 분권의 방향이 아니다. 자칫 예산만 넘어가고 예산이 정치적 목적이나 왜곡된 방향으로 활용될 우려가 많다는 것이 지역 문화예술계의 아우성이다. 그런 과정조차 공유되지 못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등장 하고 있다. 이를 다시 조정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찬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방 이양 사업임에도 지자체가 신청하면 선정하여 유휴공간의 문화재생의 방향성 연구를 해주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지방 이양된 사업들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 지고 정책목적에 맞는 방향

으로 유지 성장하게 할 것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확실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정치권의 의지가 행정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이 등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기초 지자체에서는 지방이전을 안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분권의 로드맵에 대한 문화부의 의지나 정책적 실천방안들은 현재까지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광역단위로부터 실천하는 분권의 방법과 실천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초와 함께 논의와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상향식 방식의 분권 구조가 가능 할 것이다.

기초와 광역에서 먼저 실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순서이고 그 순서에는 자치역량의 강화가 기본이자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며 문화자치, 문화분권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모든 자치.분권 경로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광역을 움직이는 담론의 출발선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광역도 그런 경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의 준비를 철저히 하기를 바라며 제도와 재정과 추진체계에 대한 담론을 기대하며 본고를 마무리 한다.

#1

2017년 1월, 제주재단은 재단 사상 최초로 3개의 본부를 설치하였다. 이는 두 가지 획기적인 변화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1년 설립 이래 25명 내외로 묶여 있던 정원이 47명으로 증원된 것과 17년 동안 제주도 정기 인사에 맞추어 파견되던 사무처장제의 폐지가 그것이었다. 제주재단의 숙원이나 다름없었던 이 두 가지 이슈 혁파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그나마 증원 문제는 설립 당시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한 업무량과 예산액을 근거로 풀 수 있었지만 본부제 도입은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와 반대로 한 달 가까이 정체를 겪어야 했다. 정원 51명부터 1본부 편제가 가능하다는 지방공기업법을 들어 기껏해야 정원 47명인 재단의 경우 3본부 설치는 있을 수 없다고 기염을 토하는 공기업계를 설득하는 일은 지난한 과정이었다. 재단은 공기업이 아니며, 정원 규모와 상관없이 이미 본부 체제를 갖춘 타 광역재단의 사례를 제시하고, 늘어난 사업량과 예산안을 근거로 효율적 관리와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본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단의 주장이었다. 동시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에 따라 주무부서인 문화정책과와 이미 협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 공기업계가 태클을 거는 것은 재단을 칸막이 행정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변했다. 어쨌거나 공방은 일단락되었고 제주 재단의 사무처 폐지 및 공무원 파견 폐지와 본부제 도입, 정원 증원 등은 제주재단 17년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될 만 했다.

#2

2021년 7월, 재단 경영기획실장에 제주도 공무원이 파견되었다. 2020년 8월 기존의 본부제를 폐지하고 경영부서 3팀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과 동시에 직원의 약 80%를 이동시키는 인사발령 이후 11개월만이었다. 외부 인사영입설, 공무원 파견설 등이 파다했으나 이렇다 할 조치 없이 1년 가까이 공식으로 방치되다가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공모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사측이 제주도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올해 3월 출범한 재단 노조는 사측의 공무원 파견 요청은 리더십 부재와 자립 경영의지 박약에서 비롯된 경영부실의 단면이라고 판단, 4차례의 성명서 발표, 1인 시위, 집단 시위 등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 요청은 철회되지 않았고, 사측에 손을 들어 준 제주도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명분으로, 7월 2일자 정기 인사에서 재단 경영기획실장으로 4급 서기관 공무원을 파견하였다. 이로써 파견 공무원 신분의 경영기획실장은 인사, 조직, 예산, 대외협력, 경영평가 등 기관 경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영기획부서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제주재단이 자율성이니



2017년 한광연 정책워크숍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정책'

독립성이니, 광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이니 등등을 부르짖으며 혁파했다고 믿었던 이슈들은, 2021년 8월, 다시 우리 코앞에 버섯이 버티고 있다. 눈 깜짝할 사이,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퇴행하고 있는 중이다.

문화분권 시대와 문화재단. 이런 주제라면 대체적으로 문화분권 시대를 맞아 문화재단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글이 되어야 할 성싶다. 문화분권이란 무엇인가, 문화분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의 상호관계는 무엇인가 등등의 꼬비우스띠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논의들의 가닥을 따라가다 보면 문화재단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동안 한국광역재단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정책포럼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목 놓아 주장했던 내용들일 터이다. 그러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라는 질문에는 딱히 내용을 만한 답변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우리가 그동안 유체이탈식 사고와 화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늘 '문화재단은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2018년 한광연 정책워크숍
'문화분권시대, 광역문화재단 돌아보기'



당위성을 내세워 문화재단을 주어삼아 사고하다 보면 영혼 없는 '기관 역할론'에 빠지기 십상이다. 문화행정서비스 체계 속에 위치한 문화재단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그 수행의 주체는 누구인지, 문화재단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탐구의 기억이 우리에게 없다. 물론 이러한 탐구가 쉽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혹은 이사장이라는 이름의 기관장의 역할론과 자질론에 대한 언급 자체가 민감 사항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문화재단 조직원에 대한 엄정한 분석과 평가에 직면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탓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의 산물로서 설립되기 시작한 문화재단의 역사가 '꺾인 반세기'가 된 지금, 우리는 내부를 향해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되었다. 문화재단이 주어(주체)가 아니라 문화재단 조직원이 주어(주체)가 되는 질문,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성찰에 바탕을 둔 질문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기관장의 리더십만큼이나 문화재단 구성원이자 지역문화 예술 생태계의 일원으로서의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진정한 지역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는 지역이 문화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우선 우리는 스스로를 조직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의 조직 자치 역량은 충분하지 성찰해야 한다.

글의 첫머리에 제주재단 사례를 든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1과 #2에 나타난 기관장의 리더십의 양상과 역할 차이는 극명하다. 이를 두고 기관장의 자질론을 애써 강조할 필요는 없으리라 믿는다. 다만 문화재단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거대담론에 의해, 사회적 가치 판단에 의해, 탁월한 리더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명백해 보인다. 더욱이,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리더(기관장)의 시간'은 짧다. 이에 비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조직 구성원의 시간'은 그보다 훨씬 길고 이는 곧 '재단의 시간'을 이룬다. 핵심은 '조직 구성원의 시간'이 갖는 확장력이다. 조직에 발생한 쟁점이나 현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스스로 해결의 주체로 변화해가며, 이 경험치를 바탕으로 자발적 위기해결 및 갈등조정, 지속가능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확장력이야말로 조직 구성원의 자치역량의 본질이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2 과정에서 제주재단 구성원들이 얻은 성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결국 공무원이 파견된 결과만으로는 실패사례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단 노조를 주축으로 한

적극적 현안 대응 경험이야말로 조직 구성원의 자치역량 필요성 인식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파견 이후 재단 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재단이 공무원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개정을 청원하였다. 물론 그 결과도 성공적이지 않았다. 도의회가 청원을 수용하는 대신 제주도로 토스했고, 제주도는 "도와 도의회 등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규정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반전, 만회할 수 있는 힘 역시 '조직 구성원의 시간'에 있다고 본다.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문화정책은 변화하고 이에 따라 문화재단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 역시 변화한다. 변화할 뿐더러 나날이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유체이탈식 문화재단 역할론만으로는 그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기관장의 리더십이 문화재단의 역량을 규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문화재단 구성원은 어디에서 있는가, 누구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문해야 한다. 조직의 자율성(自律性)은 조직 구성원의 실천적 자강(自強)으로 학습 배양된 자치(自治)역량에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예술+ ?
예술+협력

**문화예술 현장에서 기대하는
동남권 문화협력**

장원재
사회적협동조합
김해문화네트워크 이사장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1970년을 기점을 시작으로 ‘일일생활권’이 시작된지도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오고 있다. KTX가 개통되면서 ‘반일생활권’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세계를 한시간내로 이동 시키겠다는 등 정말 빠르게 기술도 삶도 발전하고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참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빠른 발전 속에서 중앙화, 집중화는 더 가속도가 붙고, 지역쇠퇴, 지역소멸에 대한 이슈는 이제 익숙하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다.

어릴 적, ‘개천에서 용난다’를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용이 될 수 있다. 중앙으로 가자. 세계로 가자 등 열정과 욕심을 불태우면서 ‘용트림’을 하며 살아온 듯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큰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이유로 세파에 등 떠밀려 나의 주관이 아닌 선택을 하거나, 내가 있는 지역에서 늘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온 듯한 착각, 어쩌면 크게 의미 없는 몸부림으로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세뇌로 탈출구만을 찾지 않았나 반성도 해본다.

오랜시간 김해를 중심으로 실용음악학원, 대안학교, 대학강의 등을 하면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지역에 남아 함께 다양한 작업들을 해보자는 도전을 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목표는 인서울, 인수도권이었기에 그 이야기들이 쉽게 꺼내지지 않았고, 결국 남는 이들도 많지가 않았다. 모두가 공감하듯 이러한 이유들이 결국,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다양한 인프라 때문이다. 볼 것, 배울 것, 놀 것들이 충분하고,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다. 그것이 늘 중앙이 부러운 이유지 않았나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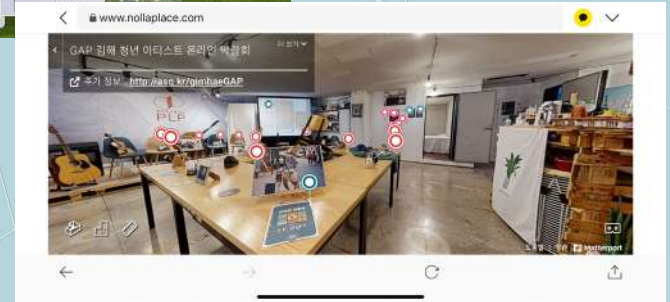
2006년, 그래도 내가 있는 곳에서 무언가를 도전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김해뮤직페스티벌 연어’를 기획하며, 경남출신의 뮤지션들과 경남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의 축제를 만들었다. 이 축제는 올해 16회를 맞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주도, 시민펀딩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참여하는 뮤지션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많은 뮤지션들이 연락이 오기도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소개되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뮤지션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조금은 더 좋은 무대, 보다 차별화된 협업들을 해보고 싶었지만, 늘 아쉬운 부분이 지역내에서 필요를 채워내기가 충분하지 않았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행안들이 있어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들은 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비용이나 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시작한 것이 작은 클럽형태의 공연장사업을 하면서 재즈뮤지션들의 공연을 진행하는 계기가 생겼다. 주로 해외뮤지션들의 내한공연이었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지역이나 지리적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참 다름을 느끼면서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인들은 서울이나 김해를 크게 다르지 않게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시기 이후로 몇몇 부분에서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다.

탈중앙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지역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등의 이야기들이 거론되면서 문화예술분야에서도 기대들이 많다. 어쩌면 조금 소외받고 있던 지역예술가들의 활동기회가 많아질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 다양한 시스템적 지원을 통한 지역예술의 퀄리티 상향평준화등에 대한 기대가

GAP김해청년아티스트온라인박람회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 '녹음없DAY'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동남권 메가시티의 조성은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미래지향적 대안임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코로나 팬더믹이 시작되고, 벌써 2년째 꺾일 조짐이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나 문화예술분야는 오프라인 기반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급변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대하여 대응하는 힘이 쉽지만은 않다. 미디어나 기술기반의 융복합 콘텐츠 등의 콘텐츠 역시 중앙집중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지역붕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다. 동남권 메가시티 권역에 있는 경남, 부산, 울산지역은 각 지역별로 차별된 인프라들이 조성되어 있고, 협업 시 큰 시너지를 내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심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앞으로의 트렌드는 문화예술인들이 독자적으로 살아남기보다는 기술을 연계한 콘텐츠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텐데 아직 이 부분에 대응한 동남권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이것들을

연계한 제대로된 플랫폼의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수직의 이동이 편리한 상황이라 수직선상에 많은 활동들이 연계되어 있다. 경부울 지역은 수평선상에 있다 보니 이동이나 활동들의 연계가 쉽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기대되는 영역이다.

또 하나 기대가 되는 부분은 같은 문화권내에서 협업 시 일어날 새로운 시너지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 아시아의 문화허브로서 좋은 모델을 갖추고, 확장해나갈 때, 사람과 사람의 연결, 문화와 문화의 연결이 일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동남권 문화협력을 통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고, 이를 통해 보다 자생적이고 차별화된 지역 문화들이 창작되고 확대될 것이다. 또한 현재 시대적 이슈인 지속가능성의 분야에서 고민되고 있는 문화예술영역의 일진보를 통해 지역문화의 새로운 부흥기가 될 것을 꿈꿔본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가 또 하나의 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주제는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다. 일 년 남짓 정책연구센터가 애써 들인 공력이 만만치 않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정책적 시사점> 항목이다. 사실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현황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화 활동가들이 분발을 만한 '모범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개발로 귀결된다.

이 관점에서 보고서는 정책 개발의 패러다임을 가다듬느라 노력한 흔적이 뚜렷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고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에 이어, '부산 특화 사회문제 유형화'와 '유형별 문화 예술 활동 사례 및 시사점'을 정리하고, 결론 부분에서 '정책적 제안'과 '향후 과제'를 분명한 논점으로 제안한다. 연구팀의 노력과 공력이 돋보이는 이유다.

보고서는 먼저 '문화정책이 시대와 함께 바뀌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화정책에서 핵심 가치가 변해온 흐름을 시대별로 요약한다. 1940년대 치유 가치, 1960년대 향유 가치, 1990년대 경제적 가치, 2000년대 교육적 가치, 2010년대 도시재생 가치, 2020년대 사회적 가치. 이때 정책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사회'란 단어의 포괄성에서 기인할 것이다. '사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가치는 새로운 가치인지, 아니면 기존의 핵심 가치들을 모두 포괄(해야)하는 것인지.

보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현재의 사회적 가치를 1940년대 치유 가치와 연결한다. 이 연결의 매개가 되는 것은 코로나 19다. 말하자면 "코로나 19 위기를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의 애드보커시 기회로 활용하자"(13쪽)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대별 핵심 가치의 스펙트럼은 1940년대와 2020년대가 치유 가치로 맞물리는 형태의 둥근 원을 이루게 된다.

분명 이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코로나 19는 하나의 동일한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인 집단 경험이다. 이 집단 경험의 범위는 1940년대의 세계대전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고서는 오늘날 문화 활동의 초점을 코로나 19의 정신적 상처 치유에 맞추며, 문화 활동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하는 것 같다. 1940년대 영국이 예술 활동의 중심을 세계대전의 정신적 상처 치유에 두며 예술위원회를 출범시켰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치유로 제한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이 도시 정책의 중심에서 도심부 활성화, 지역커뮤니티(마을만들기), 산업, 교육, 복지 정책과 연동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 대목에서 보고서는 사회적 가치 속에 기존의 가치(치유, 향유, 경제, 교육, 도시재생)를 모두 포함시킨다. 또 미국 AFTA(Americans for the Arts)의 '지역 예술 기관에 투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인용한다. 이때 치유 개념을 통해 구체화되고 예리해진 사회적 가치 개념이 '몽뚱한' 개념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보고서는 2020년대 사회적 가치의 특수성과 기존의 가치들에 대한 포괄성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즉 ['문화정책이 시대와 함께 바뀌고 있다' ⇒ '사회적 가치는 2020년대 패러다임 변동에 부합한다']며 2020년대 사회적 가치의 특수성을 말해놓고, 그 뒤에 기존의 가치들을 모두 한데 묶어 포괄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어색하다는 말이다.

이런 혼란은 아무래도 2020년대 사회적 가치의 특수성을 좀 더 분명하게 서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의 사회와 과거의 사회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단지 양적인 발전의 문제가 아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며 '세계화'가 진행되고, 인터넷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199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사회(공동체)는 확연히 바뀐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날 사회란 것, 공동체란 것 자체가 거의 와해된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는 사회 성원들의 신체적인 '공통 감각'도 거의 없고, 공동체에 대한 '공통 기억'도 거의 사라졌다. 현재 20대(1995년 이후 출생) 청년 가운데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과 함께 뛰놀았던 기억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이처럼 사회(공동체)가 와해된 원인으로는 앞서 말한 세계화와 함께 사회 시스템의 '전문 관료화'와 정보기술(IT) 발전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된다(관료화와 IT는 상호작용·결합한다). 이 관점에서는 코로나 19 이후의 비대면 기술·문화, 또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이 사회의 몰락을 한층 가속화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의 몰락은 몰인격화, 곧 인간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그 결과가 이른바 '사회문제'다).

2020년대 문화정책에서 사회적 가치의 특수성은 이 맥락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사회문제들의 해결보다 <사회라는 것 자체를 재건>하는 것이다. 이때 문화예술이 레저(여가), '리·크리에이션'(재충전), 오락(엔터테인먼트), 테라피와 다른 이유다. 여기서 문화예술은 단지 심신을 쉬게 하고 상쾌하게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이 삭막해진 사회에서 함께할 '동료'를 만나게 하고, 나름 대로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며, 현재 사회의 '외부'를 함께 꿈꾸게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 같은 '사회(공동체)의 재건'이 말 그대로 과거 사회의 복구일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은 현재 사회의 몰인격화 과정에서 저하된 인간의 감성·감정을 드높이고, 공통 감각, 공통 기억을 새로, 함께 만들어 간다. 이 활동을 넓은 뜻에서 '커뮤니티 아트'로 부를 수 있다. 이때 커뮤니티 아트는 기존의 지역 커뮤니티(마을)에 들어가는 활동이보다 <새 커뮤니티를 만드는 활동>이다. 그것은 인식 활동(문학, 영화)에서도, 신체 활동(음악, 무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기존의 예술 활동과 다른 점은 공통 감각, 공통 기억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공동체)적 지향성에 있다.





또 2020년대 사회적 가치의 특수성은 기술 발전에 있어 대안적 기술 마련을 과제로 포함한다. 지면이 한정되어 길게 쓸 수 없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IT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기술이 공동체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면이 있는 반면 공통 감각, 공통 기억, 공동체성을 살리는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도 현재 이뤄지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맡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 2020년대 사회적 가치는 기존의 가치들을 포괄할 수 있다. 물론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말이다. 1940년대와 2020년대의 치유 가치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그때는 나름대로의 사회가 있었고, 지금은 사회가 거의 와해됐다. 그럼에도 코로나 19에 관한 보고서의 제안은 분명 유효하다. 이 세계적인 집단 경험은 확실히 유대감, 공감, 연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레베카 솔닛의 말처럼 “재난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뒷문”이 될 수도 있다(『이 폐허를 응시하라』). 재난은 그보다 더 강한 도움, 연대, 돌봄, 즉 사회(공동체)가 자라는 현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코로나 19는 말 그대로 사회 자체를 재건하는,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중요한 계기다. 이 계기를 지렛대로 삼아 다양한 영역(이른바 사회문제들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문화와 타 분야 정책 간의 “관계 횡단적 관점”(72~75쪽)일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예술이 일반 시민 입장에서 재미가 있는지, 몰입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법하다. 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나름대로 문화 수준이 있는 젊은 세대에게 기획자들이 무리하게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문화예술 기획자의 수준이 상승하지 못한다면,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보고서 구성을 보면, 사례(국내외, 부산지역) 조사가 총 127쪽으로 전체 분량 163쪽의 78%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당수가 문헌 조사이거나 ‘우리는 이렇게 활동한다’는 수행 단체의 자기 선언을 그대로 인용한 조사가 많은 데 비해, 실효성 조사는 많지 않다. 참여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도 없고, 제3자의 의견, 평가도 거의 없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 보완된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7~8월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부산문화재단

“예술인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문화도시 부산” 부산문화재단, [2021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8.6)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수)은 [2021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장애인과 함께 있는 예술의 즐거움”(7.1)

부산문화재단(대표 강동수, 이하 재단)은 7월 장애 예술인 창작 공간 온그루에서 지역 장애인의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함께 이어나간다>를 운영하고, 참여 장애인을 모집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공예생태계 만든다(7.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7월 1일(목)부터 도입한다.

제1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출범(7.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제1기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장애예술인 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

인공지능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 지식 재산권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을 찾는다(7.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공동으로,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이하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첫 회의를 7월 29일(목)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지역문화진흥원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7월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7.2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차재근)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7월 ‘문화가 있는 날’(7.28)과 해당 주간(7.26~8.1)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한 안전한 문화 행사를 마련해 지친 국민을 위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확장 가상세계에서 문화 분야 정보화성과 공유하다(8.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과 함께 7월 27일(화),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해 개최한 ‘2021년 제1회 문화정보화협의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민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혁신 성장 선도를 위한 202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혁신계획」 수립(7.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 이하 교육진흥원)은 2021년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기관 혁신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지역이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교육」 포럼 13~14일 양일간 온라인 개최(7.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 이하 교육진흥원)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초 단위 거점**이 공동 주관하는 「지역이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교육」 포럼이 오는 7월 13일(화)~14일(수) 양일간 각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에서 무료로 공연홍보 해드려요!”(7.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이 중소규모 문화예술단체들을 위해 무료로 공연홍보물을 제작해주고, 티켓 판매홍보를 지원하는 ‘중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홍보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장애예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7.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은 장애예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인 권익보호 온라인 교육에 수어 통역과 문자통역을 도입하고, ▲누리집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 없이 즐기는 No Limits in Seoul 프리뷰 행사 온라인 개최(7.27)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안중원, 이하 장문원)은 2021 무장애예술주간 프리뷰를 8월 2일부터 5일까지 장문원 공식 유튜브 채널과 웨비나, 무장애 예술주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강원문화재단

강원도 문화공연단 “On(溫)tact Live Concert” ‘We are in green-영아트’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2회 공연 성료(7.5)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은 지난 4월 선정된 「2021년 강원도 문화공연단 On(溫)tact Live Concert」의 2회 공연을 30일 오후 5시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NH 농협은행 경남본부, 지역 영상산업 위해 2억 2천만 원 기부(7.6)
NH농협은행 경남본부(본부장 최영식)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 이하 진흥원)에 경남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2억 2천만 원을 기부한다.

광주문화재단

‘광주예술로’ 빛고를 곳곳 물들이다(7.12)
‘예술인파견지원사업-광주예술로(광주예술로)’는 지역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협업을 통해 예술인의 가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예술직무 영역을 제공하기 위한 국비사업이다. 올해는 예술인 55명(리더예술인 11명, 참여예술인 44명)과 기업·기관 11곳이 선정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대구문화재단

범어아트스트리트의 새 이름, 창작·창업 예술실험 공간 「ArtLab:범어」로 확정(7.6)
(재)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 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범어아트스트리트가 새로운 명칭인 창작·창업 예술실험 공간 「ArtLab:범어」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문화재단

서울시,서울문화재단, 30억 원 예술인 지원..시민에 문화향유기회, 문화예술계엔 활력(7.22)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주용태)이 총 3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예술지원」을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위축된 문화예술계엔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작은(小) 힘 모아 예술을 웃음(笑)지게 해요!(8.2)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주용태)은 누구나 예술 프로젝트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소소한 기부>의 모금을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진행했다.

세종시문화재단

‘제3차세종 문화도시 포럼’ 시민참여방안을 말한다(7.14)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제3차 세종 문화도시 포럼’을 개최하였다.
세종시문화재단, 청소년예술캠프 ‘코드로 그린 한글 그림’ 운영(8.3)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은 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청소년예술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예술캠프는 ‘예술과 과학의 결합’을 주제로 미디어·과학분야인 ‘코딩’에 대한 청소년의 흥미를 예술 활동에 접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울산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활동’ 코로나19 시대에 주목 받는다(7.12)
(재)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전수임)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을 통해 7월 13일부터 지역의 전문공연단체와 함께 코로나 19로 문화 활동을 누리기 어려운 기관에 찾아가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한다.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대상 인천예술인 e음카드 발급(7.5)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매일 1일부터 15일까지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artist.ifac.or.kr)를 통해 인천예술인 e음카드의 발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1 전라북도 예술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 (7.20)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예술인 의료비(검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16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시작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색색의 민간 문화공간 협업을 통해 지역문화의 붐바를 올리는 “지원사업 공모 접수!”(7.2)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하 재단)이 제주 문화예술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주도 지역문화의 미래를 민간 문화공간과 함께 실험하는 <그치:가치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를 7월 1일(목)부터 7월 22일(목)까지 접수한다.

부산연구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연구협력사업 초청강연회- 문학으로 비추어 보는 피란수도 부산’(7.26)
문학작품에 그려진 피란수도 부산을 살펴보는 학술행사가 개최한다. 부산연구원은 28일(수) 오후 2시 줌(Zoom) 온라인으로 ‘세계유산 등재추진 연구협력사업 제3차 초청강연회 및 포럼- 문학으로 비추어 보는 피란수도 부산’을 개최한다.

금정문화재단

금정문화재단 “지역문화 현장, 같이 땀시다”(7.2)
(재)금정문화재단(이사장 정미영)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금정문화재단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나도 현장을 땀다’를 통해 일반인을 문화기획자로 양성하기 시도한다.

분권의 관점에서
지역문화 생태계를 생각한다.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용어가 이해관계와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수도 있다. 지역문화 생태계를 둘러싼 ‘분권’이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문화분권’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에 대한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지역으로 이 논의를 가져오면 행정-중간 지원기구-시민·예술가-이해관계자들 간 권한과 역할 분담의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용어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 분권(分權)은 이익(利)나 힘(力), 즉 권리와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영어로 decentralization이다. 소수 사람, 계층, 집단의 권력 집중(centralization)을 부정, 반대하는 (de)것을 의미한다. 권한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상태에서 집중을 배제, 분산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분권(decentralization)이다.

지역 내 문화 분권은 문화 생태계 간 권한의 분산을 통한 권한위임(empowerment)의 과정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권한위임에 대한 지역문화 생태계별 합의가 필요하다. 권한위임의 과정을 행정이 주도하면 거버먼트(government)가 될 것이고, 풀뿌리 생태계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야말로 지역문화 거버넌스(governance)가 형성되는 것이다. 권한위임은 ‘갑’과 ‘을’의 계약적 관계가 아니다. 지역문화 생태계 주체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줄이는 것이다. 세계 최대 콘텐츠 기업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그의 저서 ‘규칙 없음’에서 창의적 일을 하는 집단은 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와 관리·감독을 위한 규칙과 규정의 최소화를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역문화 생태계 주체들의 권한위임은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필요로 한다. 그 기준은 누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공적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는가이다. 역할 규정을 통해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중간지원기구-예술가·시민들은 동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해야 한다. 문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문화 자치를 수용해야 한다. 경계할 점은 회의 횟수, 참여 인원, 특정 단체 및 계층 중심의 형식적 거버넌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소수의 특정 그룹이 이끄는 거버넌스는 ‘내가 하면 거버넌스, 니가 하면 거버먼트’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공론장은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어젠다 중심의 다층적이고 다면적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한 의사표현과 결정이 문화 자치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문화 생태계에 이런 경향이 미진해 보이는 것은 못내 아쉽다.

문화분권과 자치의 관점에서 독일과 일본의 문화 정책 사례가 눈에 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법과 제도로 지역문화 분권, 특히 시민문화의 자치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분권에 기초한 문화 연방주의 전통이 두드러진다. 나치 시대를 거치며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면 국가적 위기를 불러 온다는 집단적 자성에서 이러한 전통은 더욱 강해졌다. 문화정책 역시 분권과 자치의 관점이 철저히 반영되었다. 지역문화 분권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욕구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중앙집권이 아닌 분권을, 문화예술인과 시민은 문화 자치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 지역문화정책의 특징은 그동안 행정 주도에 의한 하향식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문화 자치는 각 지방 자치단체의 문화진흥계획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문화 창조의 주체는 시민이고, 시민의 자주성, 주체성의 존중을 바탕으로 행정은 그 기반 만들기과 지원 정책을 정비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체문화진흥의 기본원칙이다. 또한, 일본의

문화 자치는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에 기반 한다. 예컨대, 도쿄도는 문화조례의 기본원칙으로 「문화 내용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문화의 본질론적 측면에서 ‘자유’, ‘자립성’, ‘주체성’의 존중이야말로 문화정책 입안과 추진의 기본적 원칙인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분권, 권한위임, 자치만이 강조되는 지역문화 생태계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문화 주제별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공지원은 세금으로 조성되었기에 그 지원금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쓰이는가에 대한 설명책임을 가진다. 운용의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지역문화 생태계 주체들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공유함으로써 운영적, 재정적 투명성을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 의회, 시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얻은 신뢰와 투명성은 결국 분권, 권한위임, 자치를 위한 착근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기초단위 문화예술 지원 강화의 흐름

문화예술을 공공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수한 예술 창작이나 고유한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만큼, 지역문화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삶의 터를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최근 새롭게 나타나는 문화예술 사업들은 기초적인 생활권 단위의 문화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한 사업들의 공모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프로그램 내용 못지않게 핵심적인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생활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도시를 기준으로 집과 직장이 있고 평상시 이용하는 식당이나 여가 공간 등을 고려할 때 1~2개의 구(區)나 동(洞) 단위 정도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범위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기초단위 문화관련 기관이나 시설, 프로그램/콘텐츠가 집적되어 있다. 부산을 예로 본다면 구 단위의 문화회관이나 문화원, 문화재단이 있고, 동 단위로는 생활문화센터 등이 있다. 또한 도서관,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생활SOC 시설이나, 도시재생 거점 시설 등의 유관시설도 있다. 여기에 구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축제에서부터 소규모 마을 축제, 공연행사를 비롯하여 주민 센터 문화예술 프로그램, 혹은 마을 잡지나 지도, 서적 등의 콘텐츠들도 상당하다. 더군다나 민간의 서점, 전시공간, 공방, 인문학 단체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문화기관과 자원들이 생활권에 밀집되어 있다. 즉, 주민의 참여를 능동적으로 이끌고,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활용 가능한 기초단위 문화자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지역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 공동체’,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과 같은 중앙 기관의 최근 사업들은 기초단위의 시설, 공간, 프로그램, 예술가와 기획자, 시민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역사회 중심의 자생적인 문화적 생태계를 일구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의 일이자, 공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상당히 복잡다단하고 섬세한 일이다. 예를 들어,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단한 글쓰기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하려면 많은 손길과 자원의 결합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걸음 편하게 쉽게 오고갈 수 있는 지역의 문화공간을 찾거나,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강의를 이끌 수 있는 예술가를 선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다. 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나는 몰랐다’라는 어르신이 없도록 널리 알리고,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상당 시간을 들여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때때로 수업이 끝나면 자식 자라거나 세월의 무상함을 탄탄 하시는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어려운 강의를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는 일도 필요하다. 당연히 공공기관의 담당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일들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민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현장의 문제점과 과제들

그런데 문화정책 관련 연구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다보면, 공통으로 지적 되는 문제점이 있다. 기초단위로 내려올수록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공간 운영이 대체로 비효율적이고 현장의 수요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전시, 공연, 강연 등의 문화예술 사업들이나 공간들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나 혹은 산하 기관이 직접 기획을 하고 직영을 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결합할 여지가 거의 없다. 필요에 따라 일부 사업의 경우 위탁이나 용역이 진행되고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민간의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미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이 정해져서 단순 대행 수준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힘들다. 물론 담당자의 특출한 능력에 따라 좋은 사례가 나올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늘 해오던 사업의 반복에 불과하거나,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면서도 정작 변화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질 낮은 프로그램이 부지기수다. 지역문화 생태계에 기여하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공모사업을 통해 보조금 형태로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도 한계가 뚜렷하다.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까지는 공공과 민간이 그럭저럭 합의를 하지만, 그에 맞는 예산사용이나 운영에 있어서 제약들이 상당히 많다. 실제 사업 실행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해야 하거나, 보고서 작성이나 정산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물론 전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사실 이 문제는 기초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도 하다.

기초단위 공간이나 시설 운영도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동아리나 연습공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면서, 정작 활동이 왕성한 퇴근 후 시간대나 주말에는 문을 닫아서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다. 잘 만들어진 거점시설들도 운영 인력과 예산이 거의 시설관리 수준으로만 지원되어 폐쇄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텅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해당 공공기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놀라울 만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다. 더군다나 민간과 협력하기에는 배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혹은 예산 사용에 있어서 제약과 한계가 있어서 기관의 담당자 입장에서도 풀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기초단위에서 공공과 민간의 관계와 역할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고, 해결책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되어 왔다. 그래서 각종의 위원회 제도나 재단의 설립을 통해 민간 중심의 전문화·효율화를 추구해왔다. 최근에는 이를 자치와 분권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살펴보면 핵심 가치로 '자치와 분권'을 내세우고,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을 첫 번째 전략 및 정책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관련 법 제도의 제·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② 유연하고 통합적인 문화예산 및 보조사업 운용 추진 등의 지역문화 협력, 전달체계 개선 ③ 지역문화 재정의 민주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문화 재정 확충 ④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등의 지역문화 역량 강화를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의 중요한 점은 제도, 예산 체계 등의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분권'을 강조한 데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초단위 영역에서도 다양한 민간 위원회나 자문기구 등이 구성되어 형식적인 자치 체계는 잘 갖춰진 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요한 사업 결정이나 예산집행의 권한이 없다보니, 단순 의견 수렴 정도의 참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간의 판단과 결정권한이 중요하다는 점은 부산국제영화제나 부산비엔날레의 운영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제 기초단위에서도 공공-민간이 상하의 관계가 아닌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공이나 민간이나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인 것도 아니며, 민간이라서 잘하는 것만도 아니다. 배제가 아닌 상보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민간에게 권한을 맡기는 경우, 알아서 자생하라며 공공적인 지원을 끊어버리거나, 혹은 공공의 역할을 고루한 간섭이라고 배척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소규모로 잘게 쪼개진 형태의 사업일 수밖에 없는 기초단위 영역은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력할 때 비로소 하나의 지역문화로 연결될 수 있다. 이상적인 소리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이 바로 이러한 공공-민간의 협력을 전제하고 있다. 공공-민간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공은 제도와 예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민간은 공공의 시야를 확장하는 사업의 개발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문화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협업하고 있다.

특히 기초단위 현장에서의 사업은 플랫폼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교육, 복지, 가족, 세대, 다양성, 도시재생, 지역 기록 등 문화예술 영역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단순 참여에서 창작과 기획의 역할까지 시민의 문화 수요도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한 명의 예술가가, 하나의 문화단체가 접근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문화 인력과 자원이 서로 결합하는 플랫폼 형태의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공은 일반적인 위원회의 수준을 넘어, 총괄기획자 선임이나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민간의 참여구조를 확장하는 형태로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민간의 경우 주민, 예술가, 전문가, 행정 담당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매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인력 한계와 담당자 변경 등으로 공공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장기적인 일은 반드시 민간의 힘이 필요하다. 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현장에서부터 공공-민간의 협력으로 지역문화의 생태계가 더욱 튼튼해지길 기대해본다.

문화재단 존재 이유

자치단체는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정부 행정체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임무, 공공의 목적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문화재단을 설립을 선택하게 된다.¹⁾

양적으로 증가한 문화재단

1997년 경기문화재단이, 1998년 강릉문화재단이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문화재단이 만들어 지고 있고,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이후 전국 자치단체에 127개(광역문화재단 17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문화정책 축의 이동

중앙정부가 제정(지역문화진흥법, 2014년)하고 발표한(문화비전 2030, 2018년) 주요 제도와 정책을 통해 지역문화정책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면서, 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기초 중심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다.

지역문화정책은 문화자치를 목표로 문화 분권을 만들어 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앙이 광역으로 광역은 기초로 사업을 내리는 하향식의 전달체계의 문제(지역의 특색이 함몰되는)를 개선하기 위해 대안으로 분권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지역문화정책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문화자치라면,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문화 분권이고, 실행의 수단으로 협치가 강조되는 것이다. 상향식 정책결정의 구조와 사업전달체계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경기도 문화자치기본조례와 유사한 법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오산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문화정책은 중심축의 변화와 함께 지역 내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찾고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발산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의 범위가 행정구역에서 형성되는 문화가 아닌 생활권 단위로 확장되면서 문화주체 간 협력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1) [손경년의 '늘찬문화']지역문화의 중요성과 양적성장 속의 지역문화재단 역할, (경인일보, 2019.3.11.)

10년 전 이야기가 반복되는 현실

지역의 문화 분권과 문화자치가 강조됨에 따라 광역과 기초문화재단 간의 역할분담, 사업 간 연계, 지역문화 자원의 네트워킹, 협치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들은 있었으나, 아직도 문화현장에서 소통 채널 구축은 쉽지 않다.

구분	주요 내용
교류	광역문화재단은 수평적 교류와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함 ²⁾
협력	광역-기초 위계를 경계하고, 거버넌스로 발전 ³⁾
역할	광역문화재단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기초문화재단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 ⁴⁾
지역	기초문화재단은 생활권 단위, 광역문화재단은 문화권을 커버하는 정책 수립 ⁵⁾

지역문화진흥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에 아직은 부족한 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의 핵심주체로 성장했고, 지역 문화생태계는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즉, 문화재단은 지역민들의 적극적 문화 활동(생활문화 등) 보장과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의 정책들을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논의하고 매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문화재단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에 집중성이 강하고, 재정구조가 열악함은 크게 변화하지 못했다. 즉, 중앙-광역-기초 등 정책전달체계에서 전달자의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기초와 광역문화재단은 역할변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을 한다면, 광역 문화재단은 광역단위 사업설계와 기초문화재단 간의 사업 조정과 협력자 역할, 기초문화 재단은 지역의 현황과 자원을 파악하여 특화된 문화 사업을 발굴·육성해야 한다.

2)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공동주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지역 문화현장 토론회 자료집」 2014.
3) 춘천시문화재단 제19차 지역과문화포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기초·광역 문화재단 역할분담 및 협업방안」 2014.자료집 (성남문화재단, 유상진)
4)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문화진흥2020대토론회」, 2015.
5)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문화분권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 2018.

문화 분권 실현을 위해 기초-광역문화재단이 할 일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문화재단은 행정과 주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을 잇고 협력적 거버넌스 창구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문화자치와 문화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경기도 문화자치 기본 조례, 2012년) 제정과 함께 지방정부 기초-광역문화재단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예산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방정부 이관 사업비로 내려갈 경우 문화예산 축소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에 기초와 광역 문화재단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광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광역 단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기초문화재단 등과 협력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재단은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진흥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초-광역문화재단 및 다양한 문화주체들과 연대해야 한다. 위의 일들일 완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형성이다.

구분	1차 거버넌스	2차 거버넌스	3차 거버넌스
교류	지자체-문화재단-지역주체	행정조직간 네트워크	광역단위 협력위원회 구성
협력	(문화)행정조직과 지역 주체간 네트워크	광역-기초 협력 (지자체, 문화재단)	지역문화 주체 및 행정주체
역할	사회적 가치 확산 등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과 추진	광역-기초 정책 공감대 형성 (예산 확보, 매칭 등)	중장기 관점의 계획수립과 조정 등
지역	성북 및 영등포 문화재단 “원탁회의”	(지원)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울 (매칭)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2021.8)

나가며

주민의 문화 욕구 증가와 새로운 삶의 방식 등장, 미래가치의 수용 및 시민의 문화권 확장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를 담아 낼 지역 단위의 기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문화재단의 양적 성장은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재단의 수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기초 광역 연대를 통해 재단의 질적 성장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팔 길이 신화에 기대지 말고 다른 접근으로 인식 확장 필요

문화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하면 의례히 거론되는 “팔 길이 원칙”은 신화입니다. Hutchison(1982)의 “팔길이 원칙은 20세기 중반 영국의 정치구조 하에서 탄생한 전형적인 영국식 타협물이었다”(김정수, 2019 재인용)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제도는 그것이 작동하는 사회 맥락 위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균형 상태입니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팔 길이 원칙”이 당시 문화기관과 정치 사이의 균형, 즉 제도로서 의미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다른 사회 맥락 위에서 인용될 때 그것은 그저 참고할 개념적 설명 또는 수사적 표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최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을 비롯한 국비매칭 사업의 지방이양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재정적 가치 없는 분권의 딜레마가 확인되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지자체 산하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논쟁은 담당 직원 개인의 업무스타일에서 정책실행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엮여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런 신화 같은 표현에 매달려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문화정책 안에서 쳇바퀴 도는 “주장”보다는 다른 영역에서의 수혈을 통해 인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제도가 성립되고 인식되는 사회적 공간의 맥락 차이에서 한발 더 나가 보겠습니다. 경제학자 케인즈가 영국 예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때는 2차 세계대전 후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동원할 “예술”을 정책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화정책이 다루어야 할 영역이 말 그대로 “문화”라는 사회전반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기술 발전으로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주체들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방식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그 주체들의 자율성이라는 것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자율적 행위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율성”은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인공지능 주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심지어 법적 책임을 지을 수 있는가를 다루는 논의에서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특히 강한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에서 인간 조직의 자율성 개념을 재정립하는데 참조할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진석 교수는 “강한 인공지능과 인간”(2019, 글항아리)에서 이제 인간중심주의에서 빠져나와서 비인간을 포함한 새로운 행위주체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 변화는 오히려 인간의 수준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보다는 인터넷으로 만물이 연결되는 네트워크화 때문에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석 교수는 “각종 기능들이 분화되기 시작한 근대 이후 시스템 이론 관점에서 보면 사회 시스템에는 단일한 중심도 없고 단일한 주변도 없다. 책임은 점점 익명적인 대행자들에 의해 대행된다. 이제 오히려 행위자-네트워크란 개념에서 네트워크 자체가 일종의 행위자이다”(위의 책 p.249~250)는 진단과 함께 사이버행위자의 자율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이버 행위자들의 자율성이란 니체가 말한 “권력에의 의지”를 가진 독립 주체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자기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사이버네틱스 이론, 루만(Niklas Luhmann)의 사회시스템 이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들을 엮어서, “자기 조직적(self-organizing)” 사회적 시스템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어떤 자율적인 주체로서 행위하게 되는지를 예측합니다. 1차적인 결론은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연결 속에서 사회적 시스템으로 기능해야 ‘자율적’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위의 책 p.272).

1) ‘팔길이 원칙’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 문화정책의 진정한 금과옥조인가? (김정수, 한국정책학회보, 2018)

“의식”보다는 “지능”이 요구되는 네트워크 위에서의 “작동의 자율성”보다는 “자원 확보 능력”?

‘시스템’상의 행위자가 된 독립주체는 그의 도덕적이고 고유한 ‘의식’ 보다는 연결된 네트워크 위에서의 실행능력으로서 ‘지능’이 더 중요해집니다. 루만은 복잡하게 분화된 “자기 조직적(self-organizing)” 사회적 시스템들이 서로에게 환경이 되어 주며, 그런 환경에 대해서 “닫혀있으면서 열려있는” 방식으로 “작동의 자율성”이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석 교수는 “루만이 힘과 권력의 위계질서라는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시스템의 ‘작동적 자율성’을 호소하면서 인간적인 행위자의 권위를 극복하기는 했지만, 시스템의 재귀적 자기조직의 이면인 시스템의 폐쇄성을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합니다(위의 책 p.261). 자율성을 주장하면서도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기관들에게 뜨끔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인간중심적인 “작동의 자율성이 아니라 환경에 최소한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또는 환경에 최대한으로 영향을 주면서 자신의 이익이나 생존을 위해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나 독립성으로서 자율성”이 강한 인공지능 같은 사이버 행위자까지 확대 적용할 자율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영토적·심리적·경제적·정치적 힘을 갖는 다는 의미의 자율성, 작동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힘 같은 것”이라고도 말합니다(위의 책 p.263).

분권을 명분으로 국가의 책임을 분산 대행하는 네트워크 위의 행위자?

이 논점들을 지역 문화기관들의 자율성에 대비시켜 봅시다. 주체들이 네트워크로 엮이고 분산된 책임의 대행자가 되고, 오히려 네트워크 자체가 중요한 행위의 주체가 되는 현상은 문화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문화진흥이라는 책임은 지역문화진흥과 분권이라는 명분으로 지자체나 그 산하 문화기관들까지 연결된 문화행정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행됩니다. 문화정책의 네트워크는 특히 분권, 주체들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네트워크의 본질이 그와 반대 현상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분산된 독립 주체들은 이런 네트워크화된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는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 할 수 없으므로 네트워크 상의 행위자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체는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로 존재하게 되고, 제어하는 것은 더욱 쉬워집니다. 네트워크 시대가 분권화된, 단일 중심이 없어진 시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연결된 주체들을 어딘가로 쏠리게 하는 강한 통제가 쉬워집니다. 네트워크를 만든 주체가 중앙집중적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없더라도, 연결된 네트워크 위에서 자원 배분이 특정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면 그 의도를 중심으로 주체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각자 “자율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지역까지 전달되는 문화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문화부의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기재부의 투명한 공공자원관리라는 의도를 중심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에야 벌어지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일례로 2005년에 런던에 있는 영국 아츠카운슬(ACE) 본부와 뉴캐슬에 있는 북동부지부(ACE-NorthEast)를 방문했을 때, 두 곳 담당자들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런던의 직원은 당시 전국적인 개편으로 권역별 위원회에 대한 지원은 많아지고 권한이 이양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북동부지부의 직원은 아츠카운슬 홈페이지와 온라인 보조금

관리시스템만으로도 전국에 흩어져있지만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꼼짝없이 관리되는, 매우 강한 중앙집중화가 벌어졌다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개편을 받아들인 이유는 줄어드는 돈 때문이었지요. 결국 자원을 구하기 위해 네트워크로 들어온 주체들은 어떤 “의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주체의 과업을 “대행”하느라 어디론가로 쏠리게 됩니다. 김진석 교수의 말대로, 자원을 얻어 대행하는 과정에서는 고유한 판단을 위한 “의식” 보다는 대행해야 할 과제를 잘 실행하는 “지능”이 중요해집니다. 문화기관들이 더 많은 자원을 배분 받으려면 경영평가에서 높은 득점을 보장하는 행정수행 “지능”이 발달해야 합니다.

이글의 요지는 이런 현상을 거부하거나 투덜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연결되는 사회시스템 안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기관이 필요한 자원이 그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중 팔길이 원칙(double arm’s-length principle)”(Chartrand and McCaughey 1989, 김정수 2018 재인용)에 따라 소위 관리감독 기관으로부터도, 예술계로부터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될까요? 모두가 연결된 시대에 연결을 끊는다고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화기관이 “자율적 주체”이기를 포기하고 주체들이 흔들리는 “영역”이 된다면...

지자체 산하 문화기관들은 중앙에서 지역까지 일사분란하게 갖추어진 문화서비스 전달체계라는 시스템 망 위에서의 “작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분권이라는 명분으로 분배된 자원을 활용한 실행의 “지능”을 잘 갖추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지역문화재단이 공공자원의 수도꼭지를 마음대로 틀 수 있는 자율성에 필요한 “물리적·영토적·심리적·경제적·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실의에 빠져있어야만 할까요? 인간이나 사이버행위자의 경우, 김진석 교수는 그런 자율성조차 “소셜 네트워킹이나 사회시스템에 의해 대행되고 거의 대체”되는 초연결, 인공지능 문명 시대에, “자율성보다 중요한 것은 촘촘하고도 유연하게 연결된 연결망 속에서 같이 흘러가고 같이 멈추고 출렁이는 일이다”(위의 책 p.273)라고 말합니다. 이 우울하지만 적절한 전망을 문화기관에 적용해보는 것도 한 방편일 것 같습니다.

문화기관이 네트워크의 망을 강하게 흔들 “힘”이 있는 “자율적 주체”가 되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자율적인 주체들이 자원을 찾아와 매달리고 흔들리는 “네트워크의 망”이 되면 어떨까요? 문화기관은 더 큰 네트워크 위에서 연결되는 다른 (폐쇄적이면서 열리는) 시스템들(예를 들어 지자체의 문화부서)에 대비하여 더 큰 “영향력” 또는 자율성을 가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루만처럼 힘이라는 것에 대한 넓은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문화기관의 자율성은 그와 연결될 지역의 문화주체들이 자원을 얻어가는 네트워크, 다시 말해 “정책의 영역을 만드는 힘”으로 쓰여야 합니다. 또 거기서 문화기관의 자율성이라는 힘 또는 영향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술교육을 예로 들면, 문화재단이 코로나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의 회복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망을 만들고 그 위로 예술단체들이 자원을 찾아와서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따라 (공공자원이든 기업의 기부든) 외부 자원들이 유입되는 상태에서 문화재단은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망을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만들면 우리는 그 위에서 각자의 의지에 따라 적절히 흔들리는 “작동의 자율성”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지능”이 아닌 “의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존중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술+ ?

예술+동네

마을에서 예술적으로 살기

정 영 수
대천마을학교
활동가

어느 마을활동가의 일상

돌콩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잠시 미적거리다가 출근 준비를 한다. 얼마 전부터 소리쟁이 풀삼푸를 쓰기 시작했다. 대천마을학교에서 특강으로 마을의 썸지공원 곳곳에 자라나고 있는 소리쟁이 풀을 채취해 말려 데친 액으로 삼푸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득템했다. 두피와 탈모예방에도 좋다는데, 효과가 극적이진 않아도 건강한 느낌만으로도 만족스럽다. 세수를 하고 난 뒤엔 역시 직접 만든 스킨과 크림을 바른다. 마을에 풀 전문가가 있고, 천연물품 공방이 있는 덕이다.

그녀가 출근하는 곳은 화명2동에 자리한 대천마을학교. 마을사람들의 평생교육문화공동체를 꿈꾸는 사랑방 같은 공간인데, 십시일반 후원으로 올해 14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마을공동체의 많은 일상을 바꿔놓았고 마을학교 역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부산문화재단의 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던 수업 일부를 구성원의 주체성을 더 높이려 동아리 형태로 전환해 보았고 마을학교 동아리 중 고참격인 바느질동아리는 개인 소품 만들기에서 나아가 공동작업, 전시, 예술성과의 접목을 꾀하는 중인데 마을 내에서 문화활동을 기획하고 다시 마을로 나누는데 취지가 있다. 돌콩은 마을학교의 공간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일상을 챙기다 보니 동아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결눈질을 하는 일이 잦다.

월요일 저녁은 연극동아리가 연습을 한다. 작년에 활동을 거의 쉬다시피 했는데 모임을 재정비하고 11월 연극 공연을 앞두고 맹연습 중이다. 마을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이 모인 터라 대부분이 아마추어임에도 이미 두 번의 자체 공연을 하며 평범한 직장인이, 주부가, 학부모가 저녁이 되면 마을배우로 변신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1인당 천명을 모을 수 있는 천명배우(천만배우가 아닌)임을 자신한다.

수요일 1시 즈음 바느질 동아리 회원들로 마을학교가 북적북적해지면 슬그머니 끼어 수다를 엮기도 하고, ‘금손’들이 만들고 있는 뜨개질, 옷, 인형 등을 보며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같은 날 저녁 8시가 넘으면 주로 직장인들로 구성된 마을학교 밴드동아리 사람들이 하는 악기 세팅이 시작된다. 대천마을학교 초보밴드를 구성한다고 홍보지를 띄웠을 때 거의 하루 만에 마감이 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자리 나면 끼고 싶다는 대기자만 열 명이 가까이 되는데, 악기 대수와 강사 등의 문제로 마을사람들의 열망을 채워주지 못해 아쉽다. 드럼연주가 로망이었던 사람들, 20년 전에 대학동아리로 통기타를 잡아 보고 새삼스레 베이스 기타를 잡은 사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 피아노를 아주 잠깐 배운 건반 연주자 등 다들 일상을 바쁘게 보내는 직장인들임에도 어느덧 노래 세 곡 정도는 연주하게 된 경지라 초보밴드의 장족의 발전이 신기할 따름이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밴드가 롤모델이다.

목요일 오전 캘리그라피 동아리 세팅도 돕는다. 캘리는 다른 활동에 비해 정적이긴 하나 그래서 번잡한 마음들이 가라앉고 좋은 문구를 쓰며 글 따라 기분도 정갈해진다고 다들 입을 모은다. 정작 쓴 본인은 만족하지 않아도 폭풍 칭찬과 격려로 코로나 시대 위안이 되는 시간을 함께 한다.

금요일은 주로 마을학교에 가족프로그램이 펼쳐지는데 재능 있는 마을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 목공, 꽃꽂이, 요리 같은 문화프로그램에 마을사람들이 참여하거나 함께 영화를 본다. 이미 극장에서 본 영화라도 이웃들과 친한 친구들과 마을학교 거실에 편안한 자세로 함께 보는 영화는 각자에게 또 새롭다.

마을학교에서 하루를 보내는 돌콩은 마을사람들과 문화, 예술활동을 함께 하며 이런저런 많은 업무들 속에서 최대의 문화적 수혜를 누리며 지낸다.

마을에 재밌는 거리들과 함께 지내기

인문학적인 경험과 사고를 넓히고 문화예술을 자주 접하고 즐기며 심미안과 감수성을 가지는 것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됨을 믿는다.

두 아이가 초등, 유아일 때 사는 곳 주변의 문화회관, 도서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눈여겨보았고, 한 때 해운대, 금정구, 동래구, 심지어 김해까지 문화회관 같은 공간에서 월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섭렵하며 소비하던 때가 있었다. 영화의 전당, 현대미술관이 있는 동네에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물론 문화거점 시설이 가까이에 들어서는 건 언제나 환영할 일) 지금은 화명금곡동과 북구지역에 펼쳐지는 다양한 활동과 공간에서의 일들을 미처 다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

특히 생활의 주 무대인 화명2동 대천마을에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각자의 고유한 활동들을 다채롭게 펼쳐 나가고 있는 터라 번지르르한 하드웨어가 아닌 복구의 자연자원, 공동체, 공간 등을 일상에서 만나는 것 또한 바쁜 활동가의 삶 속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물론 각자 원하는 바가 달라 문화접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에 순전히 나의 경험에 의한 만족도다. 그럼에도 마을학교에 친구들과 놀러왔다가 치유음악가 봄눈별의 리허설 장면을 만난 아이가 “돌콩, 제가 걱정이 있었는데 아까 음악을 듣고 진짜로 걱정이 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퇴근하는 길 마을극장에 들러 들었던 노래 한 자락에 발걸음에 힘을 보태던 나의 경험과 견주어도 이렇게 일상에서 예술을 만나는 접점을 만들고 엮는 일이 의미 있음은 분명하다.

예술+마을?

협치, 분권, 자치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많이 한다. 아직은 문화자치라는 말도 낯설지만, 의료도 문화도 십년 이상 차이난다는 서울과 부산을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부산 내에서 해운대와 북구를 비교하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경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혹은 얼마나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가로 이야기 한다면 어떨까. 전문공연장에서 본 유명 뮤지컬 공연도 멋졌지만, 내 옆의 마을 사람이 연극연습을 하며 숨겨진 끼를 발산하고 퇴근길에 마을학교에 들러 드럼연습을 하며 로망을 풀고 간다는 말에서 문화자치의 씨앗을 본다면 너무 좋게만 해석한 것일까.

대천마을학교가 평생문화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나름의 시도를 하듯, 마을 곳곳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마을 안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주체가 되는 거점들이 많아지는 것은 필요하다. 작은 단위라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공간 있다면 거점에 대한 지원, 거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지원, 지속적인 콘텐츠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 문화재단 지원사업 종료 이후, 마을학교는 마을밴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문화 예술인들과의 교류나 지역 내 자원의 네트워크가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마을마다 상황은 다르고 가진 자원이 다르니, 지역의 사정에 밝은 구 단위 문화재단 같은 주체나 중심축이 필요한 것 같다. 무엇보다 마을단위로 문화예술 저변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문화자치가 주어진다 해도 주민들이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일상에서의 문화예술의 경험은 무엇이고 활성화되기 위해 뭐가 필요한가 이야기는 아래로부터 나왔으면 하고 필요하다면 그 이야기가 지금이라도 시작되면 좋겠다. 지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시설이 시급한 곳도 있고, 주민들의 연령과 구성원 관심도에 따라 원하는 문화예술의 영역도 다를 것이라 필요한 것을 물어봐 주는 누군가도 있으면 좋겠다.

공동체들이 마을에서 문화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권한? 솔직하게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서 겨우 7년간 활동한 마을 새내기 활동가로서 뭐가 필요한지 묻는다면 앞서 했던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마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 자원이 있는 마을부터 시작하자고 판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도 있다. 굳이 문화자치라고 명명하지 않더라도 마을사람들의 소소한 문화수요를 읽고 엮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단위들이 있음과 공동체나 마을은 어떤 논의든 무르익는데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바느질동아리가 10년 넘게 활동하며 구성원들이 공방을 차려 성장해 나가고 올해 예술적 비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초기 몇 년간 한두 명이 동아리를 지켜갔을 때도 있었고 사람의 드나들에도 활동을 이어가고 쌓아가고 숙성해간 시간이 있었음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사람들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문화의 순풍이 마을에 골고루 불기를 바란다. 내가 사는 곳에 뭐가 좋냐는 물음에 한참 뜸을 들이다가 “공기가 좋지”라고 답할 게 아니라 “아이도 어른도 하고 싶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가까이 있어 좋지!”라고 답할 수 있게 되기를.

정책보고서 툏아보기

2021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윤성원
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보고서 [2021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는 지난 7월말에 제출됐다. 2021년 현재, 335만 명이 모여 사는 이곳 부산의 예술인들의 실태를 총망라 조사한 보고서이리라. 이로써 독자들은 부산 지역 예술인들의 삶과 그에 따른 필요와 요구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300쪽이 족히 넘는 보고서를 만나면서 작성한 분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느꼈다. 아마도 16개 구군에 흩어져 있는 예술인들을 하나하나 찾아 그 실태를 조사하고, 한 겹 한 겹 정리했을 것이다. 이 보고서야말로 많은 조사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쌓인 방대한 작업 결과일 것이다. 역시나 보고서 내지를 열어보니 예상대로 적지 않은 13명 전문가의 명단이 적혀있다. 이 보고서를 토포해보기로 한다.

1.

같은 제목의 보고서가 금번이 처음은 아니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미 2015년과 2018년에도 있었고, 3년 간격으로 제출됐다. 평소 레퍼런스를 강조하던 필자로서는 이 보고서에 대한 기대로 과히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기대는 여러 이유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그 중 최근 예술계의 핫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주지하다시피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도록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규정한 실질적인 법률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15년과 2018년에 제출된 같은 이름의 보고서와는 달리 금번 보고서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본격 시행에 더없이 귀한 레퍼런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보고서 책자를 넘기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고, 이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실태조사에 응한 조사 대상이 2,000명이다. 물론 가호를 찾아다니며 옛 인구조사 방식의 조사를 바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표본이라고 적시하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335만 명이 살고 있는 광역시 부산의 예술인들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그 면면은 2020년과 2021년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행 완료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예술인, 부산예총 및 부산민예총 회원 등 문학,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사진, 건축, 만화 등 11개 예술 분야와 무대예술 및 기획 분야 등에서 활동 중인 부산지역 예술인이라고 한다. 또 한편으로 2,000명으로 양보해서 해당 분야별 예술인 숫자가 전체 예술인 숫자를 적절히 축소한 표본수인가라는 궁금증도 생긴다. 우선적으로, 분야별 N의 수가 궁금하다.

이 보고서를 통해 부산광역시 예술인의 분야별 N의 수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무리일까.

2.

이 보고서의 제목은 [2021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이다. 하지만 4개의 장으로 구분된 목차를 볼 때, 이 제목이 적절치 않다. 6쪽 남짓 연구개요를 기술한 제1장,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개과정을 기술한 65쪽 분량의 제2장을 거쳐, 보고서의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인 제3장 실태조사가 비로소 등장한다. 제3장은 전체 3절이며 양적연구(설문조사), 질적연구(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종합을 합쳐 겨우 61쪽 분량이다. 이어지는 제4장은 38쪽 분량으로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을 기술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의 제목을 ~실태조사라고만 잡으면 곤란하다. 한편으로, 이 보고서에는 목차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고서를 목차 밖 뒤쪽으로 넘기면, 177쪽부터 부록이 시작된다. 부록은 340쪽까지이며, 2021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의 상세가 나온다. 만약 제목을 ~실태조사로 기술코자 한다면 그 양이나 규모에 적절하게 이 부분의 내용이 앞 본문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인은 집 밖으로 내몰려 있고 객이 안채에 자리를 잡고 있는 형상이다.

이 보고서는 서론에 연구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①2020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 이행여부의 점검, ②2030부산예술인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의 도출, ③코로나19 사태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부산지역 예술인 지원 체계의 구축, ④부울경 연계 예술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의 근거 마련이다. 문제는 연구 목적과 별개로 보고서가 쓰였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연구 목적에서 지향하는 바와 관계없이 제2장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개과정, 제3장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 제4장의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다룬다. 각 장의 글 속에 연구 목적이 녹아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래서야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각 장은 별도 저자가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다. 물론 그럼에도 각 장은 훌륭하다.

제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절은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 방향, 제2절은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 비전 및 목표, 제3절은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실천적 함의를 담고 있는 제3절에서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 [1. 예술인이 존중받는 부산,

2. 예술인이 살기 좋은 부산, 3. 예술하기 좋은 부산, 4. 예술이 힘이 되는 부산]을 설정하고 하위 추진과제로 각각 6개씩 총24개를 사업기간, 협력주체, 대상, 주요 내용, 추진방법, 소요예산, 연계사업 및 국내외 참고사례를 소개하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4장의 레퍼런스는 무엇인가. 그 근거가 제2장, 제3장에 있지 않은 것이 놀랍다. 제4장은 독립적이다. 이는 제2장과 제3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내용은 각 장끼리 비슷하지 않으며 연계되지 않아서 따로따로. 보고서 한 권은 같은 목적 아래에서 그에 걸맞은 기승전결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가 독자들에게 바르게 읽히려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이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목적은 연구 제목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 보고서의 제목을 수정해 본다면,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에 근거한 예술인 복지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정도가 적당하리라 사료된다. 그래야 법령에서 강제하는 실태조사의 목적에 맞다.

3.

2021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실태조사),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실태조사 등)에서 그 근거와 내용, 방법 등을 가져온다. 금번 실태조사는 2015년과 2018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부산지역 예술인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 환경 실태 파악, 장기적 지역 문화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 창작 및 생활 환경 점검,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 현시점에 필요한 몇몇 질문을 추가했다. 대체로 만족스러운 설문 내용이다. 57개의 질문꼭지로 구성된 세안에서 필자는 특히, 예술인의 최종 학력, 결혼상태(응답자 특성), 예술분야 활동 기간, 주 활동지역, 주 활동지역 외 타지역 활동, 타지역 활동의 이유(예술활동 분야), 전업 여부, 전업 노동형태,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세부 직종,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 체결 경험, 공공지원금 수혜 비중, 불공정행위를 강요당한 경험(노동형태), 부산지역 문화예술 환경 인식, 성평등 측면에서의 부산 문화예술계 평가(부산 지역 문화예술 환경 인식), 4대 보험 가입형태, 실업급여 수급 경험, 예술활동 과정 중 상해나 연관 질병 경험, 노후생활 대비(사회보장), 최근 3년간 연 평균 개인 소득,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통한 연 평균 개인 소득(소득과 소비 자산),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만족도,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부산시 역점 정책(복지정책 및 지원 만족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예술활동 변화,

긴급생계지원 사업 전반적 만족도, 비대면 온라인 예술창작/유통 활동 경험 유무 및 향후 활동 의향(코로나 이후 예술환경 변화) 등의 결과가 흥미롭다.

여기에 예비예술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산지역 예술대학 재학생 460명의 목소리도 담아 내용이 더 알차다. 이 부분 20개의 질문꼭지에서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장애인 등록 여부(응답자 특성), 현재 전공 만족도(전공), 진로 정보 취득 경로, 졸업 후 전공 관련 진로 미선택 이유, 졸업 후 예술활동 희망 지역 선택 이유, 졸업 후 예술활동을 통한 예상 원 평균 수입, 정규 교육 외 희망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졸업 후 진로 및 지원), 부산지역 문화예술 환경 인식, 청년예술인 복지정책 관련 부산지역에 바라는 점(예술정책 평가 및 제언) 등이다. 특히 마지막 꼭지인 청년 예술인 복지정책 관련 부산지역에 바라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대답이 지원금, 취업/창업 기회 제공, 창작 공간 지원, 공연 전시 기회 확대, 네트워크 확대, 홍보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강화, 인프라 개선 등이 언급된 것이 인상적이다.

FGI는 1차(2021.4.28.)와 9차(5.21.) 중견예술인, 2차(5.3.) 청년예술인, 3차(5.4.) 예술대학 재학생, 4차(5.7.) 여성예술인, 5차(5.7.) 장애예술인, 6차(5.10.) 원로예술인, 7차(5.14.) 무대기술 예술계 종사자, 8차(5.14.) 공간운영 및 기획 예술계 종사자 등으로 구분하여 총9회 실시했다. 다만, 각 차수별로 몇 명의 인원이 참여했는지 알 수 없어 아쉽다. 인터뷰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사회보장 영역 내 예술인의 수급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예술 활동 기회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인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관심 있는 독자의 일독을 권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주요 관심 분야의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현황을 세세히 알 수 있다.

9 ~ 10월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컨설팅 지원 접수 시작(9.7)

(재)인천문화재단에서 '2021 문화예술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해당사업은 인천 내 예술인 및 단체의 역량과 자생력 확보, 지역의 건강한 예술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9월 6일부터 10월 6일 18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일상회복과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2022년 문체부 예산(9.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과 함께 7월 27일(화),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해 개최한 '2021년 제1회 문화정보화협의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에 사회적 가치를 더할 기업을 찾습니다(9.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9월 9일(목)부터 10월 5일(화)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예술가의 시선으로 기록하다(9.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을 45억 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공공도서관 일평균 대출 권수 증가(9.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영준)와 함께 '2021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0년 12월 31일 실적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 2020-2022)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접근성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문화재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름다운 예술교육 활동(9.9)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수)은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9월 6일(월), 9월 13일(월), 9월 27일(월) 총 3일간 청년작가 7명과 함께 「기후변화창작실험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문화재단, 2021 조선통신사 축제 축소 개최(9.10)

당초 부산문화재단은 관람객 분산을 위해 9~10월에 걸쳐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며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는 '평화의 행렬', 한일 양국 예술단의 공연무대 '통신사의 밤', 탈을 활용한 거리공연 '마스크 무브먼트', 조선통신사 관련 체험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략) 시민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렬 재현, 공연, 부대행사, 승선체험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비대면 온라인 사업 및 일부 대면으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문화재단,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 시범 수업 실시(9.28)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수)은 10월 12일부터 3일간,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 시범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문화재단, 부산판 '기억의 집' 운영 본격 개시(9.28)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수)은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초고령화 사회의 주요 이슈인 '치매' 문제를 예술로 풀어보는 「기억의 집」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정보원

"중소규모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공연정보, 홍보부터 예매까지 한곳에서 만나보세요"(9.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이 중소규모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홍보 영상과 예매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특별전: 온라인으로 만나는 문화예술 홈서비스' (<https://www.culture.go.kr/homeperformance>)를 9월 6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국민 문화생활의 변화, 영화 및 공연 상반기 매출 전년 대비 증가세(9.23)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은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생활 및 문화산업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위드 코로나 시대 문화생활 변화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문화정책이슈페이퍼 11호와 12호에 이어, 이번 13호에서도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보다 세밀하게 다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의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미술관 등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Contents

- p.121 **이슈1**
[구·군 문화회관 특화전략 - 내가 2년 반동안 겪은
금정문화회관 20돌과 리모델링 관련 이야기]
강창일(금정문화회관장)
- p.125 **이슈2**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마을에 왜 있어야 할까?]
홍철영(전 두송생활문화센터장, 현 달뚝기 예술기획 문화기획자)
- p.128 **이슈3**
[생활문화권 단위의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원]
김경희(도서관문화연구소 연구원)
- p.132 **이슈4**
[문화자치 토양화를 위한 작은 미술관]
구본호(동대문화재단 대표)
- p.136 **예술+동행**
[우물과 공동체]
전미경(푸조와공술 대표)
- p.138 **정책보고서 톨아보기**
[부산광역시 공공 공연장 실태파악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
김수정(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 p.140 **11~12월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ISSUE 1

이슈1

구·군 문화회관 특화전략 - 내가 2년 반동안 겪은 금정문화회관 20돌과 리모델링 관련 이야기

강창일
금정문화회관장

부산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 구서IC에서 동래, 금정구청방향으로 들어오면 약 3분도 지나지 않아 만남의광장이 나타난다. 광장을 왼쪽에 끼고 본격적으로 중앙대로를 가로질러 체육공원로 길을 걷기 시작하면 ‘금정문화회관’이 나온다.

회관 인근, 금정구에는 부산대학교를 비롯해 4개 대학이 있고, 사방으로 고개를 돌리면 부산예술중·고등학교, 브니엘예술중·고등학교, 음악연습실, 예술기획사, 악기사 등이 웅기종기 모여있다. 금정산성과 온천천, 그리고 회동호(수원지: 약 75만평) 주변 공원으로 이어져 있어 자연을 즐기는 데도 불편이 없다. 이 인근에는 오시게시장과 대형마트도 있어 늘상 동네가 북적인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종착깃점, 노포역에서 온천장역까지 8개 역이 지나가며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에 있다. 필자는 이 모든 자연과 도시환경 조건이 부산에서 으뜸으로 본다.

금정문화회관은 부산영락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금정구에 대한 약속사업으로 3년 6개월의 공사 끝에 2000년 5월 19일 개관했다. 구서동 481번지 일원에 부지 4천 800평, 연건평 4천 970평, 지상 4층으로 건립된 금정문화회관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생활문화관, 전시실 등을 갖추고 부산 동북부권의 복합문화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야무지게 해내며 금정구를 비롯해 부산 전역의 시민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00년 개관 이후 금정문화회관은 여느 문화공간 부럽지 않은 전문예술을 선보이고 있다. 금빛누리홀, 은빛샘홀이라는 반짝이는 이름을 가진 880석의 대공연장과 394석의 소공연장은 관객이 찾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코로나19 이전, 2016년에는 95회 기획 공연을 포함해 총 449회 공연에 관람객이 총 107,477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쯤 되면 국내 최장수 클래식 프로그램 <금정수요음악회>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9월



금정문화회관 전경

8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음악회로, 2013년부터는 출연자 공모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29일 제768회를 기록한다.

또 하나 교육·지원시설인 생활문화관의 전면 실내공간을 변모시켜 향후 구입 공공미술관으로 등록예정인 전시실이 3곳으로 꾸며졌다. 지난 8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9월 해외문화예술교류전 <새로운 시작 라트비아>, 11월부터 진행 중인 첫 기획전 <다시 연결하기 RE-CONNECT> 등으로 시범 전시기간을 갖고있다. 코로나19상황에서도 올해 5회 기획전시, 147일 전시 기간 동안 약 4,5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관객들을 공연과 전시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각종 배우기 문화강좌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된 바, 25개 과목에 분기별 450여 명이 등록수강하는 실적을 보유했다. 올해 11월부터는 특화된 문화예술아카데미로 시범 운영하여 클래식, 현대미술, 차와 인문학, 위로받는 성악 등 구민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키며 문화회관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새로운 눈높이 서비스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부울경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금정문화회관에 개방형 임기제 관장직으로 부임한 2019년 7월, 필자는 몇 가지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문화예술사업 규모에 비하여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문제에 봉착해있었다. 시설은 20년이 경과, 낙후되어 전면적으로 재건축 설계를 거쳐 기술설비부터 교체와 보완, 공간 재배치 등 극장 외관을 제외한 전면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극장으로 변신을 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공연과 사업프로그램 수준은 보통의 구 단위 사업소 중에서는 조금 나은 모습이었다. 결국 2020년은 금정문화회관 개관 20돌이기에 시기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했다. ‘안정된 인력, 좋은 공간, 예술가와 관객에 대한 정성’에 초점을 맞춘 도전이 그렇게 시작됐다.

우선 예술행정역량을 강화했다. 금정구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공연과 전시분야 전문인력(임기제 2명)을 보강했다.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계속 연구·도전하고 고민한 결과물은 관객에게 알맞은 눈높이-서비스를 높이고, 이것이 문화회관의 존재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대대적인 리모델링도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년에 걸쳐 감행했다. 먼저 880석의 대공연장(금빛누리홀) 1층 530객석을 국내 기술력으로 단가 37만원 정도에 전량 교체했다. 2층 350석은 일부 교체하고 일부는 리폼으로 단장했다. 소공연장(은빛샘홀)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가 발생 후, 관람객의 위생환경 안전을 개선했다. 객석과 무대상부에 비산먼지제거용 미스트장치와 객석에 50개의 음이온 제균기를 국내 최초로 설치완료했다.

공연장 기술공간 이외에 예술가와 관객이 상존하는 곳곳에는 시각예술을 입혔다. 개관 20돌 기념 [‘블링블링 20(Bling Bling Twenty)’ 아트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예술공간 마무리 작업에는 지역예술인 4명이 참여하여 대기+휴식+편의공간의 진면모를 갖추게 하였다.

금빛누리홀 2층 로비를 들어서면 회관의 역사를 상징하는 22개 색의 스테인글라스 작품 ‘시간을 녹이다(Melting Time)’가 관객을 반긴다. 이곳은 공연자와 관객이 만나는 격려와 환호의 파티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부대시설까지 구비하여 아트센터의 명소로 자리매김되길 바라고 있다. 지하 1층 분장실 복도는 유리거울과 환상적인 색채디자인으로 꾸민 ‘상상정원(Imaginary Garden)’으로 만들었다. 주차장에서 진입하여 분장실 문을 열면 ‘꿈-길(Dreaming Carpet)’이 나타나는데 기하학적인 추상기호와 선명한 색들이 눈을 즐겁게 한다. 개관 당시부터 사용한 시설명칭인 대공연장과 소공연장과 전시실의 재단장은 2020년 9월에 부산시민들이 공모로 참여하여 ‘금빛누리홀’, ‘은빛샘홀’, ‘금샘미술관’이라는 새 이름을 붙이며 완성 마침표를 찍었다.



새 단장한 금빛누리홀(880석) 모습



2층 대공연장 로비, 시간을 녹이다(Melting Time)

‘새로운 도전의 적기’라 여기며 개관 20돌 기념사업에는 좋아진 공연장에 걸맞은 ‘더더더’ 좋은 예술을 보여주자는 사명감이 붙었다. 부산을 대표하는 금정산성에 관련된 금어(金魚) 설화를 기반으로 한 창작음악극 <금어기행> 제작, 명품 공연장 두 곳의 재탄생도 알리기 위한 클래식음악축제 <부산클래식음악제(Busan Classic Music Festival, BCMF)> 창설과 그밖에 상생협력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코로나19 팬더믹 시기에도 만만찮은 일을 벌였다.

2020년 10월, 두 번의 순연 끝에 2회 공연을 과감히 시도한 <금어기행>에는 부산 작곡마당의 작곡가 4명의 공동창작, 부산의 합창단과 연주단이 참여하며 금정문화회관이 제작극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제1회 <부산클래식음악제>는 2021년 3월 2일~17일, 16일 간 7회 공연을 올리며 코로나19 상황에서 80여 명의 예술인이 참여, 지역기업체 10개 기업이 후원협찬, 1,200명의 유료관객을 끌어모았다. 기대하건데, 이 음악축제는 전 국민이 매년 부산을 찾을 문화예술관광의 매력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새로운 변화는 이끌었으나 고착을 해소하기에는 모자람이 있다. 20돌을 지난 구립 문화회관의 성과를 정리하며, 2년 여를 금정문화회관을 운영총괄하면서 몸소 느낀 점을 중심으로 요약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구 단위 사업소로 직할 운영되는 금정문화회관은 개관 20돌을 맞아 2년여에 걸친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예산 95억+수선유지관리비 10억 투입, 약 105억 규모)은 잘 완료했고 결과물도 양호한데,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보강이 절실하다.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꾀하려면 과감한 기구조직의 개편과 전문인력 충원과 적절한 사업예산이 필요하다.

금정구는 6년 전에 출범한 (재)금정문화재단(생활예술/축제/교육사업 중심의 기초 문화재단)과 구청사업소인 금정문화회관(공연장 2곳+미술관/교육동 1곳 운영)이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공존·존립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지자체이다. 향후 여타 기초 지자체처럼 문화회관과 문화재단의 합병, 재단법인형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금정문화회관은 그간 2년 반 동안 매년 적은 예산으로도 공동주최 공연콘텐츠 5~6건 씩, 비예산사업으로 공연공간대여/지원방식의 춤축제 공동주최, 공동기획·주최 방식의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확보하는데 힘써 왔다. 이때 늘 모자란 예산과 조건 속에서 제작을 착수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가능한 동종업계와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면서 기획 단계부터 공동제작방식을 꾀할 것을 권하고 싶다. 국가지원 문예진흥기금도 콜라보레이션 방식의 지원방안도 눈에 띄게 많아졌고 이미 강한 사업파트너들끼리 사전협의하여 부담을 나누는 방식의 순수예술 기획제작방식이 상용화되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부산 메세나협회도 2021년 11월 공식 출범하였는데, 그 역할도 기대해 볼 만하다.

부산광역시시는 분명 우리나라의 제2도시이다. 태평양을 향해있는 막강한 해양수도이고 대륙의 기운이 뻗쳐 바다를 향해있는 관문도시로서 물류의 대부분이 이곳을 거쳐 해외로 수출되는 전진기지이다. 1등을 달성하는 종목도 상당한 해양수도-부산은 좀 더 문화예술로 자부심을 갖는 매력도시가 되길 빌어본다. 그 이유는 충분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부산-울산-경남은 원래 하나의 땅이었고 한뿌리로 여겼었다. 부산시민이라면 이제는 미래 2040년대를 그리며 부울경의 만이 역할로서 부산의 시공간을 20년 후의 부울경을 대표하는 시각으로 확장하여 바라보는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을 길러 나가야 할 때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최근 10년 사이에 생활문화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생활'과 '문화'라는 친숙한 말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써온 듯 자연스러운 느낌이지만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쓴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 2014년이고 그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었다 해도 언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리 잡기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2항), "생활문화 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5항). 이 조항들이 지역문화진흥법에 정의된 표현 이기는 하나 이런 법조문이 일상의 언어에서 큰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여 지금의 문화예술계에서 생활문화라는 말에 대한 혼선이 다소 있는 듯하다. 일선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생활문화센터나 생활문화 동아리 연합회에서 쓰는 뜻이 다를 때가 많아 보인다. 정리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생활문화센터를 5년 동안 운영하면서 느낀 생활문화를 정의해 본다면, 생활문화는 여태 까지의 엘리트 중심의 문화예술교육과 기술적으로 잘 단련된 문화예술가 양성을 위한 시설 건립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기초 지역 단위에서 일반 시민들의 문화적 창작과 향유를 위한 행위, 요즘 흔히 쓰이는 말로 문화적 '힐링'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순수성 및 아마추어리즘의 비공식 예술이 중심인 생활문화는 기초 지역에 밀착하여 형성되는 지역 중심적 문화와 그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생활문화 시설이 중심에 있다.

이런 시설 중에서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내에서 해야 할 일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며 그리고 달라야 한다. 이 말은 생활문화센터가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주도적 참여로 운영되고 지역 내 생활문화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극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생활문화센터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들의 요구(needs)는 당연히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필자가 있었던 두송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센터 개관 이전과 센터 개관 이후 설문과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주민들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진행되는 문화센터의 문화 강좌형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역할을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었다. 이는 서부산 지역 내 대형 백화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그나마 있는 대형마트 등에서 진행되는 문화센터 역시 수가 적고 지역에서 가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두송생활문화센터가 있는 부산 사하구 지역은 지역 특성상 공단과 물류 창고 등이 많고 넓은 지역에 문화예술 기관이 띄엄띄엄 흩어져 존재하고 있어 그런 기관

들이 각 개별 지역별로 종합 문화센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센터는 2015년 5월 개관한 이래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기초적인 강좌형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더불어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어린이나 어른들을 위한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으로 타겟층을 확실하게 구분한 영화 상영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을 주변 기관들과 차별화해서 구성했었다. 그리고 국비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조금 더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갔었다.

다소 다른 지역적 특성이 있는 부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수영문화원과 같은 건물에 있어 문화 강좌형 프로그램의 경우 수영문화원에서 기획하고 진행하며 생활문화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입지적 조건으로 인하여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들의 대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은 생활문화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문화 수요자인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생활문화센터든 문화원이든 평생학습관 같은 이런 기관들, 공급자들의 입장에서 분류해 놓은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곳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공급자들이 정해 놓은 각 기관의 정의보다 중요하다. 문화 공급 기관들은 개념과 분류와 용어에 있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공급자 중심의 개념과 용어들은 수요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들로 바뀌어야 한다. 일부터 알기 어렵게 해 놓은 보험사 관련 언어들처럼 쓰지 않으려면 말이다.

최근의 문화 거점 공간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플랫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을 통한 문화 커뮤니티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며 이용자들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역 밀착형의 생활문화센터 같은 공간의 경우는 이런 플랫폼 역할을 요즘의 경향인 디지털과 4차 산업혁명도 중요하지만, 아날로그적인 레트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IT 기술과 문화를 결합한 교육 및 매칭 사업 등도 중요하지만 디지털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노령층과 경제적 소외 계층들의 최후의 보루로서 지역밀착형 생활문화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이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문화예술 콘텐츠는 예술적 기술의 세련미로만 평가할 수 없듯 아날로그적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 공간으로서 생활문화센터 같은 지역밀착형 생활문화공간은 당연하고도 충분히 존재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요즘의 생활문화센터 건립은 도서관이나 카페, 기타 문화 시설이 공존하는 생활 SOC

복합문화공간 시설로 편입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고 보인다. 사업 예산과 각종 홍보와 운영에서 선택과 집중이 쉬운 점, 세대 간을 아우르는 공간 구성으로 통합의 용이성도 있지만, 전문적이고 세밀한 공간 구성과 사업 운영이 없으면 시너지 효과 보다는 이도 저도 아닌, 이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디지털에 대한 소외를 보이는 계층은 여전히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판 나라 이야기로 계속해서 소외감만 주는 공간으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복합 SOC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건립과 같은 기반 시설 지원 즉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지원도 더욱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시설 및 지어질 시설들이 어떤 식으로 지속해서 운영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과 방안, 소프트웨어적인 기획과 운영을 발전시켜나갈 휴먼웨어, 즉 인력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부산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의 생활문화센터가 생겼으나 대부분 지자체 직영으로 전문 문화기획자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몇 곳을 제외하면 공무원들이 대관 관리 정도만 하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수준으로 전용 및 왜곡 운영되는 곳이 많다. 센터 시설 만드는 것에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 주민센터나 리모델링 해보자는데 주안점을 두지 말고 지속적인 운영과 운영 인력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확보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공간에 대한 지원에 대해 프로그램 개수나 이용객 수 등 단순한 정량적인 목표로 성과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관에서 예산 대비 사용자들의 숫자와 같은 데이터는 물론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지표들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에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나서 지역 내의 우울증 환자의 수가 변화가 있더라든지 하는 그런 의미 함축적인 조사가 장기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지역문화진흥법에 나오는 생활문화시설로서의 생활문화센터는 어쨌든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과 답변에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꼭 나오고 있는 편인데 이는 공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지역민들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공간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문화에 있어서는 생활권에 밀착된 작은 공간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나 경제적 문화적 소외 지역에서는 지역 내 문화적 삶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지표 같은 것으로 지역 생활문화시설을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생활문화센터가 추후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어린이 한 명, 살아생전 접해 보지 못했던, 바쁘게 살아가느라 돌아보지 못했던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끼고 내 삶의 마무리에 아름다운 침표로 존재했다고 하는 어르신 몇 분이라도 있다면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모든 공공도서관은 특별하다. 이는 지역의 역사문화가 다르고, 지역주민의 사고 및 생활양식이 다르기에, 이를 토대로 삼아 설립된 공공도서관은 다음과 차이를 갖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독서를 통해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여가 문화를 저변화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저자, 출판사, 서점 협력 및 인문탐방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주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권에서의 중요성이 <표 1>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회 문화 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중 전체 이용률이 공동도서관이 가장 높았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새로운 일상 속에서도 전체 이용률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공간 중 주민자치센터의 이용률을 보면, 이들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권 내에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1. 국민의 문화예술 공간별 이용률(복수 응답, 단위: %)

연령	문화 시설 통계 년도	공간 전체 이용	시군 구민 회관	문예 회관	복지 회관	청소년 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문학관	생활 문화 센터	문화의 집	대학 문화 교실	사설 문화 센터	주민 자치 센터	민간 공연장
15-19세	2020	49.6	2	2.4	0.5	9.9	0.4	33.2	6.7	0.4	0.2	2.4	0.8	1.9	4.7	10.3
	2018	73.9	11.1	7.9	7.3	19.7	1.7	33	23.8	1.2	0.7	1.8	4.5	5.1	13.7	31.9
20대	2020	46.8	2.6	1.8	0.6	1	0.4	22.4	9.5	0.3	0.5	0.3	1.9	2.7	14.5	15.3
	2018	70.8	6.6	9.3	1.1	4.4	2.5	23.4	20.3	0.9	1.7	0.5	6.7	8.1	15.5	37.6
30대	2020	50.6	5.5	2.9	0.9	1.6	0.6	18.9	11.5	0.5	2	0.2	0.8	4.6	26.1	12.5
	2018	65.9	10.2	8.2	2.9	3.1	1.9	15.1	18.3	0.6	2.2	0.3	1.7	10	26	32.1
40대	2020	50.9	5.2	3.1	1.1	1.9	0.7	16.8	10.3	0.4	1.7	0.5	0.5	3.4	29.5	9.7
	2018	67	12.8	8.5	3.9	2.8	1.3	13.8	19.3	0.4	2.3	0.2	1.9	7.9	31.4	27.2
50대	2020	48.3	7.5	3	1.9	1.1	1.2	7.5	5.5	0.7	1.3	0.2	0.1	2.3	33.5	9.5
	2018	62.4	13.6	8.4	6.7	2.1	2.1	6.7	13.3	1	1.7	0.4	0.9	6.9	36.6	20.3
60대	2020	46.9	7.6	2.4	6.5	0.5	1	3.7	3.8	0.1	1.5	0.1	0.4	1.3	33.5	6.5
	2018	64.5	18.4	6.8	16.1	1.2	1.8	4.5	13.4	0.2	1.5	0.1	0.9	4.1	41.2	19
70세 이상	2020	49.8	7.9	1.9	20.6	0.2	0.7	1	1.7	--	0.4	--	0.2	0.8	33.2	3.8
	2018	63	18.6	5.8	34.6	1.3	0.9	1.5	8.5	0.1	0.9	0.3	0.8	1.4	42.6	10.5
계	2020	48.9	5.8	2.6	4.2	1.6	0.7	13.4	7.3	0.4	1.2	0.3	0.7	2.6	27.1	9.9
	2018	66.2	12.8	8	9	3.6	1.8	12.8	16.5	0.6	1.7	0.4	2.3	6.7	30.4	25.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2020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생활문화권에서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

생활문화권에서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은 부산의 도서관 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있는 것보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문제(사서 및 행정가, 지역문화발전 정책입안자, 지역주민 등), 공공도서관 운영 주체 중심의 운영 문제(부산시, 각 구·군, 교육청, 사립)에 있다.

2018년 즈음, 공공도서관과 도시재생에 대한 모범사례를 찾고자 타 시의 도시재생과에 문의한 적이 있다. 그 담당자는 공공도서관이 무슨 도시재생과 관련 있느냐며 되물어왔다. 이러하듯이, 공공도서관을 지역의 주요 이슈와 발전에 무관한 이해(!!)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용자의 인식은 무료로 책을 빌려보고, 각종 시험을 위한 공부방,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시설에 머물러 있으며, 도서관계 및 교육청·정책입안자의 인식도 이와 비슷하다.

표 2. 부산의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도서관의 현황

지역	부산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공공도서관 ※ 대표(부산도서관, 사상구)				인구 수 (2021. 01. 기준)
	2017	2018	2019	도서관명(설립)		1관당 인구수		
전체	2.97	3.1	3.6	지자체	교육청	47	73,101	3,435,787
중구	13.57	11.7	16.7		중앙(1990)	1	43,657	43,657
서구	4.54	4.5	6.5		구덕(1978)	1	109,876	109,876
동구	4.5	4.6	9.1	동구(1998)/ 동구어린이영어(2019)	중앙 수정분관(1999)	3	30,301	90,905
영도구	5.67	5.8	6.9	영도(1996)/ 영도어린이영어(2009)		2	57,422	114,844
부산진구	2.42	2.5	3.1	진구어린이청소년(2016)	시민(1901)/부전(1982)/ 중앙 분관 부산영어 (2009)	4	90,693	362,772
동래구	2.96	3	2.9	동래읍성(2015)/안락누리(2016)	명장(1994)	3	90,639	271,917
남구	3.65	3.9	4.4	남구(1997)/분포(2018)		2	136,350	272,700
북구	2.97	3	3.4	만덕(2002)/화명(2010) /금곡(2016)	구포(1983)	5	57,157	285,787 ※사립_맨발 동무(2011)
해운대구	2.43	2.9	3	반여(1999)/재송어린이(2006)/해 운대인문학(2018)	반송(1978)/해운대 우동 분관(1982)/해운대 (2010)	7	58,049	406,349 ※사립_느티 나무(2007)
사하구	1.8	1.8	2.2	다대(2010)	사하(1984)	2	157,744	315,489
금정구	3.27	3.7	3.8	금정(1996)	서동(1983)	2	117,832	235,664
강서구	2.56	3.3	3.1	강서(1998)/강서기적의(2018)		2	71,673	143,347
연제구	1.93	1.9	1.9	연제(2014)	연산(1987)	2	104,928	209,856
수영구	1.67	1.7	2.8	수영구(2002)/ 수영구 맘미분관(2009)		2	89,220	178,441
사상구	1.75	1.8	2.3	사상(2003)/부산(2020)		2	108,339	216,678
기장군	4.33	4.2	4.2	기장(2003)/기장디지털(2015)/정관 (2015)/정관어린이(2015)/대라다목 적(2016)/고촌어울림(2020)/내리 새라(2020)		7	25,357	177,505

주: 출처_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은 1994년 이전까지 교육청이 11개관을 운영하였고, 1995년 부산광역시 승격 후 1996년 영도·금정 도서관 설립을 시작으로 지자체 운영의 도서관 설립이 활성화되었다.

한편, 1919년 부산부가 부산교육회가 운영하던 도서관을 1911년부터 이관받아 무료 도서관 서비스를 시작¹⁾. 광복 후 부산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은 1964년부터 부산교육청의 감독하에 1978년까지 운영되었다. 지금은 <표 2>와 같이 47개관이 지자체(시, 구, 군 운영)와 교육청이라는 운영 주체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서관의 역사성과 운영의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 나아가 지역발전 기여에 소통과 연대·협력이 미흡하다. 뉴노멀에서 생활문화권의 도서관은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로 하나의 지역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지식문화서비스 영역이 확장되었으니, 지역문화기반시설들과 서비스 중복 지양 및 차별화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생활문화권에서 도서관의 지속 운영에 필요한 지원

생활문화권에서 도서관의 지속 운영에 필요한 지원은 먼저, 지역의 지식정보 생산물·출판물이 생활문화권 내 공공도서관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3>과 같이 공공도서관에 계속 집적된 지역의 지식문화가 축적, 가공,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정주성도 향상시켜야 한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슬세권에 위치하도록 지역도서관에서 마을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범적인 사례로는 서울 은평구립도서관마을이고, 우리 가까이에는 보수동헌책방골목이 보수동책마을로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기록관·박물관(LAM, 라키비움)이 다양한 수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정체성 및 매력을 높여 지역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지식문화유산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문화를 진흥시켜야 한다.

표 3. 중구 중앙도서관의 지역관련자료 발간 현황(1999-2017)

연도	내사랑부산자료모음집	연도	내사랑부산자료모음집
1999	1호_부산의 위치, 기후, 상징, 역사 등	2008~2010	---
2000	2호_부산의 지명 유래, 동명 유래	2011	10호_(옛사진으로 답사하는)근대 부산 100년
2001	3호_부산의 상징물과 자연	2012	11호_부산근대지도 모음집
2002	4호_부산의 문화재 I	2013	12호_한 권으로 정리한 부산시·부산교육 연표
2003	5호_부산의 문화재 II	2014	13호_부산의 밥상 '가정에서 이어오는 맛'
2004	6호_부산의 축제	2015	14호_사진으로 보는 부산의 근대건축
2005	7호_역사 속의 부산 인물들	2016	15호_사진과 신문으로 보는 피란수도 부산 1023
2006	8호_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 I	2017	16호_2017 부산의 전시공간, * 이후 사업 종료
2007	9호_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 II		

1) 김경희, 근대 부산 교육과 도서관,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항도부산」, 2021. 08. 도서관은 근대문물로 일본홍도회부산지회에 의해 1901년 現 중구 광복중앙로(옛 변천정)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1903년 국내 첫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부산도서관」이라 칭하였고, 1911년 부산교육회가 이를 계승해 194계단 옆 체육공원에 도서관을 신축하였다.

생활문화권에서 도서관의 존재이유를 강화시킬 특화전략

생활문화권에서 도서관의 존재이유를 강화시킬 특화(Specialization)전략은 지역 특성 및 도서관 현황 등을 수렴한 각각 도서관의 특성화(특성화, Characterizations)를 통해 가능하다. 부산은 <표 4>와 같이 전국 공공도서관 중 지역단위로 특성화를 1998년부터 선진적으로 운영해왔다. 지역의 120년 지식문화자산을 특성화해 지역출판사와 '지역 작가 릴레이 북토크'로 특화한 시민도서관,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특성화해 자유학기제 청소년 지원을 위한 '부산 원도심의 재발견'으로 특화한 중앙도서관, 지역의 사회경제자산을 특성화해 도서관 건축과 '부전학당'으로 특화한 부전도서관 등 20여 년 특성화 공과를 공유·확산하고, 1관 1특화 도서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단기·중장기전략을 수립하면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향상할 것이다.

표 4. 부산의 공공도서관 특성화 등장 및 현황

도서관	추진사업(1998)	분담수서(2000)	현재 특성화	추가된 특성화
시민	고문헌, 논문자료실 운영	예술	고문헌/논문/다문화	어린이영어(해운대)
중앙	향토자료실 운영	총류(정보학)	부산자료	육아(강서지역적)
부전	진학지도정보실 운영	교육학	금융정보	정보화(가장디지털)
반송	사학(역사류)자료실 운영	사학(역사)	사학/역사	청소년(대라다목적)
해운대	관광여행정보관 운영	관광·여행	관광/여행	영어(동구어린이)
구덕	건강자료실 운영	의학	건강	유아/어린이(재송)
서동	환경자료실 운영	공학, 공업일반(530)	환경	인문학(해운대인문학)
구포	공업자료실 운영	공업(540-580)	유아/어린이	정보학(만덕)
사하	취업정보자료실 운영	취업정보	취업정보	영어도서(사상)
연산	해양자료코너 운영	철학·종교	해양/수산	인문/고전(수영구)
명장	비도서 및 영상자료실 운영	비도서·영상자료	전자자료	노인(화명)
기장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	농업/원예	부산관련자료(부산)
금정	--	어학	다문화	
남구	--	경제학·행정학	청소년	
영도	--	지학, 농학, 공학, 기계	해양수산	
동구	--	민속, 통속학	레저 스포츠	
강서	--	동물학·식물학	농업	
반여	--	소설(추리)	어린이그림책	

주: 김경희, 지역교육 기여를 위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특성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부산연구」, 2020. 06. 재구성함. 위 연구를 진행할 당시는 46개 공공도서관 중 29개관이 특성화를 표방하고 있었다. 도서관 홈페이지 및 특성화 관련 담당자와 전화인터뷰 등을 통한 조사결과,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 외 금정·대라다목적 도서관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고, 이후 부산도서관이 2020년 11월 사상구에 부산의 대표도서관으로 개관하면서 '부산관련자료' 특성화가 추가되었다.

생활문화권에서 도서관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법

생활문화권에서 도서관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역사 동안 축적해온 지식정보와 지역관련 리더 러시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핵심 앵커시설이 되어야 한다(예.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이를 위해 지역 이슈·과제 및 도서관 연구와 조사를 상시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신뢰·소통으로 동행해가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팍세권·슬세권·육세권’ 등 요즘 나온 ‘○세권’이라는 용어를 정리해서 보도했다.

몇 가지를 보면, ‘역세권’은 지하철역이 대략 반경 500m 이내, 도보 7~8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데, 이는 대부분 알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육을 먹었으나 나중에는 인근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단지가 된다는 ‘육세권’은 처음 듣는 말이다. 이런 말이 생기는 것은 우리 삶의 편리와 경제적 논리에 몸과 마음이 쉼 없이 움직이니까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한다. 또 공원(PARK)을 근처에 두고 있는 ‘팍세권’, 스타벅스가 근처에 있는 ‘스세권’이다. 은행, 행정기관이 가까운 지역인 ‘행세권’, 백화점, 마트, 복합쇼핑몰이 가까이 있는 ‘몰세권’도 있다. 이 외에 ‘숲세권’, ‘쿠세권’, ‘씩세권’, ‘컬세권’, ‘다세권’, ‘옆세권’ 등 다양한 말들도 생겼다. 필자가 간혹 사용하는 ‘슬세권’도 있다. 슬리퍼 신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다 있는 곳을 ‘슬세권’이라 한다. 대부분 육체적, 물질적, 경제적 편리에 생겼다면 유독 문화적 충족을 위한 ‘세권’이라 생각이 들어서다.

‘○세권’이면 뭐하랴. 수도권이 아니면 그림에 떡이다. 고령화·인구유출이 가속화 된다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은 수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닥쳤다. 정부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하고 지원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막연한 불안이 아닌 현실로 닥쳐왔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 국토연구원은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 인구의 지역적 편재로 지방의 자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무엇보다 연령별로는 수도권 유입 인구의 4분의 3 이상을 20대가 차지한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부산의 동구, 서구, 영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부산도 소멸 지구에 들어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생긴지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중앙정부 사무기관 400여개가 지방 정부로 일괄 이양되었고, 이제 자치분권 2.0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지역소멸 문제는 차기 지방정부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그럼, 문화예술인은 지방 정부 핵심과제의 안정된 안착을 위해 무엇을 하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큰 과제에 작은 답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존속근린, 준한계근린, 한계근린 등 근린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전략을 국토연구원(2018)이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지속적 거주를 위해 최저수준 이상의 삶의 질 유지 및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거주민들의 지속적 거주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생활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일명 슬세권이다. 중소도시 또는 마을에서 편리한 문화복지를 누리게 한다면 정주의식은 향상 될 것이다. 슬리퍼를 신고 인근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를 드리는 여유를 가진다면, 이것만한 정신적 문화향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속적 거주 보장을 위한 문화생활서비스의 하나인 작은 미술관을 더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정책의 중심분야에 힘을 기우려도 바쁠 시기에 왜 미술관, 그것도 작은 미술관이 왜 필요한가에 관한 질문이 생긴다. 지방자치는 주민 행복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을 내리면서 정부지원 현황과 지자체의 필요성을 보자.

우선, 우리가 미술품을 본다는 것은 ‘어디서’라는 장소와 어떤 미술이라는 ‘내용’이 공존하다. 장소적 측면에서는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갤러리·화랑, 전시실 등의 전시작품과 공원이나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과 건축물미술작품 외에도 감천문화마을, 영도 흰여울문화마을, 닥밭골벽화마을 등 다양한 곳에서 조형물, 벽화작품을 만날 수 있다. 내용으로 접근하면 장소적 측면이 불편을 가져온다. 사실화, 추상화, 벽화 등 어떤 내용 이든 미술과 친해지고 싶은데, 미술관과 같은 특정장소까지 가야만 미술품을 만날 수 있는 불편함이다. ‘○세권’이라는 단어의 친근성은 나와 5분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도 만찬가지다. 예술이 “~ 이런 것이다.”는 특징인이 향유하고 주장하는 예술 이야기는 이제 통설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슬세권에 미술관이 필요한 이유다.

작은 미술관 지원 사례를 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15년부터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은 미술관은 지역의 공공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미술 공간으로서, 전시와 교육, 주민 참여 창작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공간이다.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공공유휴공간과 기존 전시시설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운영 하도록 지원하여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시각예술향유기회를 확대하자는데 사업의 목적이다. 공공유휴공간이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공간으로 민간 소유 유휴공간은 제외되며, 신규 작은 미술관 조성비(공간 리모델링) 및 시설 관리 운영비는 공공기관의 자체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조성된 공간이 작지만 내실 있는 지역 내 공간으로 자리잡아 지속가능성을 갖도록 지속운영지원의 단계도 있다. 시설 운영뿐 아니라 지역미술관으로서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전시활성화지원 사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 문화소외지역의

일상 속에서, 생활밀착형으로 지역현장의 최전방에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게 되는 지역의 공간조성에 그 의미는 크다. 현재 유희공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콘텐츠나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자치단체 기관들이 예술창작집단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 미술관은 사립미술관이나 비영리 전시공간처럼 민간 영역의 전시기획과 매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과 달리 공공공간과 민간 기획매개활동이란 양쪽의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시각문화예술의 전망을 타진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이는 지역의 예술매개주체를 위한 기회 부여, 예술단체들의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 미술이 특정 집단의 독점 대상이 아닌 삶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해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2021년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선정 현황(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

연번	지원유형	지역	작은 미술관 운영단체	비고
1	신규조성지원	전남 광양시	섬진강끝마을영농조합법인	신규
2	지속운영지원	경남 밀양군	대한스트릿컬처연맹	'20년 조성
3		전남 신안군	신안문화원	'20년 조성
4	전시활성화지원	경남 남해군	대안공간 마루	'15년 조성
5		강원 태백시	널티(NULL-TEA)	'18년 조성
6		강원 평창군	평창군문화예술재단	'18년 조성
7		세종시	세종시문화재단	'18년 조성
8		경기 김포시	김포문화재단	'17년 조성
9		울산시	북구예술창작소	'19년 첫 지원
10		울산시	울산광역시남구문화원	'20년 첫 지원
11		경남 하동군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	'20년 첫 지원
12		부산 동구	가치예술협동조합	'21년 첫 지원
13		전남 여수시	사)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	'21년 첫 지원
14		전북 전주시	문화적 도시재생 인디	'21년 첫 지원
15	제주 제주시	공간누보	'21년 첫 지원	

마지막으로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작은 미술관이 문화소외지역의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장소와 지원의 한계는 있다. 지자체 차원의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 작은 미술관의 공간과 전시 활동이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가능성과 의미가 크다. 지역의 공동체가 지역의 가장 생활밀착형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부분이다. 슬세권이든 내 생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생활과 밀착된 문화활동이다. 노인정, 작은도서관 등이 내 생활 환경에 있듯이 작은 미술관 역시 환경에 있어야 지역 주민과 시각문화예술의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문화는 예술 향유의 생산과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다. 이를 위해 친숙한 문화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친근감이다. 친근감은 상호 앎을 전제로 한다. 이때 앎은 고상하고 전문적인 지식 또는 유명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 마을에서 소통하고 있는 전문가가 기획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공유하며 지속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갤러리, 미술관, 아트페어 등 특정장소로 이어지는 문화활동을 소산시키는 것이다.

작은 미술관은 전시공간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미술을 경험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은 문화소비 공간이다. 작은 미술관을 통해 미술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예술로 물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향유하는 공간이다.

지자체에서는 작은 미술관이라 명명하지 않더라도 지역 전문가 또는 지역 공동체 기획 전시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첫째,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 기관운영 공간 활용. 둘째, 지역의 기존 사립 갤러리·화랑 연계. 셋째, 마을공원 활용. 넷째, 빈집이나 유희공간 활용 등을 이용한 작은 미술관 형태의 지원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 지원이 되어야만 한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7:3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뼈뺀 지자체 예산으로 이를 위한 출현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작은 미술관은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임은 자명하다.

작은 미술관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다시해도 지방자치는 주민 행복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정책의 고민하기에 작은 미술관은 지역의 문화예술 복지를 위한, 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지역분권, 문화자치의 토양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지만 토양의 밑그림이 되길 기대한다.

예술+ ?

예술+동행

우물과 공동체

전미경
푸조와공술
대표

2015년 문체부 문화마을 사업으로 진행된 <수영성 문화마을> 조성은 지역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에서 각자 문화를 만들거나 끼리 문화를 즐기던 사람들이 모여 지역 자산을 발굴하고 마을 잡지 푸조와 공술을 발행하며 동네 사람들은 스스로가 문화생산자임과 동시에 문화 소비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동네 사람들이 '문화'라는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3년 간의 시간을 부대끼 후 만들어 낸 공간이 [수영성마을박물관]이다. 구유지인 박물관 건물을 주민공동체가 위탁 운영하는 것부터 난관이 많았다.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했고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은 관치에서 협치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수영구 주민생활사 박물관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으며 자치로 나아가는 중이다. 동네 주민들이 오랜 세월 써온 물건들과 추억을 담은 사진, 이야기로 채워 넣으며 동네 작은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수도시설이 완비된 시대에 우물은 어떤 가치로 우리 곁에 남아있을까? 형태만 남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정겨운 곳으로 다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물제를 열고 우물 조사와 지도 만들기 등의 자료수집을 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우물은 지금도 소중한 공동체의 자산임을 증명하였다. 마을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온 정서적 유대감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치다.

수영성마을박물관은 마을에 있는 우물이다. 전시관에 있는 물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의 시간과 화단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꽃과 파라솔이 펼쳐진 탁자, 옹기종기 해바라기 나오신 어르신들, 물오징어 파는 트럭에서 나오는 비릿한 냄새까지 모두 수영성 마을박물관을 만드는 요소다.

마을공동체의 지속성이 구성원들의 노고를 담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지역 문화를 지켜나가는 마을 단위의 박물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기이다. 마을공동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파악하여 제안하고 실행하는 일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수영성 박물관 건물 외벽

수영동은 조선시대 동·남해안을 관할하던 군영인 경상좌수영이 243년간 있었던 곳이다. 군제 개혁으로 군영의 기능을 상실한 후 지역민에게는 역사적으로는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어왔다. 이곳에 통일신라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하고 보존하는 일이 타 지역의 높아져가는 집값과 비교되어 지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좁은 골목, 정돈되지 않은 길과 어두운 거리는 문화와 거리가 멀었다. 이런 연유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일원화 되지 못한 탓에 성과는 적었다. 중앙정부의 문화 사업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지역민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공동체 스스로가 고민하고 행동해서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문화자원의 협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공동체 실험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된 공동체 사업인 [우물에서 답을 찾다]를 소개한다.

커뮤니티 공간의 원형을 보여주는 '우물'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물을 나눠 먹는 일은 유대감을 키우고 함께하는 가치를 만들어낸다. 또한 우물 터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기에 물건을 주고받거나 소식을 나누는 공간이었다.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 문화정책 계획인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4차 산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①개인의 자율성 보장, ②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③사회의 창의성 확신을 목표로 삼으며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7개의 대표과제와 186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지역 문화 분권 실현’을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 지역 문화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역 스스로가 문화를 통한 발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광역시 공공 공연장 실태파악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가 의미 있다.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으로의 전환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공공 공연장의 운영 현황을 시설 건립연도, 각 공연장별 주요 프로그램, 조직 인력, 재정 등을 통해 분석하며, 부산 내 공공 공연장의 자생력에 대해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 공공 공연장 실태파악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는 크게 국가의 문화정책 흐름, 부산의 문화예술 향유 일반 현황, 시민 대상 설문조사, 공공 공연장 세부 추진전략, 종사자 면접을 통해 부산 공공 공연장의 운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장과 2장은 공연장과 관련된 국내 문화정책 흐름과 국내외 공연장 운영 사례 연구를 통해, 동 연구를 실시한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례 연구가 개요 정리에서 그쳤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해당 파트에서는 각 공연장들의 운영 방식과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정책을 나열하고 있는데, 글의 흐름상 부산 지역에 참고하여 적용해볼만한 점들을 찾고자 했던 것 같다. 만약 각 사례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을 추출하거나, 시사점을 도출했다면 본 보고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입부에서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시민 대상 설문조사 및 부산지역 8개소(문예회관 6개소, 시민회관·문화회관 2개소) 공공 공연장 종사자 의견조사를 병행했다. 이를 통해 부산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량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공연장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현실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두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이 보고서가 꾸준히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다. ①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연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것. ②공연장 내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노후화된 시설 보완, 재정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한 공공 공연장 운영 효율성 재고. 이 두 가지는 결국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복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부산지역 공공 공연장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끝을 맺고 있다.

- 시·구별 문화회관 간 역할 분담
- 대관 중심에서 벗어난 기획 중심의 운영
-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전반적으로 다각도에서 조명해보고자 여러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점에 있어서는 충실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설명하는 방식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시민 대상 설문조사와 종사자 대상 면접조사의 경우가 그러하다.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서술보다, 중첩되는 중요 키워드를 추출하는 등의 시각화 자료를 활용했다면 동 연구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안해본다.

동 연구가 말하는 것처럼, 공공 공연장을 비롯해 지역에 존재하는 공연장들이 지속가능한 공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 간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장소에 대한 지역민의 기억 축적이 지역의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며, 그에 힘입어 다양한 예술장르가 오래도록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누구나가 편히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과 각 지역의 특성(인구 특성, 사회적 환경 등)을 반영한 공연 프로그램을 비롯한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 되는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의 공연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시점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이 디지털로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시기에, 공공 공연장을 어떻게 운영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 동 연구는 2020년 2월에 발간된 자료라, 코로나19가 변화시킨 문화예술 환경을 분석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후속연구로 디지털 시대에 공공 공연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1 ~ 12월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부산문화재단

일상으로의 초대, 감만상상페스티벌 <일상회복>(11.9)

(재)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수) 오는 11월 13일(토)~14일(일) 양일간 감만창의문화촌에서 2021년 감만상상페스티벌 <일상회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문화재단,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시작(11.29)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수)은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민간 소공연장에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과 커피도시 부산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11.30)

부산문화재단(대표 강동수)은 오는 12월 7일(화) 오후 3시 영도 무명일기에서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문화예술과 커피도시 부산의 연결 가능성]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연구개발 통합 추진·관리한다(11.9)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황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11월 9일(화), 통합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센터장 조기영, 이하 기술진흥센터)’를 출범했다.

2022년도 문체부 예산 7조 3,968억 원으로 확정(12.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022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3,96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6조 8,637억 원 대비 5,331억 원(7.8%) 증액된 규모로, 문체부 재정은 처음으로 7조 원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 코로나시기 공연예술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11.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11월 15일(월)부터 12월 10일(금)까지 2021년 코로나시기 공연예술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공모전은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공연예술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1 아코미술관 응복합 예술 페스티벌(11.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아코미술관(관장 임근혜)은 2021 아코미술관 응복합 예술 페스티벌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 연계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21년 11월 30일(화)과 12월 1일(수)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아코미술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경험, 감수성과 행복감으로 이어진다(12.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 이하 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효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2021 문화예술교육 효과 메타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0주년 기획워크숍 개최(1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 이하 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0주년 기획워크숍>이 12월 10일(금) 오후 2시 교육진흥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

금정문화재단

부산 예술강사 찾는다면, 금정문화재단 클릭(11.26)

(재)금정문화재단(이사장 정미영)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잇는 플랫폼인 ‘금정예술대학(www.gjartu.or.kr)’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만석초등학교와 공동으로 초등학생의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의 시간 마련(11.10)

(재)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오늘 16일 화요일부터 인천만석초등학교에서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시 <사랑과 자연의 하모니>를 개최한다. 본 전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하였다.

인천아트플랫폼, 새로운 공공예술 프로젝트 <유어 플랫폼, 유어 파크>개최(12.6)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은 공공예술 프로젝트 <유어 플랫폼, 유어 파크(Your Platform, Your Park)?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12월 7일(화)부터 개최한다.

#

제주문화예술재단

바쁜 일상을 예술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예술치유페스티벌주간 개최(11.3)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하 재단)은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예술공간 이아에서 예술치유페스티벌주간 “쉼, 예술을 숨쉬다”를 개최한다.

제주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두 번째 <마을 브랜드공연>(11.5)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하 재단)은 2021년 제주해녀문화예술지역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4건의 지원 사업에 대한 본 공연을 고내리, 대평리, 북촌리, 하도리 해녀마을에서 11월 내 추진한다.

#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축제 2021>개최(11.5)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했던 <서울거리예술축제 2021>가 오는 10일(수)부터 14일(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재개된다.

홍대 앞 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한 온라인 토크쇼·포럼 개최(11.16)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교예술실험센터는 홍대 앞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 인디음악 온라인 토크쇼 <이래도 '인디'하고 싶어?>(11월 17일)와 지역 네트워크 포럼 <서교, 오늘>(11월 29일)을 개최한다.

#

부산연구원

세계 음악축제 속 시그니처 문화공간 부산학포럼(11.26)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는 11월 29일(월) 오후 2시 부산연구원 9층 회의실에서 ‘세계 음악축제 속 시그니처 문화공간’이라는 주제로 부산학 포럼을 개최한다. 부산학연구센터는 지난해부터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방향을 확장하기 위해 마을학포럼을 부산학포럼으로 확대했다

강원문화재단

#

강원 콘텐츠산업 지역거점 정책 거버넌스 회의 개최(11.30)

(재)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위원장 홍지영)는 지난 29일(월) 춘천베어스호텔에서 ‘강원도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강원 콘텐츠산업 지역거점 정책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밤의 플랫폼>을 선보인다.

#

충북문화재단

‘충북생활문화예술박람회’ 성료(11.22)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은 「2021 예술동호회 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충북생활문화예술박람회>를 21일을 끝으로 성료했다고 밝혔다.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콘텐츠코리아랩 「2021 넥스트 콘텐츠 경남X」 개최(12.6)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 이하 진흥원)은 오는 11일 경남콘텐츠코리아랩에서 ‘2021 넥스트 콘텐츠 경남X’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울·경 문화재단 올해 두 번째 공동 정책포럼 개최(12.6)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 이하 진흥원)은 오는 12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예술인 권리보장과 예술가치 확산’을 주제로 부산문화재단, 울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일 2021. 12. 17. 발행인 강등수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5-7205~8 www.bscf.or.kr
편집위원 김경화 송교성 이지훈 편집기획 조정윤 김수정 디자인 제작 스토리진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